

인권하루소식

2001년 9월

(제1927호-제1947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9월 1일(토)

제 192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작업장감시 CCTV 철거요구 파업

(주)대용노조, 노동통제 강화수단에 제동

'도난 및 무단침입방지' 등을 명분으로 노동현장에 설치되고 있는 '기술적 수단에 의한 감시도구'에 맞서 한 노동조합이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전북 익산에 있는 (주)대용노동조합(위원장 박성준)이 첨단 감시도구인 CCTV 폐쇄를 요구하며 지난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주)대용 노조는 지난 7월 22일 민주노총 주최 '10만 조합원 상경투쟁'에 참가한 사이에 노조와 협의 없이 작업장에 설치한 6대의 CCTV 철거를 요구했으나, (주)대용(대표이사 정희철)이 응하지 않자 파업에 들어간 것. (주)대용노조는 "사측이 CCTV 철거를 요구하는 전북 지역의 민주세력까지 '회사를 용해하는 무리'라고 비난하고, CCTV로 인해 사표를 제출하는 등 조합원들의 고통이 잇달았다"고 파업이유를 밝혔다.

(주)대용노조가 지난 8일 실시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CCTV 때문에 긴장이 돼 목이 빠근하고 두통도 심해지고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며, △동료하고 얘기하기가 꺼려진다 등의 응답을 하고 있다. 특히 김 아무개 씨는 지난 7일 정신병원을 찾아 '급성 정신병적 장애로 추정되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주)대용노조는 또 "사측이 지난 해 10월부터 비조합원에게 디지털 녹음기를 지급해 작성된 조합원 일일동태 보고를 바탕으로 9명을 해고하기도 했다"며, "작업장 감시문제가 하루이틀 사이에 나온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설치된 CCTV를 보고 '△000가 CCTV를 몇 분간 쳐다봄, △000기계 작업자가 임의로 기계를 망가트려 피

해 심각' 등 기록을 해왔다고 밝히고, (주)대용이 '공고문' 등을 통해 "도난 방지, 작업장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다"고 발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주)대용에 대해 '조정종료'를 결정, 이번 (주)대용노조의 파업은 실정법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다. 또 (주)대용노조와 전북지역 대책위는 9월1일 익산노동사무소를 방문, (주)대용의 CCTV설치가 부당노동행위를 거듭 발원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대용은 120여명의 노동자 가운데 80여 명이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심보선]

(관련기사 2면 →)

〈논평〉 '노동통제 CCTV'를 철거하라

첨단감시시스템이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데 쓰이고 있다. 영상시스템, 위성 위치추적시스템, 생체인식기 등 그 종류와 범위는 다양하다. 더구나 업무용 개인컴퓨터, 전화 등에 대한 무단열람, 도·감청도 얼마든지 가능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노동자들이 감시당하고 있다.

(주)대용의 사례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감시시스템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감시·통제 수단으로 이용되는지 잘 보여준다. (주)대용은 노조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작업장에 설치된 CCTV를 토대로, '누가 몇 분간 00를 쳐다보고, 화장실을 몇 번 갔다왔는지까지 기록하고 있다. (주)대용의 CCTV는, 이렇게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심지어 어떤 노동자는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어떤 노동자는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했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감시시스템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를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지 않는다. '도난 예방, 시설 보호, 고객서비스 증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앞세운다. (주)대용도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 CCTV를 설치했다.

게다가 (주)대용은 지난해 이미 디지털 녹음기를 비조합원에게 지급, 노조원 일일동태보고를 기초로 노조원을 해고한 '전과'를 지니고 있음도 이번에 밝혀졌다. 또 7백도가 넘는 주물을 뒤집어 써 심한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CCTV를 통해 이런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주)대용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첨단 감시기술은 노동력을 팔아 생존해야 하는 노동자를 전천후로 감시해 '화장실에 가거나 담배 한 개피 피는 시간'마저도 쥐어짜는 데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주)대용 작업장에 설치된 CCTV를 노동자감시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주)대용의 노동자 감시는 중단돼야 하고, CCTV는 마땅히 철거해야 한다. 또 첨단기술을 이용한 '노동자 감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한다. 이번 (주)대용 노동조합의 파업이, 노동현장에 도입되는 다종다양한 감시시스템의 반인권성을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해외소식>

십년넘게 계속되는 아체의 비극

십여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인권침해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수마트라 섬 북쪽 끝에 위치한 아체에서는 지난 89년 이래 6천여 명의 사상자와 15만 명 이상의 난민을 남긴채 분리독립 운동가들과 인도네시아 경찰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무장독립 투쟁은 89년 수하르토에 의한 아체주 군사작전지역 선포, 동티모르의 독립운동으로 더욱 격화되었고 그에 따라 살인, 방화, 성폭력, 고문, 협박, 유괴, 납치 등 인권을 유린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범죄가 사법적 단죄 없이 자행되어 왔다.

아체의 분리독립운동은 다른 지방의 독립운동과는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다. 아체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과 같이 17세기 이래 네덜란드 식민지배에서 독립투쟁을 벌여왔다. 아체가 독립을 원하는 이유는 석유와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서 찾을 수 있다. 아체는 인도네시아 전체 석유 천연가스 수출의 1/3, 석유의 1/5을 공급하고 있다. 인구 약 4백만의 아체주(전체 인구의 2%)가 중앙정부예산의 13%를 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체에게 돌아오는 것은 5%남짓의 지방세뿐이다. 게다가 분리독립 운동을 이끌고 있는 자유아체운동(GAM, Gerakan Aceh Merdeka)은 아체인들에게 아체가 역사적으로 독립된 왕국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아체운동 측과 인도네시아 군경의 계속된 갈등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발표된 Human Rights Watch 보고서는 아체 반군과 인도네시아 정부 모두에 인권침해 책임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체에서 반군과 정부군 모두 제복을 입지 않고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활동을 한다. 따라서 양측은 자신들의 범죄를 민간인의 소행으로 위장하거나 대원들의 피해를 상대방에 의한 민간인 학대로 비난하는 것. 또한 양측 모두 폭력배나 다름없는 사람들을 정보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군 정보원으로 알려진 압폰 타이브는 2000년 12월에 발생했던 고문살해 사건의 용의자이며, 자유아체운동 측 정보원들은 민간인 착취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많은 NGO들은 밝히고 있다. 또한 상호간의 살해와 보복은 끝없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 8월 초 아체 한 마을에서 인도네시아 경찰관의 부인이 살해되자, 경찰은 그 마을 주민 2명을 사살하고 1백여 개의 가옥과 상점을 불태웠다. 메가와티가 대통령선서를 할 당시에도 인도네시아 군경은 자유아체운동이나 SIRA(Sentral Informasi Referendum Ache, 아체주민투표중앙정보소) 관련자를 색출, 재판도 없이 처형하기도 했다.

Human Rights Watch 등 여러 인권단체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위법행위 중단과 국제인권조약 존중,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등 기초적 인권보장, 아체주민 피해사례와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및 인권법정 설립들을 촉구하는 한편, 자유아체운동 측에도 민간인 및 비전투원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수영]

“사찰요원 이대식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나라’, 국정원에 공개질의서 접수

민가협, 민예총 등 31개 인권·예술단체들이 노래단체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정보원(원장 신건)의 불법사찰을 규탄했다<인권하루소식 8월 30일자 참조>. 이들은 31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식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이대식 및 관련자를 당장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민가협 임기란 상임의장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독재정권 시절부터 계속 이어져왔다”며, “이는 매우 비열하고 못된 짓”이라고 분노를 표현했다. ‘우리나라’ 감상구 대표는 창작을 위해 사색과 고민을 해야 하는 시간에, “이대식이 누구인지 추적하는 ‘수사’를 벌여야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강 대표는 또 “불법사찰을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승교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사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찰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대식이)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면, 왜 자신의 신분을 숨겼겠는가?”하고 반문했다. 민간사찰은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뜻.

‘우리나라’는 민가협 회원들과 함께 국정원에 도착, 오후 1시 40분경 신건 국정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접수했다. 공개질의서에는 ‘이대식 사건의 경위, 사찰의 이유, 사찰의 법적 근거 등을 묻고 있다.

한편 국정원 공보관실 김영진 씨는 “국정원 직원의 신분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대식 씨가 국정원 소속인지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또 사찰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밝혔다.

국정원법 3조는 ‘국외정보 및 국내안보정보(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①항의 1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범용]

노동자 감시 시스템이란?

발달된 영상,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 개인의 노조활동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감시시스템에는 영상시스템(CCTV, 몰래카메라), 위성 위치추적시스템(GPS), 전자카드(IC칩 카드, RF 액티브 배지), 생체인식기(지문, 눈동자 홍채, 정맥인식기)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업무용 개인 컴퓨터·전화 등에 대한 무단열람, 도·감청도 늘고 있으며, 생산자동화시스템(ERP, DAS)도 노동자 감시를 위한 시스템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ILO는 96년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정보는 반드시 작업과 관련된 범주에서만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노동자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9월 4일(화)

제 192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의문사 김준배씨, “경찰구타 있었다”

사건지휘검사에 동행명령장, 구타경찰 고발검토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망 과정에 경찰의 구타사실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또 당시 사건을 지휘한 정윤기 검사(현재 춘천지검 영월지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의문사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3일 오전 10시 ‘김준배 씨 사망사건 중간보고서’에서, 김 씨는 “3층 중간까지 내려와 화단으로 뛰어 내리거나 떨어진 뒤 경찰에 의해 구타를 당했다”며 “지금까지는 이 같은 추락과 폭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애초 검경이 발표한 대로 단순추락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김 씨를 구타한 혐의로 당시 형사기동대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의문사상규명위 김형태 상임위원은 단순추락사로 보기 어려운 근거로 △케이블선에 대한 국과수 감청결과와 아파트 벽면에 남아있는 김 씨의 발자국에 대한 케이블회사 직원진술, △김 씨의 옷에 묻은 신발자국 추정사진과 일치하는 상흔, △우심방파열이라는 직접사인이 추락이나 구타 모두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외상학회 등의 소견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사건의 직접 목격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유가족이 제기한 경찰 구타의혹을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 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중간보고서는 주민 2명이 화단 위로 떨어진 김 씨에 대해 “제일 먼저 화단 위로 뛰어 올라온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몇차례 발로 밟고, 들고 있던 봉으로 2~3회 구타”했다는 진술을 소개하고 있다. 위원회는 구타 사실을 부인하는 경찰당사자와 다른 경찰들의 현장상황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준배 변사 사건보고 △1·2차 현장검증결과보고 △종합수사 보고서 등에 작성자의 서명날인 및 지휘체통의 결재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위원회는 또 최초목격자에 대해 “경찰이 전화를 걸어 ‘김준배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를 물었을 뿐, 구타여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정 검사는 3일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출석요구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에서 “추락에 의한 사고사임이 명백했고 타살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 지휘했다”며, “김 씨 사망과 관련이 없는 변사사건 지휘검사로서(위원회)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최초목격자를 조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찰이 전화로 ‘추락사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내가 직접 목격자의 어머니로부터 목격자에게 전해들은(위 취지의) 말을 전해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유가족이 제기한 경찰 구타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폭행사실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보선]

‘프락치’의 뒷에 걸린 김준배 씨

의문사상규명위는 ‘김준배 씨 사망사건규명’에 대한 중간보고서에서 경찰이 김 씨의 선후배들을 돈으로 매수, ‘프락치’로 이용한 사실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당시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A씨가 김 씨의 대학후배 B(당시 25세)와 선배 C(당시 30세)에게 김 씨가 있는 곳을 알기 위해 식사비, 술값 등으로 5백만원~1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A씨가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B, C 씨도 “김 씨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1천3백만~1천5백만원의 돈을 받기로 약속 받은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당시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장은 “A가 B에게 선불조로 5백만원 정도 돈을 줬다”고 했고 위원회에 진술하기도 했다.

A는 97년 6~7월경 홍00 씨에게 김 씨의 대학선배 C를 소개받았고, C는 97년 7~8월경 김 씨의 대학후배 B를 A에게 소개했다. B는 97년 8월말 김 씨의 친한 친구를 찾아가 김 씨가 조선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직접 김 씨를 찾아가 추석 때 자신이 생활하던 청암아파트 1308호로 오라고 ‘유인’했다. 김 씨는 97년 9월 13일 B를 만나 사망할 때까지 청암아파트 1308호에서 머물렀다. B는 97년 9월 15일 밤 8시경 A를 만나 김 씨의 위치를 알려주고, 팜바다에 그림을 그려 아파트 구조에 대해 설명해주기도 했다.

‘프락치’로 이용된 이들은 지난 7월 김 씨의 아버지 김현국(66, 전남 장흥) 씨를 찾아가, 양심선언을 통해 프락치 공작에 이용된 전모를 밝혀줬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김준배 열사 추모사업회’ 등이 연락을 시도해도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보선]

◎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뻔뻔한 퀴어들의 두 번째 커밍아웃

"그래, 나 변태다. 어쩔래?"

뻔뻔한 호모들이 드디어 거리로 나선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홍익대학교 주변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1'이 바로 그 무대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는 "우리는 성적 취향만 다를 뿐 이성애자들과 다름없는 시민"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발칙하게도 이성애자와 다른 '차이'를 꺼내서 떠들고, 전시한다. 성 정체성이 다른 만큼 사는 방식도, 즐기는 문화도 다를 수밖에 없으며, 다르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힘이라고 퀴어문화축제는 이야기한다.

퀴어(queer)는 남녀 동성애자를 포함해서 이성에 제도에서 소외된 성적 소수자들을 포함한 개념이다. 성적 소수자들을 굳이 '이성애'의 잣대에 따라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을 굳이 나누지 않고, 이성애제도의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퀴어로 묶는 것이다. 퀴어들은 사회가 그어놓은 정상성의 금을 의심하며,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가로지르는 삶을 꿈꾸고 기획한다. 그 문화적 표현인 퀴어문화제는 "때론 엽기적으로, 때론 고급스럽게, 때론 급진적으로, 때론 유치하게"라는 퀴어적 감수성 안에서 "우리 행복합니다. 우리 유쾌한 퀴어입니다"라고 고백한다.

90년대 중반, 한국에서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커밍아웃한 뒤, 동성애자들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의 전술에서 "성적 지향성만 빼면 정상 시민"이라는 뉘앙스가 풍겨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더 이상 동성애자들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차이를 덮어두고 모른 척하지 않는다. 정상성의 감박을 벗어날 수 없는 한, 동성애는 언제나 이성에 제도의 거울로, 그림자로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차이'를 주장하는 퀴어들은 내부의 차이에 눈감지 않는다. 게이와 레즈비언의 차이를 외면하지 않고, 중산층 게이와 노동계급 게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10대 레즈비언과 성인 레즈비언 사이의 세대차이를 직시한다. 성적 소수자 내부의 차이를 덮어두면 힘있는 다수인 중산층 게이 파시즘으로 전화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차이를 힘으로 여기는 차이의 정치화 반대편에는 근본주의가 버티고 있다. "고향은 어디냐?"에 따라 나뉘는 지역 근본주의,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른 학벌 근본주의, "몇살이냐"가 위계를 결정하는 나이 근본주의... 한국은 어쩌면 한가지 근본주의 지배하지는 않지만, 여러 근본주의들이 암암리에 횡횡하는 사회다. 이 사회는 전근대적 잣대에 따라 갈갈이 나뉘고, 서로를 짓밟으려 한다. 이처럼 근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다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왕따 당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차이가 소통을 통해 공명하고 어울림을 만들어낼 때까지, 뻔뻔한 퀴어들은 유쾌한 수다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한겨레21 기자>

주간인권호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1. 국가보안법, 그 고리를 끊자!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9기 한총련은 강령 바꿨어도 여전히 이적단체" (8.30) / 토마스 허바드 신임 주한 미 대사, "국가보안법 개폐환영" (8.30) / 조선일보, 허바드 신임대사의 보안법 발언에 '한국을 더 알고 말하라'고 요구 (9.1)

2. 주5일 근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동유연화'
노동부, 주5일 근무제 내년 강행 방침 (8.27) / 경총, 공무원·금융보험·대기업 주5일 근무제 합의 사실무근 주장 (8.29) / 한국노총,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주장 (8.29) / 주5일 근무제 도입, 노사정 공익위원안 최종 마련 (9.2)

3. 지금도 공안기관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국정원 수사요원, 노래단체 '우리나라'에 불법사찰하다 불잡혀 (8.27) / 31개 인권예술포럼, 국정원 민간사찰 규탄 기자회견 (8.31)

4. 임동원 장관 책임을 둘러싼 '정치 광란극'
자민련, 임장관 자진사퇴 촉구 (8.27) / 6·15 남측본부, 남남갈등 왜곡보도 유감 표명 (8.27) / 북한 민화협, 8·15 공동보도문 이행 실무협의 제안 (8.28) / 범민련 남측본부, "평양축전 참가자 구속은 6·15 선언 위배" (8.29) / 6·15 남측본부, 9월 12일로 실무협의 하자고 북에 답신 (8.30) / 7대종단, 임장관 해임요구 부당 천명 (8.31) / 북, 당국간 대화재개 제의 (9.2) / 국회, 임장관 해임안 가결 (9.3)

5.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명단공개
청소년보호위,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169명 명단 공개 (8.30) / 서울지법 (윤남근 판사), 대가성 없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와 성관계 맺은 강씨 무죄 판결 (8.31)

6.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정년정상회의, 이-팔 문제와 인도의 카스트 문제 부각 (8.26) / 인종차별철폐대회 개막, 시오니즘과 흑인노예 배상 문제 접제한 대립 (8.31) / 인종차별철폐대회, 서방 국가 정상들 참석 안 해 (8.31) / 민간단체인권포럼, 이스라엘을 인종차별국가로 규정 (9.1)

◎ 기탁
경기 파주 주민의 탱크 저지 시위, "탱크로 주민들을 죽여도 책임이 없다"는 미군의 발언에 사과요구 (8.28) / 민주화보상위, 김세진·조성만 등 민주화운동 인정 (8.28) / 대용노조, CCTV 철거 요구 파업 돌입 (8.28) / 민주노동당, 경영참가법 국회 입법청원 (8.29) / 장애인이동권연대, 이동권 보장 요구하며 버스 점거농성 (8.29) /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 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적절한 배상 강력히 권고 (8.3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9월 5일(수)

제 192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구타 은폐, 프락치공작 전모공개 요구

경찰청 항의방문, 공개서한 전달

'김준배 씨 사망사건'의 경찰 구타 및 축소·은폐의혹을 밝히려는 요구가 4일에도 이어졌다. 당시 김 씨 사망사건 수사에서 구타 목격자의 증언 및 유가족의 구타의혹을 무시하고 서둘러 단순추락사로 발표한 검찰에 대한 항의표시로 지난 3일 검찰청을 항의방문 한 데 이어, 4일에는 경찰청 (청장 이무영)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통일광장, 한총련 학생 등 80여 명은 이날 오후 3시 5호선 서대문역 출정로 우체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의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김 씨가 한총련 중앙집행부 투쟁국장으로서 일하던 97년 당시 한총련의장이었던 강위원 씨는 김 씨 사망에 대해 "술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당시 내부에서마저 '이 의혹이 밝혀지겠느냐?'며 '재수 없는 죽음'이라고 자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그러나 "4년 만에 군화발로 짓밟고 곤봉으로 때 죽었다는 사실이 국가기관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사건을 종결짓지 못하는 것은 △경찰 당사자가 구타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당시 사건지휘경사가 출두를 거부한 채 축소·은폐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경찰·검찰의 태도를 소리높여 규탄했다.

집회 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대표단은 '김준배 열사 사건에 대한 경찰청 요구서한'을 경찰청에 접수하고, 오는 9월 12일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서한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 채 13층 아파트에 있는 사람 김

새로 나온 자료집

「사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자료집 I·II」

2001/사회권연대회의/560쪽·90쪽

지난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파업권의 제한, 과도한 사교육비, 열악한 주거환경 등 우리나라의 사회권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또 우리 정부에 사회권을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엄중한 권고가 뒤따랐다. 우리사회의 노동자, 서민, 사회적 약자들이 경험하는 생활의 빈곤과 불안이 인권침해로 규정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현실을 바로 알리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있었다. 민간단체들의 노력의 여정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자료집이 나왔다. 사회권연대회의가 제작한 두 권의 활동 자료집이 그것. 사회권연대회의는 민주노총, 민중의료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8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활동 자료집 I」은 민간단체들이 유엔에 제출한 자료 및 유엔이 발간한 자료를 총 망라한다. 유엔이 우리 정부에 보낸 질의 목록, 질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서부터 민간단체들이 유엔에 낸 보고서, 발표문 등 각종 자료들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 우리 정부 대표들과 사회권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쟁점을 두고 토론했는지 4월 30일, 5월 1일 스위스 제네바의 심사 회의 분위기도 녹취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심사의 결과 위원회가 발표한 최종견해를 찾아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자료집 가장 첫 부분에 실린 '사회권위원회 활동에 대한 NGO의 참여'는 말 그대로 사회권위원회 활동에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지침을 제공한다.

「활동 자료집 II」는 지난 1년 여 간의 민간단체들의 활동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함께 활동한 18개 민간단체 및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들의 주소록이 있는가하면, 언제 어떤 일이 진행됐는지 무슨 회의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모음은 유엔의 평가가 우리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되었는지를 낱낱이 보여준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마다 과거 기록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 자료집 두 권에는 그런 아쉬움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묻어있다. (문의 02-741-5363) (이주영)

거에 나선 경위 △떨어진 김 씨에 대해 응급처치를 해야할 경찰이 공동이와 발길질로 폭행하고, 이를 은폐하고 조작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연대는 또 △김 씨 사건에서 드러난 파렴치한 프락치 공작에 대한 사과하고 △당시 광범하게 자행된 프락치공작의 전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연대는 5일부터 김 씨 사망사건 지휘검사인 정윤기 검사(현재 춘천지검 영월지청장)가 근무하는 영월지청에 가서 정 검사의 의문사진상 규명위 출두를 요구할 계획이다.

(심보선)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② 과거 식민주의 높은 관심, 서방국가들 소극적 참여

유엔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이 모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정부간 회의가 지난달 31일 개막했다. 이번 대회를 개막하며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등은 "인간 존엄성에 대해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한다", "입으로만 논의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대회 논의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정부간 회의 참가단 면모를 살펴보면, 정상급 대표들은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데니스 싸쑤 은그웨소 콩고 대통령,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 주로 아프리카, 중동 지역 대표들이 참가했고 서방국가에서는 단 한 명도 정상급 대표가 참가하지 않았다. 특히 캐나다, 일본 등은 애초에 참가시키려고 했던 장관급 참가단을 차관급 수준으로 변경해 참가시켰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인도 카스트 문제, 과거 식민주의 문제 등으로 뜨거운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가 서방국가들의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감이 빠지고 있다.

지난 1일 폐막한 민간단체 포럼에서 시오니즘을 인종차별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간 회의를 폐막하며 채택할 선언에 대한 논의가 하루에 7~8조항 밖에 진행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식'(consensus) 조항 채택 회의를 하기 때문이다.

말로만 반성말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대회 진행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서방국가들과 이른바 제3세계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국가간의 갈등이다. 아프리카가 발언하면 서방국가들이 받아치는 회의 모양새가 되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발생했던 노예무역제도, 식민주의에 대한 인

종차별적 과오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공식적 사과나 선언문 채택·자국 역사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못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 보상·배상 문제는 오히려 큰 쟁점이 아니다. 회의 4일째인 9월 3일 현재까지 아프리카 국가들과 서방국가들 사이의 이러한 평행선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

또한 유럽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로마(집시)에 대한 차별·살인 문제,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유럽 대표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회의장 밖의 민간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식민주의 청산 문제와 이주노동자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다. 무라야 가오리 일본 외무성 차관은 9월 2일 정부 대표 발언에서 "일본 정부는 학생들에게 세계2차대전 야기한 인류에 대한 재앙에 관해 역사교육을 하고 있다"고 발언해 필리핀, 한국 등 민간단체들이 반발했다. 한국 민간단체 참가단은 3일 회의장 입구에서 일본정부에 대해 과거 식민주의 청산, 군국주의 정책포기, 전범 신사 참배 사과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일본 정부 발언에 앞서 한 명숙 여성부 장관도 한국 정부 대표 발언을 했다. 한 장관은 "여성에 대한 범죄를 없애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첫 걸음을 믿는다"며 "발칸 반도 지역에서 벌어졌던 여성에 대한 강간, 일본 제국주의 통치 당시 종군 위안부 문제 등 외부 세력 점령 당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많은 쟁점들과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21세기 첫 세계대회. 1만5천여 명의 정부·비정부 참가자들이 이러한

'매우 특별한 기회'를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매우 특별한 시작'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지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심태섭)

작업장 감시 CCTV 철거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진보넷 등

작업장 감시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주)대용노조를 인권단체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상업공동대표 김광수 등, 아래 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발표해, (주)대용에게 △CCTV를 철거하고 △CCTV에 대한 인권을 유린을 사과하고 △정신적·육체적 피해보상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당국에는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CCTV가 설치된 지 두 달여 동안, 한 노동자는 '긴장성 두통'과 '근육통'에 걸렸다고 밝혔고, 한 여성노동자는 알몸을 보이는 것 같은 '수치심'과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하나라는 '굴욕감'을 호소했으며, 다른 남성노동자는 '망상적 급성 정신병적 장애'로 추정된다고 진단까지 받았다고 CCTV의 후유증을 고발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대용노조는 CCTV의 즉각 철거를 주장하며 보충협약을 회사측에 6차례나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이는 익산 노동사무소가 내린 CCTV 철거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주)대용노조 파업에 공감하고 지지했으며, (주)대용에게 전근대적인 작업장 감시 정책을 중단하고 나아가 노조파괴책동을 그만두기를 엄숙하게 권고했다.

이에 앞서 진보네트워킹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은 3일 성명을 발표해, △노동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대용에게 요구했다. 이들도 CCTV를 즉각 철거하고 노동감시행위 일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9월 6일(목)

제 193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누가 레미콘 노동자 안동근을 죽였나?

5일 오전 7시 40분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 레미콘노조) 인천지부 안동근 사무처장은 서울대 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뒀다. 92년 9월 전국미스트러협회 창립, 94년 5월 불량레미콘폭로, 2000년 9월 레미콘노조 결성, 2001년 4월 운송노조 전면파업에 이르기까지, 레미콘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곳에는 항상 안 씨가 있었다. 레미콘노조 파업 150일째, 레미콘노조 유진지회 파업 200일째인 5일. 그는 파업의 끝을 보지 못한 채 레미콘 노동자를 위해 바쳤던 지난 10년의 생을 마감했다.

현재 그의 주검은 인천 가좌성모병원에 안치돼 있다. 동암역에서 마을버스로 10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의외로 인적이 드물었다. 가좌성모병원은 조용히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고, 고즈넉한 분위기는 레미콘 노동자들의 답답함을 그대로 느끼게 해 주었다.

병원입구에서 만난 서용호 부위원장은 계단에 앉아 담배 한 개피를 입에 물고 초점 없이 먼 하늘을 바라봤다. 이윽고 안 씨를 죽임으로 내몬 계기가 된 '3월 9일'을 시작으로 기막힌 자간의 사정을 풀어냈다.

용역강패 폭행과 투병생활

"그날 안 동지는 부천 유진지회 지원차 나왔어요. 당시 구사대와 용역강패들이 조합원들을 집단폭행했죠. 저도 안 동지랑 현장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중에 눈이 주먹만큼 붓고 가슴이 멍들고 온몸이 다 짓밟히다시피 해서 (용역강패에 의해) 들러나와 집어 던져졌죠. 거의 반죽음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경찰들한테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조합원

들이 맞고 있는 걸 뵈고만 있는 놈들한테..."

그때 지금 주검이 있는 가좌성모병원 입원했던 안 씨는 장에 땅이 들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질 파업투쟁을 병원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는지, 그는 상태가 다소 호전되자 바로 퇴원해, 4월 10일 집회의 사회까지 보면서 이번 파업투쟁을 손수 열어 줬었다.

레미콘노조의 파업이 끈질기게 장기화되듯, 폭행의 후유증도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녀 4월 하순 가좌성모병원에 또 입원했다. 이때 복수가 차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빼내고 간과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지경인데도 병명도 밝히지 않았다. 이후 인하대 병원을 거쳐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야 그의 병명은 단백질과 관련된 희귀병으로 판정됐다.

"없는 놈들은 하소연도 못한다"

"없는 놈들은 매맞아도 하소연할 곳도 없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레미콘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11명이 구속, 60명 불구속 그리고 300명 정도가 벌금형을 받았어요. 우리는 대화를 하지는 데, 저들은 돈과 힘으로 무조건 억압하죠." 서 부위원장의 이야기는 눈물만 없을 뿐이지 울분에 가까웠다.

"회사는 임금은 죽어도 못 올려주겠다면서, 한 사람 당 하루에 20만원씩이나 주며 용역강패를 고용해 폭력을 행사했어요. 정부는 노조필증을 내 줬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용자들 지도하거나 처벌할 생각은 안 합니다. 아무리 고소·고발을 해도 검찰은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

고..." 이때 서 부위원장은 다 피운 담배꽂이의 필터를 잘게잘게 찢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좋아요. 백 번 양보해서 구속, 벌금, 용역강패. 다 좋다고 합시다. 우리 다 처벌받았어요. 그런데 사용자들은 뭘니까? 불량레미콘, 불법매입에 고소고발을 솔하게 해도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시다. 있는 자들 논리 앞에 정부도, 법도 무기력하죠. 정말 썩어도 너무 많이 썩었어요.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코 잊지 못한다

김·경, 정치권의 목인 아래 '노조는 절대 인정 못한다'고 버티는 사용자 앞에서 노동자들의 투쟁도 힘겨울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많은 조합원들이 파업대오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부위원장은 단호히 말한다. "조합을 떠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끝까지 투쟁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접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존의 문제와 가족 때문이지요.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울분을 삭이면서 중간에 접는 동지들을 조합을 떠난 사람으로 보면 안 되죠."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먹고사는 문제를 무조건 도외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레미콘노조는 투쟁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에 따라 6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한다.

"어떤 식으로든 조합원들은 복귀할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끝까지 투쟁할 거예요. 조합원들은 150일이 넘는 파업을 쉽게 잊지는 못할 겁니다. 파업을 오래 끌면 노조가 와해될 것이라고 집착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서 부위원장의 약속은 7일 아침 발인을 하는 안동근 씨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에 충분한 듯 들렸다. (범용)

(→ 2면에 관련기사)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에 2명뿐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을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삼광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과정에서 입산부를 유산시키고 장애인을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힌 것은 정당성을 넘는 과잉진압이라며 김 모 씨 등 노조원 27명에게 각각 1백~4백만원씩 모두 4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삼광탄 사용 불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검증 등을 통해 "경찰특공대가 사용한 삼광탄은 175db 정도의 폭음(전폭기 이착륙시의 소음정도 약 160db정도)이 나고, 삼광탄의 불꽃으로 부근의 인화성이 있는 물질 등에 발화가 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밀폐된 공간에 투척되면 고도의 손상을 입거나 화상을 입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 1천여명 이상이 밀집돼 있고, 여성노조원이 60%이상이었던 점을 볼 때, 여러 발의 삼광탄을 투척할 경우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며, "삼광탄이 경찰특공대의 기본장비라고 해도, 삼광탄 사용은 그 정당성을 넘어서는 불법진압"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광탄 사용으로 당시 임신중이던 김 모 씨가 삼광탄 폭음과 연기 등으로 인해 심한 충격을 받아 자연유산의 한 원인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광탄 발화로 김 모 씨 등이 화상을 입고 △폭음으로 인해 유 모 씨 등의 고막이 파열되고 △장 모 씨 등이 폭발시 발생한 파편에 눈부위를 맞아 안구좌상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봉 사용 등 필요범위 넘었다

재판부는 또 "경찰봉, 방패 등으로 머리·안면·옆구리 등을 가격당하거나 찌혀 김 모 씨 등이 2주진단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특히 "변 모 씨가

진압을 당한 직후 장애인임을 알렸으나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가격함으로써 늑골골절을 입힌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머리, 얼굴 부위 등에 대한 가격어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이런 상해는 "부당한 경찰장비의 사용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초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노조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비디오 테이프 등의 검증결과를 볼 때 경찰들이 노조원을 일부 구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폭행이 가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법하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404명의 노조원 중 377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파업진압 자체는 위법 아니다

재판부는 또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이뤄진 롯데호텔 파업을 불법이고, 이를 진압한 것은 정당한 법집행행위"이며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는 점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호텔롯데 노동조합(위원장 정주억)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애절한 죽음

민주노총·건설연맹, 부당노동행위 근절 촉구

전국건설운송노조 인천지부 안동근(42) 사무처장 사망에 대해 민주노총과 전국건설연맹이 5일 성명을 통해 애도를 표시했다.

민주노총은 "안 조합원이 지난 3월 유진레미콘 부천공장에서 용역강제에게 끌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시름시름 앓다가 "오랜 파업으로 병병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조차 못하다가 단백질과 관련된 희귀병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가 눈을 감았다"며 "안 씨의 죽음은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한 건수만 2백여 건에 달하지만,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구속 11명, 불구속 60여명, 즉결 40여명, 용역강제 폭력으로 70여명이 병원에 입원한 것이었다"며, "안 씨를 죽음으로 몬 것은 이 나라의 노동정책과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형평을 잃은 법 집행"이라며,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용역강제의 폭력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건설노조연맹도 성명에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99년 450일간의 투쟁 중에 유명을 달리한 현대중기 노조의 육경원 동지와 김병관 동지를 되새긴다"며 "무조건적인 단체교섭 거부로 장기간의 파업투쟁과 노숙농성투쟁을 불려온 레미콘 사용주, 이 사태를 방치해 온 검찰·경찰·노동부 등은 이 죽음의 방조자로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보선)

은 지난해 6월 파업을 벌이다 같은 달 29일 경찰특공대 등에 강제해산됐다. 이에 노조원들은 지난해 8월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에 대해 11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판결에 대해 5일 "법의 이름으로 롯데파업 폭력진압의 부당함을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며, "경찰의 진압작전이나 경찰특공대 투입자체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고, "폭력사실 및 그로 인해 입은 피해를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소송절차 문제로 다수 부상자들의 소송이 기각된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소한 진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벌은 기소유에 처분 2명뿐

한편 호텔롯데 진압과 관련, 법원에 의해 일부 불법행위가 확인됐지만 진압에 참가한 경찰 중 의견 2명만 기소유에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경찰이 '호텔롯데 노조 파업진압에 대한 경찰 입장'이라는 글에서 "경찰봉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발길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라고 인정했는데도, 검찰은 "이들이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영창 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해 기소유에 처분했다. 또 이들의 경을 지휘한 경찰 삼급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9월 7일(금)

제 193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11월 10일, 교수노조 출범한다

교수 1만인 선언, 전국교수대회 추진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선언한 전공련에 이어, 교수들도 노동자이기를 스스로 선택했다. 6일 교수노조(준)(공동위원장 최갑수 등)은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오는 11월 10일 전국교수노조가 출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교수노조(준) 최갑수 공동위원장은 "법의노조라도 출범하는 것은 합법화를 위한 중요한 단초"라며, 교수노조 건설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교수노조(준)은 기자회견에서 대학은 "취업준비를 위한 값싼 취업기관"이 된 반면, "전박한 시장경쟁 논리와 아집에 사로잡힌 일부 관료"들과 "소유권 및 상업적 이익에 열안이 된 부패 사학재단들의 전횡이 지배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학민주화 운동은 "개별대학 중심으로 법적인 교섭권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평하고, 교수노조 출범은 "막강한 부패사학의 금력과 권력, 그 위에 군림하는 교육관료와 보수 정치권의 두터운 벽"을 넘는 새로운 차원의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노조(준)은 △국립대학발전계획 및 전문대학발전방안 철회 △사립학교법 개정 △교수계약제·연봉제 도입 중단 △공무원과 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반기 교육개혁 대투쟁을 전개하면서 교수노조를 출범시키고, 이후 교수1만인 선언, 전국교수대

회 등을 통해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학단협 정해구 운영위원장은 전교조의 경우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까지 무기력해진 사실을 지적하며, "교수노조는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 참가한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은 "공무

원 사회의 가장 큰 폐습도 소수가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다수가 이에 복종하는 것"이라며 교수노조의 출범을 당연시했다. 민주노총 신현훈 대외협력실장도 "민주노총도 교수노조 출범을 지지한다"며 적극적인 연대의사를 표시했다.

한편 교수노조 출범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행정지원과 김홍구 사무관은 "교수노조 허용 여부는 노사정위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교수노조의 결성은 현행법에 금지되어 있으므로 교수노조를 출범해 집회를 하는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범용)

만화사랑방

이동수



삼가 레미콘노동자 그 안동근님의 명복을 빌니다.

인권하루소식 창간 8주년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체쩍 덕택에 가능했던 8년의 세월입니다.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던 창간 정신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인권운동의 최전선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정혜주(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

건강권과 재산권에 대한 토론

지난 6월 20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역사적인 토론이 있었다. 원래는 2005-2006년으로 되어 있는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정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TRIPs Council에서, 건강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이다. 3달에 한번씩 열리기로 되어 있는 TRIPs Council의 4월 회의에서 아프리카 회원국의 전원발의를 통해 다음 회의에서 최빈국(最貧國) 민중들의 건강권과 이를 침해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논의하자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6월 20일 하루 종일 47개국 대표들의 연설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논의에서 지적재산의 권리가 민중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해 '미국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동의했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지구적 재앙

스와질랜드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의 전체 인구는 고작 90만명, 이들 중 25%는 AIDS/HIV 감염자이다. 이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중인 것이다. 짐바브웨에서 작년에는 AIDS환자들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하라레시(市) 공동묘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했고, 울리는 드디어 시체를 묻을 곳이 모자라는 상황에 처하여 '다음 가족을 그 위에 묻을 수 있도록 먼저 묻는 사람을 충분히 깊게 묻어 달라'는 시의회의 요구가 있었다. AIDS는 처음에는 게이남성, 성노동자, 마약주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서서히 퍼져나가다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바이러스의 해일로 돌변, 경제활동인구를 '몰살'하고, 그 나라를 교와와 노인만으로 이뤄진 나라로 만들어버린다.

죽음은 남반구에, 약물은 북반구에

문제는 20년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AIDS약물(항레트로바이러스제)들을 이 사하라 남부 지역의 AIDS환

자들은 복용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거대 제약회사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들을 1년 동안 복용하는 데 드는 비용만도 이 최빈국들 평균 1인당 GNP의 10배이다. AIDS에 의해 생기는 합병증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합치면 이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AIDS약물의 유무는 예방의 가능성까지 결정한다. 약이 없어서 어차피 죽어야한다면 사람들은 차라리 모르고 죽는 편을 택한다. AIDS검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AIDS에 의한 사망의 세계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 전체 사망자 300만명 중 240만명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거주, 북미 지역 사망자는 2만명인데 대부분 유색인종 등 사회적·경제적 소수자.

특허에 의한 살인

약물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특허 때문이다. 특허는 독점시장을 형성해줌으로써 제약회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북미·유럽·일본시장을 합친 것이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전체 아프리카가 1.5%밖에 차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약산업의 우선순위는 이미 정해져 있다. 북반구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나머지는 죽음을.

그리고 이 특허체제에 기반하여 상위 50위까지의 제약회사가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90%를 독식하는 엄청난 독점이 형성돼 있다. 그리고 그 독점 이유는? 특허기간이 '하루' 연장될 때마다 평균 3억원 이상의 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2001년 상반기, 인도의 일반약 회사인 Cipla는 거대제약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연간 1만5천 달러가 필요한 AIDS약물을 1/28인 350달러에 제공하겠다고 함으로써 약물의 '진짜'가격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열어 제쳤다.

'생명가격'은 흥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약품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접근가능해야 한다. 9월 19일에 있을 TRIPs Council에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한 토론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작성될 초안은 11월 카타르의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특허법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하며, 필수약품에 대한 특허를 보장할지 말지도 각국의 상황에 맞게 결정되어야 한다. TRIPs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장하고 있는 강제실시(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정부 등의 승인으로 특허권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 등의 안전장치를 각국이 발동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나 WTO의 압력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TRIPs 협정 전체는 재산의 권리가 아니라 건강과 생존과 인간의 권리를 중심으로 읽혀지고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거진 글리백 문제는, 백혈병 중 가장 치료가 힘든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물이, 특허에 의해 어떻게 독점되고 어떻게 접근이 방해받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은 한 달에 600만원씩 빚을 내어 글리백을 사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고, 무능한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효과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노바티스는 여전히 한 알에 25,000원이 고수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TRIPs Council에 대한 싸움은 아프리카만의, 혹은 AIDS 환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세계의 가장 가난하고 배제되는 사람들과의 연대투쟁임과 동시에 의료와 약물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한 싸움의 첫 시작인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9월 8일(토)

제 193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국보법, 정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상당수의 예술인들이 작품을 창작할 때 법·제도 등을 의식해 자기검열을 한다고 답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민중예술인총연합회와 문화개혁을 위한시민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238명의 예술인 중 35.5%가 법제도의 영향으로 스스로 자기검열에 대해 검열을 한다고 답했다.

민예총과 문화연대가 지난 달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8개 분야 47개 항목에 걸쳐 15일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예술인들이 창작할 때 '영향을 받거나 고려하는 법령'은 국가보안법(응답자의 63%)이 으뜸을 차지했다. 이는 흔히 생각하듯이 영상물이나 간행물 등에 대해 등급부여와 같은 '성'과 '폭력'에 의한 규제보다도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1차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보호법(15.1%), 음반비디오 및게임물에관한법(7.7%, 음비게법)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국보법, 표현의 자유의 제1 장애물

설문응답자의 84.9%는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답했으며, 국보법이 '이데올로기 통제수단'(39.2%), '정권안보 및 정권유지의 도구'(52.2%)라고 지적했다. 이는 '성', '폭력'에 의한 것 검열보다 국보법의 존재가 표현의 자유의 테두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정치·사회적 검열이 창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

시됐다. 설문응답자는 공연예술인(음악, 연극, 춤) 100명, 시각예술인(미

술, 사진) 64명, 출판예술인(문학, 만화) 58명, 영상예술인(영화, 애니메이션) 13명 등 모두 238명이다.

문화예술단체 회원에게 우편 및 전자우편 발송, 문화예술 관련 행사장을 직접 방문조사 하는 등 실제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18.4%인 44명의 예술가들이 창작과 관련해 입건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 2면에 계속)

<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단순추락사'라던 검경의 결론과 달리, 김 씨가 사망직전 경찰에게 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왜(!) 4년전 수사과정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냐는 점이다. 검경의 수사능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일까? 그렇게 봐주고 넘어가기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너무도 많다. 수사의 기본인 '목적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체에 찍힌 신발자국 등을 근거로 제기됐던 구타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사건발생 하루만에 수사는 종결됐다. 부검감정서와 국과수의 감정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였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수사당국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당시 사건을 지휘한 정윤기(현 영월지청장) 검사를 소환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정 검사는 장문의 글을 통해, "(자신이) 사망자체와 직·간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진정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사건은 왜 의혹이 제기된 이상, 지휘책임자 정 검사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자격을 갖기에 충분하다. "전화와 서면으로 충분히 밝혔다"는 정 검사의 주장도 수사기관 종사자로서는 '상식 이하'의 궤변이다. 피의자들이 '전화와 서면으로 충분하다'고 해명할 때마다 정 검사는 조사를 종결지를 텐가? "(자신의) 소환이 검찰업무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선, '검찰은 조사대상일 수 없다'는 투의 오만함마저 배어 나온다.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로 움직이는 검찰이기에, 정 검사의 출석거부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수사권력을 독점해 온 검찰이 스스로 '치외법권'의 특권층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국가인권위 설립과정에 그토록 개입하려 했던 검찰의 본심을 정 검사의 '고백'을 통해 적나라하게 확인한다.

검찰권력이 스스로에게 메스를 들이대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와 현실에서 검증된 사실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도 그 때문이다. 우리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충분히 예상한 바 있으며, 정 검사 파문은 그 시작일 따름이다. 진상규명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이처럼 '눈뜨고 당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되풀이 될 것이다.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보안관찰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지난 6일 서울고법 제11특별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불복해 법무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보안관찰 관련자료에 관해 법무부를 상대로 3차례 제기됐던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모두 원고승소 혹은 부분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보비공개를 주장하는 법무부의 주장은 법원에 의해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법무부는 보안관찰현황에 대해 △북한의 대남공작 및 선전·선동 등에 이용될 우려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 △반체제 좌익세력 및 문제단체들의 선동 △보안관찰법위반 범죄자들 간의 불복종 운동이 전개될 염려 등을 이유로 정보비공개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보안관찰법의 운영사항 중 일부를 통계자료로 정리한 데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북한의 대남공작 활동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악의적 선전 선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또 "국내외의 인권침해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보안관찰제도의 운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안관찰법의 개폐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과정이자 국민주권주의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법무부의 비공개 주장은 "주관적인 추측이나 우려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는 행정법원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오는 11월 13일에는 박지현씨가 99년 8월 제기한 '보안관찰현황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고법 제6특별부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범용)

(→ '국보법, 정보법 때문에 자기검열'에서 계속)

또 특정종교나 우익단체, 구청, 안기부, 경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사법처리 위협, 전화도청, 학부모 및 교육청의 압력, 방송 심의규정에 의한 방송금지 조치를 당한 사람이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4.1%는 정보법이 청소년 보호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청소년보호위가 검열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75.7%), 다수의 예술인들은 정보법의 개폐를 원하고 있는 것 (84.1%)으로 답했다. 응답자들은 '음비계법'의 '음란물차단프로그램설치'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95.2%)고 답했다.

음비계법·청소년보호위 등도 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인들은 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84.7%)고 답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 개념이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감시·통제하기 위한 것" (58.8%)이라면서도, '불온통신 금지·처벌' 조항이 있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54.5%에 달했다.

한편 민예총·문화연대는 이번 조사에서 영상예술인 응답자가 13명에 그쳐 영화진흥법 등에 대한 설문결과를 발표하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이라고 판단, 9월말까지 영상예술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결과를 이후 발표될 '표현의 자유 침해 백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설문조사내용을 기초로 민예총과 문화연대는 2001년 국회 문화관광위에 표현의 자유의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책대안에서 이들은 "예술발전과 이를 통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국보법 폐지 또는 전면개정이 절실하다"며 "문화부가 '문화적 논리'를 가지고 다른 부처를 설득하고, 국보법 폐지를 위한 문광위 특별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제시했다.

조사토대로 국회에 정책대안 제시

또 현행 정보법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문화적 수용을 위한 적극적인 매체교육을 담지하고 못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법의 기능이 더 강하다"며 정보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청소년 스스로 문화컨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의 의무화'에 근거한 인터넷에서의 전자표시 의무화는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매체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음비계법' 제32조의 5호의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 설치의 의무화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이번 설문은 국보법, 정보법, 음비계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등에 관한법, 전기통신사업법, 영화진흥법 등 6가지 법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 (37.8%)가 가장 많고, 20대 (33.2%), 40대, 50대 순이었다. 예술활동기간은 10년 이상 (28.6%)이 가장 많고, 5년 이상 (27.3%), 5년 이하 (24.8%), 20년 이상 (18.1%)의 분포를 보였다. (심보선)

2001년 1월~6월까지의
인권소식이 묶인
<인권하루소식>
합본16호가
있습니다.
가격 : 1만원(우송료 별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9월 11일(화)
제 193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국감,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에 나서야"

민주노총 등, 국회에 노동관련 현안 해결 요구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것과 함께 민주노총이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용역강제 폭력 처벌, 적극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대국회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법적인 파업도 중 용역강제에게 폭행당한 후유증으로 숨진 건설운송노조 안동근 조합원의 죽음에 비통함을 넘어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이는 용역강제들이 허술한 법망과 사법 당국의 비호 아래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불법 폭력을 휘두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악덕 사업주와 용역강제에 대한 정부 각 기관의 비호행위가 낱말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노총은 용역강제를 동원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방해한 '효성노조, 건설운송노조,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세광공업노조, 한국시그네틱스노조, 동아공업노조'에 대한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는, 지난 8월 9일 용역강제에 의해 파업이 무산된 금속산업연맹 소속

한국시그네틱스노조와 같은 경우 동원된 2백50여명의 용역강제가 용인대·강원대·경원대·목원대 경호학과 대학생들이며 현장지휘를 진석재 영풍그룹 이사 등이 직접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대학생을 용역강제로 동원했다"

기자회견이 열릴 당시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 앞에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지난달 21일 "경기보조원은 노조 법상에 명시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서울 행정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특수근로 형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국회 앞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차수련) 소속 조합원들이 상경 거점농성에 들어갔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용역강제폭력 근절·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를 갖고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와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촉구 집회' (11일), '조선일보 규탄 투쟁' (12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촉구 대회' (13일),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와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촉구 집회' (14일) 등을 열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또 같은 요구를 가지고 15일 민중연대 주최로 열리는 3차 민중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이번 국정감사가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낼 때까지 이번 주, 다음 주 내내 집중투쟁을 벌이겠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주에게 '숨방망이질'만 해댄다면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는 전혀 풀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유용태)는 12일부터 노동관련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번 국감에서는 '이주노동자, 부당노동행위, 공무원노조, 사업장감시, 근로시간단축' 등이 주요 노동관련 의제로 다루어진다.

(심태섭)

♠ 정보샘 ♠

□ 원전등급제와 등급외전용관, 어떻게 볼 것인가

- 때 : 9월 13일(목) 오후 1시 - 4시
- 곳 :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영상관(TEL. 02-3455-8484)
- 발제 1 - 영화등급제의 변화와 상영방식을 둘러싼 쟁점들(조영각,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 · 발제 2 - 영화등급의 외국사례분석과 적용가능성(하승우, 영화인회의 정책위원)
- 토론 : 강내희(중앙대 영문학과수) /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 전찬일(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위원) / 조광희(변호사)
- 주최 : 문화연대, (사)영화인회의 / · 문의 : 문화연대(02-773-7707)

□ 헌법 모의재판 -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

- 때 : 9월 13일(목) 오후 5시
- 곳 : 한양대학교 제2법학관 7층 모의법정실
- 주최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사회학회

2001년 1월~6월까지의
인권소식이 묶인
<인권하루소식>
합본16호가
있습니다.
가격 : 1만원(우송료 별도)

◎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됐...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후퇴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킬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부시행정부는 지난 6월 6일 ‘대북대화 재개’를 선언했으나, 그 의제와 태도를 볼 때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북한위협론에 근거한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을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삼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북한위협론에 더욱 매달리고 있다.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 냉전구조 종식을 추구해온 김대중 정부 역시 안일한 대미인식 및 저자세 외교, 남한의 경제위기 심화로 인한 대북지원 여론 약화, 그리고 여소야대 도래로 인한 대북정책 추진력 약화 등으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불과 1년 사이에 반전된 이와 같은 안팎의 상황은 기존의 관성으로는 현재의 교착상태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음을 말해준다. 필자는 여기에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북한주적론’을 삭제하는 것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을 겪어온 터라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말했듯이 국제사회에서 ‘주적’이란 말을 쓰는 나라는 없다. 한 나라를 주적으로 삼을 경우 다양화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고, 주적으로 상징된 나라와 긴장완화를 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 스스로 ‘안보위협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요구하면서 북한주적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비전은 물론 국방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가안보의 미래상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흔히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경제와 평화의 교환 전략’이라고 말한다. 즉 남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돕고, 북한은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남한의 안보불안을 해소함으로써 냉전체제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남한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미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이며, 더욱 중요하게는 ‘남한이나 미국 역시 북한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상호주의적 사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을 통한 대북위협 감소전략’은 북한의 안보딜레마까지 고려한 상호위협 감소노력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물론 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국내 보수 파로부터 이데올로기적 혐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김대중 정부가 군사·안보문제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주적론’ 삭제 역시 그 과정은 적지 않겠지만, 이를 해본 경험도 있고 상황도 좋아진 것이 사실 아닌가? 다음달에 나올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또 주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보지 않기를 희망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대표

주간인권호름

(2001년 9월 3일 - 9월 10일)

1. 김준배 사망, 사건은베·축소의혹 받는 검찰 의문사진상규명위 중간발표, 의문사 김준배 씨 경찰구타 사실·프락치 존재 밝혀(9.3)/ 김준배 사건 수사지휘 정윤기 검사, “김준배 수사에 의혹 없다”며 출두 거부 입장 밝혀(9.3)/ 민주화국민연대등, “김준배 사건 진상 밝힐 것” 요구 경찰청 항의방문(9.4)/ 김준배 사건 수사지휘 정윤기 검사, 동행명령장 거부(9.5)/ 민주화국민연대등, 정윤기 검사 근무하는 영월지청에 항의방문(9.5~7)/ 김준배 씨 관련 프락치 양심고백, “돈받고 준비형 경찰에 넘겼다”(9.6)/ 민주화국민연대·한총련, “김준배 씨 사망원인 철저히 규명, 정윤기 검사 출두” 요구 집회(9.8)/ 김준배 추모사업회 등, 광주에서 김준배 열사 추모주간선포(9.10)

2. 피도 눈물도 없는 국가보안법 신랄 없는 ‘눈물의 결혼식’-구속수감 김건수 씨 옥중결혼 호소도 외면(9.9)/ ‘만경대’ 발언 강정구 교수, 구속적부심 기각(9.8)

3.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도 책임져라 서울지법, ‘롯데호텔 과잉집압’ 국가배상 판결(9.5)/ 서울지법, 단속중인 행상을 폭행한 전역 의경에 구상권 인정 판결(9.9)/ 삼청교육 피해자 및 유족, 국가상대 위자료 집단청구(9.7)

4. 미국인에 대한 테러를 경계하라! - 뒤가 구린 미국 인천지역 사회단체, 미군기지 이전 ‘주민투표 조례’ 추진(9.3)/ 국사편찬위원회, “김구 암살범 안두희는 미군방첩대원” 기록 공개(9.4)/ 미국 백악관, “미군 보호위협 백신개발 위해 생물학무기 비밀연구”(9.4)/ 주한·주일 미대사관, 미군을 포함한 미국인들에게 테러경계령(9.7)

5. 일본의 전쟁·식민지배 반성, 언제나 가능할까? 일본 정부, 우키시마호 위자료 지급 판결에 불복, 항소(9.3)/ 일본 시민단체 회원 1백여명, 정대협 ‘수요집회’ 참석해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9.5)

6. 중국, 자유권규약도 비준하겠다! 중국 루중지 총리, 유럽 방문길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비준 방침 발표(9.5)/ 동티모르 총선, 동티모르혁명전선(프레티린)의 압도적 승리(9.6)

7. 기타 전국여성노조 방송국 지부 결성, “구성작가·리포터·DJ도 노동자다”(8.26)/ 신승남 검찰총장 취임 100일 간담회, “소사건 대폭줄이고, 검사대면권 보장 검토”(9.2)/ 안양고 동아리, “학생들의 학교운영위 참가 보장” 교육법 개정 청원서명(9.6)/ 정보통신부, 전자우편 감청 90.7%·통신사실 확인 등 통신자료 제공 71% 증가 등 통신감청 부쩍 증가(9.7)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9월 12일(수)

제 193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①
대송택 노동자, “TKP가 내 일터다”

“돈을 못벌면 자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줄겠죠. 교육을 제대로 못받으면 나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10일 포항, 평택, 왜관 등 전국 각지에 있던 조합원들이 제3차 상경투쟁을 위해 모인 전국민주화학생연맹 사무실.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조현재)가 ‘도급계약’을 해지, 해고된 대송택 노동조합 이상희(49) 포함지부장이 간단한 이치도 모르냐는 듯 대답했다. “파업 32일째죠?” “우리는 파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고됐고, 조합사무실도 없고... 조합원 전체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계약해지’가 인생해지가 안 되게 할라고 싸우는 중입니다.” 한 방 먹었다. 그렇다, 대송택 노동자들은 전원이 TKP(대한중탄송유관)에서 밀려났다.

파업이 아니다, 일자리 찾기 투쟁이다

82년 9월, 미군이 TKP를 운영할 때 군속신분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이 지부장은 '92년 6월 운영권이 SK로 넘어오면서 엔지니어 등은 제자리 찾아갔지만, 배운 것 없는 우리들은 오류, 삼일사, 현대석유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운을 폈다. SK로 넘어올 때 그리고 96년 다시 라이너스라는 업체 이름으로 통합됐을 때 연월차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역물해도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자위했다.

99년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TKP 소유권을 가진 국방부가 대한송유관공사로 운영권을 넘기면서 다시 라이너스에서 현재의 (주)대송택으로 또 한

번 소속이 변경됐다. 그러나 이런 잦은 소속변경에도 이 지부장은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일을 계속했다. “일년에 한 번씩 계약갱신을 했지만 그저 형식이었다. 내가 속한 회사명의만 바뀌고 자동적으로 갱신됐다. 내가 비정규직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내가 비정규직인줄도 몰랐다”

이 지부장은 "(주)대송택은 일인당 238만원씩을 송유관공사에서 받아 일인당 약 110만원 정도를 준다"며 "이는 명백한 중간착취 아니냐"고 반문했다. 왜 송유관공사의 도급계약이 위법이라는 질문에, "우리는 (주)대송택 대신 송유관공사에서 업무 및 인사관리 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전국 6개 지역에 있는 저장소장들이 휴가, 근무일수 확인 등 모든 걸 통제한다고 지적한다. "휴가원을 내면 대송간부들이 직접 서명해야 효과가 있다. 2000년 1월 노조를 만들고 나니까 (주)대송택 반장급들을 수당 1만5천~2만원에 과장이라는 직함을 달아 휴가원에 서명을 하긴 했다. 그러나 최종결제는 각 저장소의 소장들이 했다." "근무일수나 잔업확인도 현장소장이 직접한다. 잔업여부도 현장소장이 결정한다." "작업하는 곳이 멀어 차를 타고 이동하다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빨리 안 나오면 다른 곳으로 발령낸다고 위협하는 사람도 송유관공사 직원이다."

같은 대송택, 속은 대한송유관공사

소속만 (주)대송택일뿐 사실상 송유관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상경투쟁 때

마다 송유관공사 조현재 대표이사 집항의방문을 빠뜨리지 않는다. 11일 새벽 4시에도 조현재 대표이사 집 앞 항의시위를 했다.

(주)대송택 노조의 진정에 의해 성남 지방노동사무소(소장 정수복)는 7월 19일 송유관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부장은 "송유관공사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도 노동사무소는 아무런 일도 안 한다"고 거친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 8월말 노동사무소장이라는 사람이 '송유관공사가 비노조위를 상대로 2개월 도급계약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노조를 만들어 민주화학생연맹이라는 상급단체에 가입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계약해지'된 것 아니냐?"고 욕박질했다는 것이다. 불법을 저지른 송유관공사를 탓하기 전에 노동자들이 너무 심하다고 책망하고 나온 셈이란다. 그러나 송유관공사의 경비업체인 (주)은빛도 최근 계약해지 됐다. (주)대송택과 같이 99.10.1일부터 2002.9.30일까지 계약했던 (주)은빛도 송유관공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생계문제는 어떻게 할거냐는 물음에 이 지부장은 "오희성 세천지부장 부인이 해고된 후 생계를 위해 '딸이 다니는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는 참 막막한 생각도 들었다"며, "이미 노조차원에서 '돌아가면서 막노동판이라도 나가든지 해서 생계를 해결하고 투쟁한다'는 계획도 세워놨다"고 밝혔다.

2년 이상 일한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라 이런 골치 아픈 일에서 벗어나기 위한 편법으로 2년을 채우기 2달을 남겨놓고 해고된 (주)대송택 노동자들. 20년 이상을 같은 일을 해온 이 지부장은 이야기한다.

"TKP가 내 일터다. 나는 여기에 내 노동력을 팔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심보선)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대법원이 1·2심의 결정을 파기환송, 재심이 무산됐던 신귀영 씨 등 '간첩단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이 또 다시 재심개시 결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31일 신귀영, 신춘석, 서성철 씨 간첩단 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2호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증인 것이 증명된 때' △형사소송법 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해"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편 부산지검은 지난 3일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 사유가 법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산지법에 즉시하고장을 제출했다.

95년 11월 14일 대법원은 "새로 제출된 재일교포 신수영 씨의 진술서만으로는 무죄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없고, 신 씨 등이 주장한 관련 경찰관들의 고문, 감금행위도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어 재심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1·2심에서 받아들인 재심결정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문재인 변호사는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신 씨 등이 법정에서 나와 증언한 것을 새로운 사실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귀영 씨 등은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조총련 간부이자 형인 신수영 씨의 지시에 따라 부산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한 필름을 건네주는 등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10~15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신귀영 씨와 신춘석 씨는 95년 6월, 90년에 각각 만기출소했고 서 씨는 지난 90년 대구교도소에서 숨졌다.

신 씨 등은 94년 11월 16일 "당시 수사기관은 신수영 씨가 62년부터 80년까지 동생인 신귀영, 사촌제매인 서성철, 5촌 당숙 신춘석, 신복영 씨 등 4

명을 포섭, 미군 하이아리아부대 후문 전경과 군수사 전경 등 주요 군사시설 등을 카메라로 찍어 필름을 건네주는 등 간첩활동을 했으며 구속기소했으나,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40~70일이나 불법감금하고 온갖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재심청구에서 청구인들이 재판부에 새로 제출한 증거는 "신귀영 씨의 형 수영 씨가 조총련 간부가 아니라서 '피고인들에게 지령을 내릴만

"국가인권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라" 인권단체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성공을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다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정에서 정보공개와 논의과정의 민주주의 보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김광수 등)는 지난 7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 기획단장(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과의 간담회 후 11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간담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공적인 설립과 앞으로의 운영을 위하여 인권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운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인권단체연대회의는 "(김 단장은) 기획단 구성배경과 현재까지의 진행과정, 기획단의 어려움과 향후 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며, "인권단체 연대회의 대표자들은 기획단 구성과정에서 나타난 인권단체들에 대한 배제 내지 지나친 비밀주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향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에 뿌리내리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 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기획단 구성을 기획단장의 전권임을 주장하"고, "기획단 구성과정에서 상당수의 인권단체를 배제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연대회의가) 기획단에 지분을 달라는 요구인 양 곡해함으로써 간담회에 참석한 연대회의 참석자들에게 극심한 당혹감과 불쾌감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중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정과정의 맥락에 따라 기획단 운영과정에서 연대회의를 포함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기획단장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라는 제도적 기제를 요구"했으나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는 의례적인 말로 연대회의의 요구를 일축"했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바로 서기 위하여 기획단이 보다 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사회의 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며, △국가인권위 설립 준비과정을 독점하지 말고, △정보를 공개하고 논의과정의 민주주의 보장을 요구했다.

한편 인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7일 1박2일 일정으로 내부워크숍을 갖고 이주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 정보운동, 매매춘여성 등 각각의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수단인 모의조정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심보선)

한 지위가 아니었다"는 수영 씨의 진술서"였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역울함을 주장하는 신귀영 씨 일가의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80년 당시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된 증인들의 증언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냈다"며, "형이 확정된 사건이라도 수사당국의 불법연행, 감금, 고문 등으로 조작되고 당사자들이 그 증거들을 제시한다면 재심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재심개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9월 13일(목)

제 193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② 7천 해고자에게 달린 '대화의 문'

한 노동자가 누워있다. 또 한 노동자가 죽었다. 그리고 어느덧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275일을 넘겼다.

지난 1월 15일 경기도 분당 한국통신 본사 앞 집회 도중 27세의 계약직 노동자 이동구 씨는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했다. 당시 이 씨는 영하 10도를 밀도는 추운 날씨 속에 경기도 분당의 한국통신 본사 앞에서 "부당해고철회,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 후로 반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이 씨는 말을 하지 못한다. 왼쪽 뇌세포가 절반 이상 죽었다는 진단을 받은 이 씨는 분당재생병원·삼성서울병원을 거쳐 위험한 상태는 넘겼지만 오른쪽 전신마비와 언어장애가 그의 생활을 점령해 버렸다.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일산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 지금 그는 농사짓는 아버지와 중풍을 앓는 어머니 곁인 공주에서 대전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12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만난 같은 계약직 노동자 구강희 씨는 이 씨의 얘기를 하면서 줄곧 목소리가 떨렸다.

기자는 지난 5월 16일에 갑작스레 죽은 한승훈 조합원에 대해서도 물었다. 잘은 모르다며 구 씨는 말을 했다. "마지막 본 건 5월 10일이예요. 서울 을지 상가 앞에서 대우차 관련 집회던가. 유난히 얼굴이 검고 안 좋아 보였어요. 파업이 길어지다 보니 생활고 등 어려움이 많았죠. 16일 아침에도 집회에 나오던 참이였어요. 몸이 안 좋아 보인다고 집에서 만류하는

걸 '그래도 같이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쓰러졌대요." 가족들의 원망은 없었냐는 질문에 "왜 없었겠어요."라며 구 씨는 말을 잇는다. 동료들은 한씨가 일하던 대방전화국 앞에서 노제를 치러주고 싶었다. 그러나 한 씨의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 동료들의 희망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싸움의 이유

문득 궁금해졌다. 왜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하는 걸까? "IMF가 되면서, 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월 140만원에서 83만원으로 떨어졌어요."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았다. 20년을 줄곧 전화선로 가설·보수 일을 해온 구 씨는 회사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번번이 다음 재계약 때 올려주겠다는 사탕발림 뿐, 회사는 약속을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 노동조합을 의식이 노동자들 사이에 확산되었다. 그리고 지난 해 10월 계약직 노동조합은 어렵사리 설립필증을 받아냈다. 하지만 곧이어 회사측은 노조간부들을 징계 해고했다. 11월 말엔 계약직노동자 1천명을 해고했고, 12월 말엔 6천명을 해고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계약직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한 건 12월 13일. 한국통신처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곳은 파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사건이었다. 번번이 직권중재 조항 때문에 발목이 묶이거나 '불법파업'의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통 계약직노동자들의 파업

을 직권중재에 회부하지 않았다. 그때의 상황을 박윤배 중노위 공익위원은 이렇게 기억했다. "회사측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했죠. 노동자들이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다 안되니까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회사는 교섭 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강행하면서 교섭 의지를 보이지 않았죠. 계약해지의 규모도 7천명이나 지나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익위원들이 노조 측의 의견을 수용해서 조정안을 냈는데 사 측이 거부했던 거죠." 중노위는 사 측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계약직 노조의 합법파업을 승인한 셈이었다.

굳게 닫힌 대화의 문

"어제 동료 재판에 갔더니 판사님이 요즘 사회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는데, 왜 거리에서 투쟁만 하나요 하대요. 참, 누군 대화하기 싫어서 안 하냐요." 노동자들은 지난 겨울 영하 10도를 밀도는 추위 속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사 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언론의 무관심이 서러워 한감철교 위에 올라 현수막도 내걸어왔다. 법률적인 구제절차도 밟았다. 하지만 사측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같은 말을 되뇌며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다. 정부도 나 몰라라 뒷집만 지고 있다. 각 전화국 앞에서 노동자들을 맞아주는 건 줄지어 선 전경들 뿐이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275일이 지나갔다. "우리도 이 싸움 빨리 끝내면 좋죠. 하지만 그냥 접을 순 없어요. 비정규직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겨야 다른 노동자들도 희망을 갖게 되죠. 깨지더라도 끝까지 가야죠." 구 씨는 말한다.

지금 한통 계약직노동자들은 닫힌 '대화의 문'에 몸통이를 던지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 만들기를 하고 있다. 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하는가. (이주영)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③(끝) 더반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지향

남아공에서 공식일정을 하루 연기하며 열린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가 마침내 '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지난 8일 폐막했다. 대회가 시작된 지난 달 3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논란이 된 이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노예무역을 비롯한 노예제도·식민주의 문제였다.

대회에서 채택한 선언에는 노예제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대회의 큰 성과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대회 처음부터 영국·스페인·네덜란드 등 과거 시절 식민주의 정책을 펼치며 노예제도를 시행했던 나라들은 노예제도를 '반인도적 범죄'로 명시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다.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이후로 셀 수도 없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국가를 포함한 노예제도 및 식민주의 피해국들이 '노예제도는 반인도적 범죄'임을 명시할 것을 강력히 바랐기 때문에 선언에는 이러한 의견이 반영됐다. 한편, '반인도적 범죄' 문구와 함께 논란이 됐던 노예제도·식민주의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물론 간접적인 경제지원을 의미하는 문구가 삽입됐긴 했지만 도덕적인 책무를 지운 수준의 문구다.

노예무역·팔레스타인 문제 관심

대회 도중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 대표 참가단이 철수하는 상황까지 불러왔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도 더반선언은 작으나마 성과를 얻었다. 선언에는 "점령지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곤경에 대해 우려하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양도할 수 없는 자결권과 독립국가 건설권을 인정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9월 4일 민간단체 포럼에서 채택한 선언에서 시오니즘을 인종주의로 규정한 것보다 못한 수위의 결정임을 지적 받고 있다. 사실 유엔 의결구조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엔총회 결의에서도 팔레스타

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유엔총회 결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번 선언문을 어떻게 실천할 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회 사무총장을 맡았던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공식적으로는 시오니즘을 인종주의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민간단체포럼 선언 채택 후 "민간단체들의 결정을 존중해 정부간 회의에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합의방식으로 진행돼야할 대회가 막

판에 투표까지 동원해가며 채택한 이번 선언문과 행동계획이 21세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위한 인류의 실천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전세계인들과 각국 정부의 양심과 실천력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많다.

대회 기간 중 미국 등이 참가단을 철수하고, 선언채택과정에서 서방국가들이 구체적인 국가명칭 언급을 회피하는 등 많은 부분 '김이 빠진' 면이 보이고 있기도 하다. 물론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선언'이라는 한계도 있지만, 새로운 세기에 들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철폐하고자 전세계 168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 탄생시킨 '더반 선언'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심태섭)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

"이게 집회방해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12일 정오 경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선 경찰과 사회단체 활동가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집회장소인 광화문역 출입구 앞 도로 한 가운데에 경찰 측이 별안간 폴리스라인, 이른바 질서유지선을 쳐놨기 때문이다. 매주 수요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에 처음 등장하는 폴리스라인이었다.

폴리스라인을 친 이유는 이날 집회에 파견철폐공대위가 초대할 장애인노동권연대 소속 활동가들 때문이었다. 경찰은 "불법집회 전력자"라며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친다"고 말했다. 이에 집회 참가자 20여명은 경찰 측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차도 쪽으로 미뤄 설치했다. 하지만 실랑이를 벌이는 것 때문에 집회 시작 시간이 40여분이나 지연돼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 시간인 1시까지 집회를 서둘러 마쳐야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집회를 방해받았다"며 종로경찰서에 가서 책임자 면담을 요구했다. 잠시 후 정보과 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왔다. 이어지는 문답, "예 폴리스라인을 설치했습니까?" "집회도 보호하고, 장애인들 집회에 불법 행위가 있었던 적도 있고 해서 이를 막기 위해 설치했다."

집회에 참가했던 장애인노동권연대 활동가들은 황당했다. "지금 장애인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를 차별하나요?" 경찰관계자는 이 질문에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장애인노동권연대 활동가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는 없었다. 파견철폐공대위와 장애인노동권연대회의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하고 종로경찰서를 나왔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두고 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라는 최소한의 생존권적 요구에도 "불법이 있을 수 있다"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집회를 지연시키고 방해한 경찰. 불법과 합법, 의무조항 준수와 위반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 경찰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장애인들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요구를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날을 하루빨리 보고 싶다.

"이동권은 생존권이다!" 오늘 집회에 참석했던 장애인노동권연대 박경석 대표의 한 맺힌 외침이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9월 14일(금)

제 193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 '등급분류 보류'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완전등급제, 등급외전용관 등에 대한 공개토론이 진행됐다.

위헌 결정 이후 첫 공개토론

13일 서울 애니메이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영화 및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화등급,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영화제도 전반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고 등급외전용관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가하는 데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조영각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지난 96년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이라는 현재의 결정이후에도 지난 5년간 사전검열이 계속됐다"며, 현재 결정을 계기로 △18세 관람가 영화의 폭 확대 △등급외 성인영화전용관 설치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전면 검토 등을 주장했다.

등급분류거부권 필요

조 사무국장은 또 △97년 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구속 △97년 독립영화축제인 인디포럼의 공연법에 의한 장소변경 및 연기 등의 사례를 들며, "비상업적으로 제작되거나 독립영화 전용관 등에 대해서는 심의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영화인회의 하승우 정책실무위원은 등급외전용관과 관련, "등급분류 논란을 겪은 '거짓말', '노랑머리' 류의 영화가 등급외전용관에서 상영되어야 한다면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더 억압될 수 있다"며, "(위와 같은 영화의) 표현이 등급외전용관에서 상영된다면 등급외전용관 제도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위원은 또 "성적표현물에 관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형법의 음란물 규정에서 기인한다"며, "독일 형법의 '포르노그라피 반포'에 관한 규정처럼 포르노그라피의 개념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위원은 "영등위는 한시적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결국 민간자율위원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등위? 민간자율기구?

이에 대해 영등위 영화등급 분류위원이기도 한 전찬일 평론가는 현재 결정의 핵심은 "영화등급위원회(영등위)는 행정기구이며, 행정기구의 검열이므로 위헌"이며 "미풍양속, 청소년보호, 사회기강 확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평론가는 또 "한시적으로 영등위 체제 유지를 인정하는 것 보다 영등위 해체를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5년전 현재의 사전심의가 검열이라는 결정 이후 다시 현재의 등급분류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표현의 자유 확보는 또 다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조영각 사무국장은 "영화를 만들면서 '체모가 나오는 부분'이 문제되지 않을까 자기검열하듯이 발제문을 작성하면서 스스로 자기검열을 한 면이 있다"며 전 평론가의 문제제기에 동의했다. (☞ 3면에 계속됩니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 ③ (끝) 비정규직 정규직화, "싸우기를 포기하면 얻은 것도 물거품"

2001년 3월 7일, 265일 파업대장정을 마무리 한 이랜드 노조원들은 6가지 약속을 했다. 그 중 하나가 한통계약자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전국순회투쟁에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이랜드 노조원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는 남달랐다. 자신들이 한통계약자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의 성과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에서 연대의 성과가 크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기 때문이었다.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변경, 도급업체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삼아 고난을 '자초'한 이랜드 노동조합(위원장 배재석)은 불법파견근로 일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의 길을 뚫었다.

부곡물류창고에서 일하다 도급계약이 해지된 노동자 직접채용, 부곡물류창고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곡물류창고를 제외한 곳은 3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전형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 이것이 이랜드 노사가 합의한 주요내용이었다.

12일 만난 이랜드 노조 이남신 사무국장은 "파업 이후 부당노동행위나 현장의 노사갈등은 별로 없다"고 운을 뗐다. 무엇보다 "도급업체를 통한 불법파견근로가 이미 파업기간에 일소된 점이 큰 성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이 사무국장은 "3년 이상 근무자의 특별

전형을 통한 채용도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측이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채용의 선례를 남기길 꺼려하기 때문"이다.

또 사측의 고용형태에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대부분 계약기간 9개월을 넘기지 않거나,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문제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 말고도 이런 새로운 경향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물론 지난 6~7월에 진행된 노동부의 특감에서 'IMF 위기' 직후 받지 못한 연월차, 휴가비 총 5억여원을 대부분의 비조합원이 돌려받고,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가 거의 사라져 비조합원들이 조합을 신뢰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아주 큰 성과다. 이에 비해 조합원들 대부분은 265일 파업기간이 근로기간에서 제외돼 승진, 임금 등에서 실익을 거의 보지 못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 때문에 한 때 조합원들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평상심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무국장은 노사합의 당시 '성희롱 관

련 소송'을 취하해 "당사자들의 원망은 두고두고 집이 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성희롱 전담기구가 설치되고 이를 전담할 관리자가 지정되기도 했지만, 실질화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다만 이전과 같은 성희롱 등이 사라진 것이 다행"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사무국장은 "비정규직 대부분이 해고되고 나서야 싸우는 경향이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역설적으로 조직률 7~8%에 불과한 이랜드 노조도 싸웠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변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곧 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정규직 노조가 자신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랜드의 경우는 준비가 부족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배웠다." (심보선)

롯데: 110명 정규직화, 비정규직 채용-계약해지 반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내걸고 지난 해 여름을 뜨겁게 달군 호텔롯데 노동조합도 3년이상 근무한 노동자의 정규직화라는 노사합의를 이뤄 실제로 대상자 1백10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그러나 호텔롯데도 이랜드와 비슷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노조에서는 비정규직의 계약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등을 포함한 단체협상 요구안을 내고 단체협상을 했지만, 지난 8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정주여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집행부 5명에 대해 해고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후 사실상 교섭이 중단됐다.

지금 호텔롯데 노조는 오는 18일 치러지는 노조위원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전국민간서비스연맹에 파견된 박정자 여성국장은 지난 해 호텔롯데 파업 성과로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킨 것을 우선 꼽았다. 박 국장은 그러나 "비정규직 재계약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또 "호텔롯데 노조에 지금 무엇보다 우선적인 문제는 지난 해 파업을 이끌었던 노조집행부의 전통을 잇는 차기 집행부를 꾸리는 문제"라고 밝혔다. (심보선)

2001년 1월~6월까지의
인권소식이 묶인
〈인권하루소식〉
합본16호가
있습니다.
가격 : 1만원(우송료 별도)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13일 한양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읽었다. "병역법 제3조 1항, 제88조 1항은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즉,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

한양대 법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이번 모의헌법재판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리.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오평화' 씨, 민간단체 활동을 거쳐 반전 운동에 뛰어들 '나반전' 씨, 같은 민족을 상대로 총을 겨누지 못하겠다며 입영을 기피한 '한애국' 씨 등, 세 사람이 제기한 헌법소원청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모의재판은 시작됐다.

첫 논점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해석. 재판관들은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형성 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군사훈련이 면제된 대체복무도 국방의 의무에 포괄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국토방위의 중요성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하며,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방의 의무 부과에 따른 국민기본권 제한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어서는 안 되며, 헌법적 기본원리에도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두 번째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충돌에 대한 해석. 재판부는 "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을 지키는 자유는 물론,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극적 의미의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기초군사훈련이 배제된 대체복무를 부과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또 "대체

복무를 시켰을 때 복지수준, 인권수준의 향상 등 공익적 측면이 더 강하다"며 "병역법 제88조 1항은 이익형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와 관련된 해석. 재판부는 "현행 병역법이 예술·체육분야 특기자, 의사·변호사 자격자, 전문기능요원 등에 대해 대체복무 성격의 보충역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체복무 성격의 보충역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군사훈련이 배제된 대체복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인간존엄성의 뿌리이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라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집단을 배제한 채 인정되고 있는 현행 병역법상의 대체복무제도

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결국 '모의재판'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법정 밖에서는 여전히 '병역거부권'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 법대생 1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의견(58명)보다 반대(65명)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찬성이유는 '종교·신앙의 자유 보장'(24표), '소수자 인권존중'(21표), '대체복무시 국가와 사회적 이익 증가'(14표)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이유는 '양심'에 대한 판단의 애매함(33표), 현역병 입대자와의 형평성(25표), 남북대치의 특수성(9표) 등이 제기됐다.

한편, 14일 오후 2시 국방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제 재판'이 벌어진다. 1심에서 징역 3년씩을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76명이 항소를 제기, 1차로 16명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이창조]

(⇒ 1면 '등급보류 위헌'에서 계속)

조 사무국장은 영등위에 대해서도 "사람바꾸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민간기구를 책임진다는 데 대해 부담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하승우 위원은 "솔직히 시민단체 등에 민간기구를 맡기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한다"며 "영등위 체제를 대체할 구체적 대안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조광희 변호사는 현재결정 이후 영등위의 성격에 대해 "등급보류 등을 통한 사전검열이 금지돼 이제 사후통제만 있다는 의미에서 검열기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등급외전용관, 필요? 불필요?

토론에서는 등급외전용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다. 문화연대 이재현 사무처장은 "과거의 전용관 발상은 등급보류라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라며 "전용관에서 상영할 기준을 세우는 순간 검열기제가 작동되므로 전용관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어떤 작품에 형법, 국가보안법 등 위반 시비가 일 때 각각 판례로써 표현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인회의 유창서 사무국장은 "소프트 코어 포르노가 상영될 수 있는 성인전용관으로 생각한다"며 "단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논리로 등급외전용관에서 상영돼야 한다는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사무처장은 아울러 "영화인회의 등은 영화인들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대안을 11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강대희 교수는 사후처벌에 대해서 "형법상의 음란물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며 위헌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광희 변호사는 "전용관에서 뜬작품이 형법의 '음란물'로 처벌되면, 결국 현재와 비슷한 표현수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또 형법의 음란물 개념이 "현실에서 위헌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만, 법리적으로는 위헌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9월 15일(토)

제 193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양심에 따라 입영 혹은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 형법상의 항명죄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징집을 거부한 죄로 수감된 '여호와증인'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14일 육군고등군사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 주장의 요지는 "비전투직 복무 등의 방법을 강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군형법 44조(항명죄)를 양심적 징집 거부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 11조 1항(평등권), 제 19조(양심의 자유), 제 20조(종교의 자유), 제 37조 2항(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군법원이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시작된다.

"양심의 자유·평등권 등 위배"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음에도 수많은 '여호와증인'들이 일관되게 징집보다는 감옥을 선택했다는 점은 징집거부가 이들의 양심 또는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쉽게 알게 한다"며 "군형법 44조는 헌법 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양심 실현의 대가로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침해 △선거권 침해 △정

치적·경제적 영역에서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징집을 거부한다고

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얼마든지 비전투직에 복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고등군사법원은 1심에서 징역3년씩을 선고받은 '여호와증인' 16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군 검찰관은 논고에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미정. (이창조)

<논평> 보복과 응징이 아닌 정의를

'또다시 시작'하는 아픔을 맞아 분주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아침을 맞았다.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배워왔고 가르쳐온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까맣게 타서 무너지고 있다.

지난 화요일 미국을 감타한 무차별 테러는 전 인류를 실의와 공포에 빠뜨렸다. 그 충격에서 눈을 뜨기 무섭게 '보복과 응징'의 전쟁선전에 귀가 멍하다. 미국 정부는 분노와 슬픔을 보복과 응징의 출격 원료로 쓰러하고 있다. 그러나 '분노'는 테러의 야만성에 대한 분노요, '슬픔'은 무고한 이들을 애도하는 슬픔이다. 그 어떤 것도 가난하고 힘없는 민족에게 저질러온 미국정부의 만행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

미국 정부가 직시해야 할 것은 인류의 애도 속에 어린 비난이다. 미국 정부는 오늘날 비극을 입태한 폭력의 발원지였고, 버림대였다. 그리고 오늘은 21세기 첫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피의 보복인가? 이미 탐비고 있을 저 세상으로 더 많은 무고한 목숨을 보낼 터인가? 미국의 군사정책과 패권주의에 대한 반성 없이 그것을 확대 강화하려는 보복은 테러리스트를 향한 화살을 자신에게로 되돌릴 것이다. 우리는 보복과 응징이 아닌 '정의'를 원한다. 미국의 힘에 의한 응징은 결코 정의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우리 내부로도 경계의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공안부는 '유언비어 낱조·유도, 사회·경제질서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적발, 엄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경찰들의 불심검문에 머뭇거림이 사라지고, 야당 의원의 입에서는 '이래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말이 천연덕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 공포와 우려에 편승하여 반민주적 반인권적 기류를 조성하려는 시도야말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테러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우리 정부는 평화를 염원하는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미국의 전쟁책동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테러범과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는 미국 정부의 장단에 놀아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피의 보복은 미국의 자멸일뿐더러 인류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멸의 길이다. 1·2차 세계대전의 학살과 폐허 속에서 배운 것이 평화와 인권의 보장이 아니었던가? 무역센터의 폐허 아래 묻힌 무고한 생명들의 절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도 그것이다.

<애의소식> 테러 사건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 성급한 군사행동 반대...문명적 대응 촉구

미국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뉴욕의 맨해탄과 워싱턴 D.C.에서 끔찍하고도 비극적인 테러가 발생한지 3일이 지난 지금, 부시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미 국민 83%의 지지를 업고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지구촌 곳곳에서 미국의 성급한 군사행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 주류 언론이라 할 수 있는 파이낸셜타임즈나 뉴욕타임즈는 말할 것도 없이 지식인들과 전 세계의 시민단체들도 미국의 무분별한 보복조치는 결국엔 미국을 테러범과 다를 바 없이 만들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저명한 미국의 월간 저널 '포린 폴리시'의 톰 베리와 마서 하니는 미국이 지난 과거에 오판을 통해 레바논과 이라크 등지에서 무고한 인명을 희생시킨 것을 상기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수단 최대의 제약공장 중 하나를 오사마 빈 라덴의 화학무기 공장으로서 오판하여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고 수단내의 필수 약품의 공급을 거의 끊기게 했으며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진술했다. 그들은 공동 기고문에서 미국이 취할 적절한 대응책은 부시행정부 출범이후의 고립주의적·일방적·독선적 외교정책에 수정을 가하며 새로운 화합의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선동적인 군사조치는 미국이 인명을 테러리스트만큼 하찮게 생각한다는 이미지만을 전 세계에 남길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미국이 이번 사건의 조사, 범인 추적 그리고 기소를 전 세계 국가들과 공조를 이루어 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대학의 스테판 존스는 미국의 강경한 '대 이슬람' 정책과 지나친 이스라엘 감싸기, 그리고 그동안 계속된 테러에 대한 잘못된 대응 등을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진술했다. 존스는 미국이 지금까지 이슬람 근본주의자와 강경주의자들의 공격에 대비

한다는 명목으로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으나 실상 미국은 사우디 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지에서 자국의 이익과 부합할 때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협력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존스는 더 나아가 "역사상으로 볼 때 미국의 강경일변도 정책이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주장한다. 팔레스타인은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 온건한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미국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와 요단강 서안 점령을 지지하면서 그에 대항하며 하마스를 비롯한 다른 급진적 이슬람 운동이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2년 미국의 지원 아래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고 22년간 남부 레바논을 지배하기 이전까지는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한번도 정치적 주요 세력으로 등장한 적이 없다는 데에 주목했다. 결국 미국의 잘못된 외교 정책이 이슬람 급진주의자들로 하여금 테러와 같은 극단적 행동을 취하게 하며 이슬람국가들 내에서도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불러온 화"

저명한 석학 노암 촘스키도 기고를 통해 "이번 테러가 MD정책의 허구성과 비효율성을 증명했다"고 말하며 "이번 사건이 팽목적 애국주의자들이 득세하여 군사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강경 외교론자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의 '평화와 미래연구를 위한 국제교류기금'(TFF)의 조너던 파워도 "많은 유럽인들이 미국이 고립주의적 행동으로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미국은 이러한 새로운 경향의 테러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종래와 다른 방식의 세계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의 시민단체와 기구들도 미

국의 합법적이고 성숙한 대응을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12일 성명을 통해 "테러범과 테러범을 은닉한 자들에게 구분을 두지 않겠다"는 부시의 말에 우려를 표명하며 "범죄자와 단지 범죄자의 주변의 무고한 시민들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킨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논리는 테러범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9백50여 시민단체의 모임인 '하나의 세계' 역시 테러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그 응징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하나의세계'는 미디어 채널을 통해 미국 언론들의 강경 일변도 주장을 비판하며, 폭력은 폭력을 부를 뿐이며 강경한 보복조치는 그에 맞서는 강경한 대응을 낳을 것임을 경고했다.

아시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지지하기 위해 방콕에 모였던 아시아 12개국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한 테러를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미국이 이 범죄에 대항해서 폭력이 아닌 합법적이며 사법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이 국제사회의 협력과 국제적 사법 절차에 따라 테러의 책임자를 응징하는 것으로 성숙된 민주국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시민단체인 크리스찬 에이드도 테러범들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을 요청했다. 이 단체는 "지난 구호 활동을 통해 무고한 생명이 폭력에 희생되는 것을 목도했다"고 언급하며 "미국과 동맹국의 성급한 군사행동이 가난하고 힘없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찬 에이드는 "전 세계 시민들이 이러한 야만적 행동에 대해 문명화된 대응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세기 전 간디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정책은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워싱턴 포스트의 인터넷 토론방에서 한 중국인 네티즌은 말했다. "개가 사람을 문다고 사람도 개를 물지는 않는다."

(박수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9월 18일(화)

제 193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미 보복전쟁 반대' 목소리 강제진압

경찰, "민감한 시기에 기자회견 허용 안 한다" 사전압력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무차별 보복전쟁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경찰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자통협, 민주노총, 민주연대 등 23개 사회단체들은 17일 오전 11시 미대사관 옆 한국통신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정부가 보복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힘에 의한 패권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기자회견 전에 이미 문정현 신부, 흥근수 목사 등을 개별적으로 에워싸 고립시켰고,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 등 사회단체 간부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난지도, 구리시 등으로 강제 해산시켰다.

자통협 김종일 사무처장은 "초반부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력을 가해 (참가자들을) 극도로 흥분시켰고, (경찰들은) 기자회견 자체를 원천 무산시키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실제 이 과정에서 문정현 신부는 전경의 방패로 다리를 찍혀 부상을 당했고, 인천공대 이병호 학생은 실신해 강북 삼성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결국 12시 30분경 홀로 남은 문정현 신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행사는 축소됐다. 기자회견문과 더불어 '9·11 테러'에 의해 숨진 무고한 미국시민을 애도하는 편지와 꽃다발을 미 대사관 측에 전달하려는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종일 사무처장은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기자회견을 해 왔지만 기자회견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산시켰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는 "대사관 100미터 이내의 집회는 불법"이라며, "대사관 바로 앞에서 30~40명이 모여 있어 해산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경찰들의 폭력연행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찰 측으로부터 "민감한 시기에 기자회견을 허용하

지 않겠다", "기자회견에 나오기만 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등 협박성 전화를 받은 것.

한편 이날 난지도 등으로 강제 해산 당했던 민주노총 신현훈 대외협력실장 등은 다시 기자회견 장소로 집결해, 종로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의 폭력연행을 규탄했다. 이에 신실장 등은 저녁 6시경 종로경찰서장을 만나 △공식사과 △재발방지 △부상자 치료 등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날 경찰의 폭력연행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및 종교·여성·사회단체들은 이번 주 매일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어 '전쟁만은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범용)

새로 나온 자료집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2001/진보넷/236쪽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현안을 한 눈에 조망해볼 수 있는 자료집이 발간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0일 '정보통신정책관련 2001년 현안자료집'을 50부 한정으로 발간하고, 인터넷상에 공개했다.

이번에 진보넷이 발간한 자료집은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내용등급제', '소리바다와 저작권', '통신비밀보호법' 등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현안마다 3~4개씩 논문·의견서가 묶여져 있어, 독자들이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했다. 흔히 정보통신정책에 대해 얘기할 때, '산업·시장적' 측면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은 정보공유, 프라이버시 문제 등 '정보기본권'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담고 있다. 특히,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회가 낸 의견서, 민변 이상희 변호사의 논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에 대하여' 그리고 미국시민권연합(ACLU)의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등의 문서를 첨부해 이 쟁점의 성격에 대해 잘 이해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가 흔히 접해보지 못한 '비즈니스모델(BM) 특허 문제', '인터넷 거버넌스'(IP주소, 도메인네임 등 '인터넷 주소 자원의 생성·배분·관리를 다루는 것)에 대한 쟁점들도 소개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통신 관련 쟁점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길잡이 역할도 하고 있다.

진보넷 장여경 정책실장은 "자료집에는 진보넷 주요 활동에 대한 개요 소개를 중심으로 이전에 여러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변호사·교수 등의 논문·의견서가 담겨 있다"며 "이번 자료집에 다뤄지지 못한 현안들인 '감시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노동과 감시' 부분에 대해선 올해 말에 발간할 자료집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사이트 'http://networker.jinbo.net'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전자우편 orpheo@jinbo.net. (심태섭)

◎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인권의 이름으로 옹호해야 하는 것

울산인권영화제(현재 '인권과 평화를 위한 울산영화제'로 명칭변경)의 <밥·꽃·양> 상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10월 11일부터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 영화제 홈페이지(http://ulsanhr.jinbo.net/hrfilm.htm) 게시판에 지난 7일 <밥·꽃·양>의 제작팀 라넷(LARNET, Labor Reporters Network)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제2회 울산인권영화제 상영을 거부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 '사전 검열'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권'의 이름이 부르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거론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외압의 여부와 이 외압으로 인한 상영 결정 보류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밥·꽃·양>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 현대자동차 식당여성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투쟁과 회사와 노조를 상대로 한 원직복직 투쟁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로 기존 노동운동의 관심과 패해를 고발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영화제에 참여한 여성단체에서 정리해고 울린 결과에 <밥·꽃·양>에 대해서 현장조직에서 *** 발언 뒤 ==가 하는 멘트가 나오는 장면이 상황을 무마하려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한다"는 대목은 이 작품을 둘러싼 외압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 민중에게 '울산'이 주는 어감은 각별하다. 울산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상징이고, 남성·정규직·대기업 노동조합의 전투적 노동운동은 이 땅 노동운동의 구심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 이 과정에 여성노동자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투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는 것 같다. 이 역사는 노동운동이 가장 억압받고 소외받는 이들의 피눈물나는 투쟁으로부터 양적으로 성장해오고 질적으로 성숙해 왔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오늘 장애인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리고 또다시 여성 노동자들이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자본과 국가 권력의 억압 속에 더욱 참담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자본의 정리해고에 대해서 뿐 아니라 관료적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저항한 울산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남한 사회운동에 매우 소중하다.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표현의 자유는, 그리고 영화제와 같은 열린 표현의 공간은, 가장 억압받고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미 아쉬울 것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다지 절실하지 않은 것들이다. 인권의 이름을 한 영화제가 가장 강력하게 옹호해야 하는 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이번 인권 영화제는 제 자격을 잃었다 할 수 있다. 인권의, 자본과 국가권력에 대항할 때면 필요한 개념이 아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0일 - 9월 17일)

1. 아메리카, 더러운 전쟁을 결정하다
미국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항공기 테러공격에 완전히 무너져(9.11)/ 미 대통령 부시, "테러분자 및 이들을 보호하는 자들 구분 없이 모든 수단 동원해 응징, 21세기 첫 전쟁치를 것"(9.12)/ 럽스펠드 국방장관, "수일내 불시 보복공격"(9.12)/ 미국 상원, "미국 행정부의 무력사용 만장일치 승인"(9.14)/ 파키스탄 언론, "미군 특수부대원 50여명 이슬라마바드 도착"(9.15)/ 미 부통령, "암살 등 '더러운 전쟁'도 불사"(9.16)/ 럽스펠드 미 국방장관, 핵무기 사용가능성 질문에 "노(No)라고 답하지 않겠다"(9.16)
2. 미국의 보복에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반미여성회등, 예정된 집회·기자회견 취소(9.12)/ 주한 미8군, 개인화기 휴대 단독군장 차림으로 영내 진입 모든 차량 검문(9.12)/ 검찰, "미국 테러 관련, 사회·경제 혼란 엄벌하겠다"(9.12)/ 폭발물처리반 등 경찰특공대, 미대사관에 파견 경계근무(9.12)/ 정부, 미 테러 희생자 '애도의 날' 선포(9.14)/ 김 대통령,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모든 협력과 지원을 하겠다"(9.17)/ 민주노총 등 23개 단체, 미국 전쟁반대 기자회견(9.17)/ 종로경찰서, 미국 전쟁반대 기자회견 참석자 연행(9.17)
3. 성전 선포한 아프카니스탄
아프카니스탄, "라덴은 테러능력 없다"(9.12)/ 아프카니스탄 최고지도자 AFP회견, "증거 없이 보복에 나서는 것은 미국이 테러를 저지르는 것"(9.14)/ 아프카니스탄 외무장관, "미국에 공격통로 열어주는 인접국 보복"(9.15)/ 오사마 빈 라덴, 테러 연루혐의 전면 부인 성명(9.16)
4. '양심에 따라 총을 들지 못하겠다'
서울지법, 종교신념 병역거부자에 징집면제 최소형량인 1년 6월 선고(9.13)/ 한양대 법학과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9.13)/ 여호와의 증인 변호인, "항명죄 위헌심판제청 신청"(9.14)
5.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제도
대법원, '민혁당 영남위원장' 최진수 씨에게 반국가단체구성 혐의 유죄확정(9.7)/ 영화인회의등 토론회, '등급보류 위헌' 이후 첫 공개토론회(9.13)/ 충남 교육청, '나체 사진' 홈페이지에 올린 김 교사, 징직 3개월 징계(9.14)
6. 지적재산권과 인권
백혈병환자들, '글리벡' 보험 전면적용 촉구 시위(9.11)/ '소리바다' 첫 공판(9.13)
7. 기탁
여성부, "내년부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전액지원"(9.9)/ 이학영 순천기독교청년회 사무총장, '낙선운동' 유죄 벌금납부 거부, 교도소 수감(9.11)/ 서울지법, 인터넷 업체 27곳, 회원정보 팔아 넘긴 사실 적발(9.16)/ 군의문사 가족들, 국방부 앞 농성 시작(9.17)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군대가 내 아들을 두 번 죽였다”

군가협, 군의문사 특조단 해체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초가를 햇살이 따갑게 얼굴을 내리 췌는 18일 오후, “군에서 의문사한 아들의 사인이라도 제대로 밝혀달라”고 국방부 앞에서 20여 명의 아버지·어머니들이 절절히 외치고 있다. △군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군대내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며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회장 김봉임, 아래 군가협) 소속 유가족들이 17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것.

아들의 장례식 4년째 거부

그곳에서 아들의 장례식을 4년째 치루지 않으면서 그 의문에 쌓인 죽임에 항의하고 있는 김기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자식의 죽음을 접한 부모들이 대부분 그렇듯 김 어머니도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98년 8월 10일 오후 6시 김 어머니는 진해에 정박 중인 2함대로부터 아들 김태균(당시 해군 중위 보급장교) 씨가 귀대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9월 8일, 김 씨는 경상북도 김천 직지사 뒷산에서 목이 맨 상태로 온몸이 썩은 채 발견됐다. 김 씨가 중위로 진급하고 근무지를 3함대에서 2함대로 옮긴 지 40일만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부대에서는 ‘김 씨가 함대 생활에 적응을 못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어머니는 아들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당시 사망한 김 씨의 앞니가 5개나 부러진 사실을 비롯 그의 죽음에 많은 의혹이 있었기 때문. 결국 김 어머니는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아들의

주검을 김천 의료원에 지금까지 안치해 둔 채, 의문의 죽음을 규명하고자 국방부 앞까지 오게 됐다.

군의문사, 대부분 ‘자살’ 처리

이번 국방부 앞 농성단 단장 주종우 아버지는 “우리들의 울분을 가장 크게 터트리는 것은 군대가 아들의 죽음을 은폐·조작했다는 것”이라며, “군 지휘관들은 처벌을 안 받기 위해 우리 자식들을 자살자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군가협 소속 아버지·어머니들의 사연은 하나같이 의문투성이다.

윤옥순 어머니의 아들 홍완표(당시 21사단 65연대 이병) 씨는 90년 4월 13일 코를 제외한 안면부 전체가 크게 손상당한 상태로 두 눈을 뜬 채 죽었다. 단국대 독어독문과 3학년 재학중 휴학하고 군에 입대하지 5개월도 안 돼 일어난 일. 하지만 해당 군부대가 홍씨 사망사건에 대해 실시한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자살’이었다.

이중에 어머니의 아들 김문환(당시 12사단 일병) 씨가 죽은 사건은 올해 3월 14일에 발생했다. 김씨가 근무하던 부대는 ‘철책근무를 서고 있던 김 씨가 총기로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 어머니는 당시 김 씨의 사체나 입던 옷에 남은 핏자국이 총기로 자살한 것치고는 너무나 깨끗했다고 주장했다.

특별조사단, 군의문사 규명 못해

군대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99년 9월 국방부는 사상 처음으로 군의문사 및 군폭력 사건에 대한 육·해·공 합동 특별조사

단을 구성했다. 당시 특별조사단은 총 166건의 민원을 접수했고, 지금까지 1백건이 넘는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접수된 민원 중 73%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타살의혹이 제기되거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사건들인데, 특별조사단은 이 가운데 단 한 건도 ‘타살’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군가협 소속 아버지·어머니들은 국방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며, 특별조사단의 해체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

천주교인권위 안원영 사무차장은 “군대내 사망사고는 사망자 해당 부대의 현병대가 수사를 하기 때문에 지휘관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군대내 사망사건이 ‘의문사’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안 사무차장은 이어 “특별조사단의 재조사도 애초 수사결과를 확인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며 허울뿐인 특별조사단을 비난했다. 한편 군대내 자살이 자살자만의 책임인가에 대해서, 안 사무차장은 “이들이 죽은 원인이 부대내에 존재한다면 자살자도 유공자로 보아야 한다”며 군대내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주장했다.

국가가 유족들에게 화답해야

취재 도중 한 어머니가 농성장 주위를 지키고 있는 전경을 향해 소리소리지르며 울분을 토하던 목소리가 취재가 끝난 후에도 귓가를 맴돈다. 조금이라도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자 기자의 소멸을 불쌍하고 말을 이으려는 아버지·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군가협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국가책임론 제기 및 유공자 등록 일괄 신청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22일 오후 3시에는 결의대회를 가진다. 이들에게 울분과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이번 농성은 결코 끝나지 않을 듯 싶다. (범용)

2001년 9월 19일(수)

제 193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사관 근처나 주요도로에서는 집회를 열 수가 없어 개발된 1인 시위.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관련단체·이익단체들이 허위로 장기 집회 신고를 내 어쩔 수없이 집회 장소를 바꾸는 사람들.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이 바라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권익과 주장을 지키기 위해 보장돼야 할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가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경찰·검찰은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 “1인 시위는 변칙적 집회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발언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은 현행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현 주소를 돌아보고 현행법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대사관 주변 = 집회금지구역

올해 들어 화제를 집중시킨 시위 방법은 바로 1인 시위다. 참여연대가 종로 국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국제청 건물에 온두라스 대사관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청이 입주해있는 삼성 타워는 작년에 생긴 건물로 주변에 비교적 넓은 공간이 있어 사람들에게 ‘시위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를 잡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를 감지한 삼성 측은 재빠르게 움직여 온두라스 대사관을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건물 주변에서 열리던 대중 집회는 이후로 모습을 감췄다.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에 규정돼있는 ‘외국의 외교기관 1백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조항은 대표적인 집시법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한때 중로경찰서장이 “1인 시위는 법의 틈새를 교묘하게 이용한 불법 행위”라고 비난한 적이 있었는데, 재벌들이 벌이고 있는 대사관 유치 활동이야말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재벌들의 행태는 저절로 허겁을 차게 만든다. 삼성생명 본사에는 열살 바도르 대사관이 있고, 세종로 현대상선 건물에는 파나마 대사관이 작년 6월에 들어갔으며, 동화면세점 빌딩에는 99년부터 브루나이 대사관이 터를 잡았다. 재벌들은 이같이 제3세계 국가들의 대사관을 자신들의 건물에 유

치하면서 보증금·월세를 깎아주고, 심지어 말짱히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사관을 옮길 의향이 없냐”며 대사관 이전 제의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재벌들의 횡포로 인해 정작 재벌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요구를 외치는 사람들은 재벌 건물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다. 실제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열살바도르 대사관 입주 후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벌여온 삼성해고자 복지투쟁위(위원장 김성환) 앞으로 “이미 신청한 삼성생명 사옥 앞 집회 7건을 모두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요즘은 삼성본관과는 2백여미터 이상 벗어난 곳에서 ‘삼성 복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있는 삼성해복투 관계자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말한다. “역시 삼성이 하면 다르더군요, 합법적으로 벌이고 있던 집회를 하루 아침에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다니.”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노동 현안에 해당 사업장이나 본사가 위치한 건물에서 집회가 열리기 마련인데 건물 소유주인 사업주가 집회를 막기 위해 대사관을 입주시킨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요 도로’에서 집회하지마!

올해 5월 민주노총은 노동절 111주년 기념대회를 광화문에서 치르려

했다. 그러나 광화문 4거리가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받아야 했다. 현행 집시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에는 얼마나 많은 주요도로가 있을까? 집시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주요도로를 살펴보면 ‘경인로-마포로-종로-왕산로-망우로’를 2번 주요도로로 지정하고 있다. 2번 주요도로는 오류동에서 시작해 영등포역-여의도-광화문4거리-종로-청량리-상봉동-망우리까지 서울을 관통하는 도로다. 이런 식의 도로가 서울에만 1번에서 15번까지 주요도로로 지정돼 있다. 사실상 서울시내 도로 대부분이 주요도로로 지정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이 맘만 먹으면 집회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지난 7월 검찰당국은 “4대 문안 도심지역에서 집회 참가 인원수를 5백명으로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교통소통을 이유만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판례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8년 실업대책 범국민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대해 경찰이 “주요 도로 앞 시위는 교통장애가 예상되어 집시법에 의거 금지대상”이라고 통보한 사건에 대해 “단순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피고의 사건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법한 조치”(선고98누11290)라고 판결했다.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오히려 약자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 대사관 주변 집회 금지로, 주요도로 집회 금지로 사회적 약자들의 외침은 점점 더 외딴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요구된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여순사건 영화', 좌익사상 시비

월간조선, 영화도 안 보고 제작취지 왜곡

'여순사건 영화' <애기섬>은 여수와 남해 사이에 있는 무인도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이곳은 48년 보도연맹 사건 당시 민간인의 집단 학살 장소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애기섬>은 먼저 48년 여순사건 전후의 상황을 다큐멘터리 식으로 훑고 지나간다. 이어 좌도 우도 아닌 한 민초의 가정이 여순사건 과정에서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가를 극도로 형상화한다.

극이 진행되는 중간중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가담했던 곽상국 씨(14연대), 진압군 측에 있었던 박오선 씨(사찰계 외무주임)와 배학래 씨(특무대원)가 생존인물로 등장해, '여순사건 때 양민학살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반란군도 진압군도 피해자일 뿐 그들을 단죄할 자는 누구도 없다"며,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에 참가하고 서로서로 화해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한 독립영화 감독이 월간조선 기자와 가진 '순진한' 인터뷰로 뜻하지 않은 사상시비에 휘말렸다. 바로 지난해 여순사건을 소재로 다큐멘터리 극영화 <애기섬>을 제작해 온 여수 독립프로덕션 '미디어인' 장현필 감독이다. 그의 시각은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뿐 아니라 진압군에 의해서도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됐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바로 이 점이 월간조선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월간조선

10월호는 영화 <애기섬>을 장장 22쪽에 걸쳐 난도질하고 있다.

월간조선의 사상시비

월간조선 10월호에서 우중창 기자는 "영화에서 '폭동'이라고 규정한 제주 4·3 사건을 항쟁이라 표현하고, 여순 14연대 '반란'사건도 그냥 여순사건이라 호칭했다"고 비아냥거렸다. 또 지난해 9월 2일 비전향 장기수로 복송됐던 김영만 씨를 출연시켜 그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실업자·구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서울고법, 서울여성노조 설립필증 교부 판결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지금까지 실업자 및 미취업자의 노조가입을 거부해 왔던 행정관행이 수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서울고법 제5특별부는 지난 1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여성노조(위원장 정양희)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서울시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것. 서울여성노조는 99년 1월 10일 창립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번번이 반려했었다. 서울여성노조의 규약 중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를 노조의 구성원에 포함시킨 규정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제2조 4호를 위반했다는 이유. 여기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법조차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조법 제2조 1호에 정의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서울여성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 이에 대해 서울여성노조 정양희 위원장은 임시직, 계약직, 파견, 시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이직율이 높은 현실을 지적하고, "실직과 취직에 따라 노조원 자격이 수시로 뒤바뀔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범용)

2001년 9월 20일(목)

제 194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밝혔다. 사실 김 씨 발언은 '6·15 공동선언 이후 원수지간 관계를 끊고 잘 지내자'는 취지의 이야기. 그러나 우 기자가 못마땅해 한 것은 발언내용이 아니라 김 씨 출연 그 자체였다. 또 우 기자는 흔히 TV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을 "국군과 경찰에 대한 지나친 묘사"라고 주장했다. 우 기자가 '지나치다'고 우기는 장면은 △정부군이 지나갈 때 엄마가 아이 입을 막아 아이가 사망한 장면 △반란군 말을 쓰면 경찰에 끌려가 매맞아 죽는다고 엄마가 아이를 야단치는 장면 △좌우도 모르는 선량한 양민이 반란군으로 오해받고 숨어지내는 장면 △경찰이 반란군의 부인을 겁탈하는 장면들. 결국 우 기자는 <애기섬>을 "여순사건을 통일운동의 성격을 띤 것처럼, 그리고, 국군의 진압작전을 양민학살로 부각시킨 영화"라고 단정지어 버렸다.

< 2면에 이어짐 >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약품을 개발한 특허권자의 이익보다 인간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각국 정부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TRIPs Council)가 19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열렸던 회의에서 아프리카 대표들이 발의한 '강제 실시권, 차등가격제' 등을 안건으로 채택해,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가운데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조항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6월 회의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정부대표들이 "지적재산권이 민중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동의한 바 있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의기구로서 WTO(세계무역기구) 산하 조직이다. 이 회의는 주로 특허권이 각 나라에서 잘 보호받고 있는지, 법적 체계는 잘 마련돼 있는지 등을 주로 감시해 왔다.

하지만 지난 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과 건강권'의 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떠오르면서 '결코 양보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19일 열린 회의에서는 의료 공공성 강화와 연계된 지적재산권 조항을 검토해 초안을 작성하고, 이는 오는 1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회의에서 특허·지적재산권 문제를 건강과 결부시켜 논의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살인적인 약값' 때문이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최빈국인데, 약값은 북미·유럽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미·유럽·일본시장이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전체 아프리카가 1.5%밖에 차지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서방 제약회사들은 아프리카에 싼 가격으로 약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에서는 HIV/AIDS

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약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민의료연) 정혜주 공공의약팀장은 "약물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특허 때문"이라며, "서방 제약회사들이 특허를 이용해 독점시장을 형성하고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이어 "세계 상위 50위

권 이내 회사가 전세계 의약품시장의 90%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기간이 '하루' 연장될 때마다 평균 3억 원 이상의 이익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기업들의 특허권으로 인해 살인이 벌어지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투자협정·WTO 반대를 위한 국민행동'은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뒷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의약품 특허 결정 주권 보장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제실시권 보장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 의약품 관련 의료정책 수립 등을 정부와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회의에 촉구했다. (심태섭)

< 1면 '여순사건 영화'에서 이어짐 >

영화도 안 보고 멋대로 해석

우 기자는 작품의 주요 장면들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좌익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에, 기사의 논조가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정작 우 기자는 <애기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시나리오만으로 작품의 분위기를 추측한 후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조성태 전 국방장관은 <애기섬>이 "제작되어선 안 될 영화로 판단했다"면서도, "불만만 가치가 없어서 시나리오는 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반대운동단체 관계자도 "여순반란을 진압했던 군·경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기섬>을 반대한다고 했지만, 정작 시나리오는 보지 못했다고 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감독은 "월간조선은 앞뒤 맥락을 다 자른 후, 몇 분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내용만으로 83분의 작품을 판단하고 있다"고 월간조선의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작품도 한번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해석해 버릴 수 있는가"라며, "좌우를 떠나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데에는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월간조선에 한나라당 부화뇌동

월간조선 10월호가 18일 전국적으로 배포된 후, 장 감독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한나라당의 발빠른 반응이었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18일 "이러다가는 각종 반란사건 진압군인들은 양민학살자로, 반란사건을 일으킨 자들은 국가유공자로 판정받는 세상이 오는 것 아닌가?"며, <애기섬>에 대한 월간조선의 논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장 감독은 "어떤 근거로 완성되지도 않은 작품을 논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하고, "지역민의 순수한 정서를 대변한 영화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한 개인을 흠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심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김해준 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사건은 등급을 매기고 직접 검열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광범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번 사상시비에 휘말리면 이후 그와 비슷한 시도는 아예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순사건 희생자들은 사건발생 53년이 지난 올해에야 유족회를 결성할 수 있었다. 장 감독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여순사건 때 진압군이 우리 부모님을 죽였다"는 말을 감히 언급하지 못했던 이들의 한맺힌 53년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지 장 감독이 밝히는 작품의 제작취지는 간단했다. 그저 더 많은 사람들이 "여순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헌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결면 걸린다”

집회 및 시위의 '세계'에서는 경찰의 해석과 방침이 곧 법이다.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자체가 각종 집회금지조항을 규정해 놓아, 오히려 경찰에게 집회 및 시위를 금지·제한·해산할 수 있는 발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의 저급한 인권의식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갈수록 위축시켜, 이 나라를 '집회금지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허울뿐인 신고제, 사실상 허가제 오히려 통일연대가 '8·15 통일대추전' 행사를 집회신고 했을 때, 경찰은 이를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상당히 고심했다고 한다. 당시까지 경찰은 폭력시위 전력을 이유로 한총련과 관련된 모든 집회를 불허해 왔는데, 집회신고를 낸 통일연대에는 한총련이 가입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8·15 통일대추전' 행사를 원천 봉쇄하거나 불허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분리 개최돼 온 민화협 행사에 한총련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데다 통일 관련 행사를 놓고 학생과 경찰이 충돌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행 집시법이 신고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경찰의 허락이

있어야'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때 경찰의 허락은 객관적인 법률에 근거하기보다는, '한총련이 민화협 행사에 처음으로 참여하기로 한 사실'과 '학생과 경찰이 충돌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존했다. 이는 역으로 당시 경찰이 판단을 달리했다면, '8·15 통일대추전' 행사는 불허될 수도 있었다는 뜻. 실제 한총련 단독으로 계획했던 8월 14일 용산 미8군 앞 집회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금지됐다.

결핍하면 '폭력시위 전력' 악용

집시법 제5조 1항 2호는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울 필요가 있을 때, 경찰은 폭력시위 전력을 내세우며 이 조항을 악용해 왔다.

올해 2월 21일부터 약 한달 보름 동안 주취자에 상관없이 부평지역에서는 대우차와 관련된 집회가 모두 불허됐다. 전날 화염병 및 폭력시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른바 '폭력시위우려조항'을 발동한 것. 마찬가지로 지난해 '민주노총 3대 요구 쟁취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5/29-6/2)' 등 민주노총 주최 집회들도 폭력시위우려 조항이 선택적으로 적용됐다. 민주노총이나 소속 연맹 주최의 집회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이유.

95년에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서울역광장에서 '세모녀 폭행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시민대회(2/18)'를 집회 신고했다.

이때 경찰은 "위 집회 참가인원 중 60-70%를 차지하는 한총련이 94년도에 총 27회의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며 금지 통고했다.

☞ 2면에 이어짐

'벌금내느니 감옥가겠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집행위원장 수감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애인이 벌금 납부를 거부해 수감됐다. 20일 오후 4시경 서울 지하철 1호선 구일역 부근을 지나던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고척교 검문소에서 연행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집행위원장이 수감된 이유는 지난 2월 6일 있었던 지하철 서울역 선로점거 시위 때문. 당시 박 집행위원장은 서울역에서 장애인 30여명과 함께,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약 40여분간 철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 박 집행위원장은 같이 시위를 벌였던 지체장애인 최옥남 씨와 함께 철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26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3백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를 하지 않은 박 집행위원장은 형이 확정됐다. 이후 박 집행위원장은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줄곧 기소중지 상태로 있다가 20일 검문소에서 불심검문을 받아 관할 경찰들에 의해 체포된 것.

박 집행위원장은 영등포구치소로 이송되기전 서울남부지청에서 "현 정부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서울역 선로점거는 이동권 보장을 바라는 장애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는데 정부와 사법부는 고작 벌금형으로 대응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박 집행위원장은 이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어떤 정책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금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저항하는 의미로 차라리 실형을 살겠다"고 밝혔다. 1급지체장애인인 박 집행위원장은 약 3개월 가량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심태섭)

<1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서 이어짐>

하지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회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5월 '원고의 회원단체인 한총련이 종전에 집회에서 수차 폭력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에서 폭력행사가 있을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

모호한 조항도 경찰 입맛대로

어렵사리 집회허가가 떨어지더라도, 집회 및 시위는 경찰의 자의적 법 해석으로 방해받기 십상이다. 지난 6월 제2차 민중대회 때 경찰은 대동령 캐리커처 만장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철거했다. 이어 경찰은 7월 3일 전교조 교사들이 신고된 집회종료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건설운동노조 조합원들은 신고된 인원보다 40여명이 더 참가했다는 이유로 각각 연행했다.

물론 집시법 제14조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신고

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어디까지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물음에 대해, 집회업무를 담당하는 종로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접촉은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경무과 책임"이라며, 질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경무과 홍보업무 담당자는 "집회는 정보과 소관"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결국 애매한 조항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속 시원히 들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집회 및 시위의 세계에 있어서 경찰은 언제나 일방적이다. 법에 대한 복종과 법 집행에 대한 순종만을 강요하지만, 정작 법 집행에 대한 문제제기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 따라서 집시법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일단 눈에 거슬리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제한하고 보는 경찰의 관행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 (범용)

'노동조건 후퇴 없이 5일 근무 도입해야'

민주노총, 조합원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

노동자들은 현 정부 임기 안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노동조건이 후퇴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소속 연맹별 조합원 706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연구소에 맡겼다.

민주노총이 19일 공개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조합원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현 노사정위 공약안이 제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서는 45.2%가, '연·월차 축소'에 대해서는 71.5%의 조합원이 반대했다. 또 쟁점 가운데 하나인 '주5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한 곳이 중소기업이므로 정부 지원을 통해 즉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48.7%에 달한 반면, "정부방침대로 5년에 걸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5%에 그쳤다. 또 생리휴가 폐지에 대해서는 55.1%가 반대했다.

한편, 조사에 응한 조합원들은 현행 노사정위 공약안대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이를 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88.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여론 조사 결과를 반영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10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 때 투쟁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심태섭)

인권운동사랑방 9월 월례포럼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어떻게 볼 것인가"

- ☞ 때 : 2001년 9월 22일(토) 오후 3시
- ☞ 곳 :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405호 (한우리교회)

☛ 문 의 ☛
 인권운동사랑방 김영원 (☎02-741-5363)
 인권운동연구소 배경내 (☎02-3675-5363)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대용노조 CCTV 철거투쟁 승리임박

회사 대표, 국감장에서 CCTV 철거 약속

'작업장 내 CCTV의 설치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파업을 벌여왔던 대용노동조합(위원장 박성준, 아래 대용노조)에게 "CCTV를 철거한다"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20일 영산강 환경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대용주식회사 정희철 사장이 "작업장 내 CCTV를 철거하겠다"고 밝힌 것.

그 자리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김라기 의원 등은 "지금 노동조합이 CCTV를 철거하면 파업을 푼다고 하는데 왜 철거하지 않나?", "CCTV 문제로 파업을 한 것은 정당한 파업인데 왜 불법 파업이라고 하나?"라며 정 사장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작업장 감시를 이유로 한 파업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제 대용노조에게는 CCTV의 철거를 최종 확인하는 작업만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사측의 약속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대용노조 박성준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작업감시 행위의 부당한 측면이 부각됐기 때문에 사장이 노조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CCTV 철거 소식이 전해지자 조합원들은 매우 기뻐했다"며, "추석 전에 사업장에 복귀해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영옥 사무국장은 "국정감사에서 대용의 CCTV 설치가 부당한 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이들이 (CCTV의 설치를) '작업장에서 인권침해'라고 해석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CCTV에 의한 작업감시는 버스·은행·백화점 등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여기에 완전히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공동대

표 김광수 등, 아래 연대회의)는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대용상황'을 설명하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추궁토록 요청한 바 있다.

이때 환경노동위에 전달한 자료에서 연대회의는 "작업감시는 고용주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 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약조차 어긴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심태섭)

〈논평〉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

테러와 이용호 사건 등에 온통 이목이 쏠린 요즘, 읍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 전하고자 한다. 98년 여름 우리는 충남 연기군의 부랑인수용시설 '양지마을'에서 참혹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목격했다. 납치나 다름없는 강제수용, 쇠창살 속의 불법감금, 강제노동과 착취, 구타와 가혹행위 등 수용자들에게 그곳은 거대한 '노예선'이었다.

양지마을의 실상이 폭로된 결과, 2백여 명의 원생들이 자유를 찾았고, 양지마을 원장은 구속·처벌됐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었다. 수년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탓에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기 힘든 피해자들에게는 마땅히 '재활'의 수단이 필요했다. 급진적 배상이 시급했던 이유도, 그것이 새출발을 위한 '물질적 기반'이자 '희망의 씨앗'이었기 때문이었다. 99년 7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던 피해자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 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후 2년이 넘도록 법원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지난해 12월 이후론 단 한 차례의 심리공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지연의 책임을 관할관청인 '연기군청' 쪽에 넘기고 있다. 소송 제기인들의 '수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무려 9개월 전에 요청된 자료를 지금껏 제출하지 않는 연기군청 쪽의 태도를 어떻게 납득하고 있는지 재판부에 되묻고 싶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재판부는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불과 6개월 전, 대법원은 '민사사건 관리 모델' 지침을 만들어 일선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민사재판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지마을 재판에서는 그러한 지침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양지마을 퇴소 후 3년, 손해배상제기 후 2년이 지나면서, 양지마을 피해자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소송결과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 "새 삶을 살아보겠다"던 희망을 접은 채 다시 '부랑인'으로 돌아간 사람들. 양지마을 피해자들에게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는 곧바로 '생존의 권리'이다. 재판부에 거듭 묻는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할 텐가?

〈해외소식〉 미 보복전쟁 선언 후 악화되는 아프간 민중의 삶

심각한 굶주림 뒤로 하고 구호단체들 출국

전쟁 반대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미국정부는 지난 9월 11일 테러에 대응하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테러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존중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테러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세계와 인류를 지키는 길은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정책과 군사적 테러를 포기하고 인류 상생과 공존의 길을 가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보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대신, 테러반대 뿐만 아니라 전쟁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현재 진보넷에서는 '테러반대, 전쟁반대, 반전평화 메시지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http://antiwar.jinbo.net/mail/form.php>로 접속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통령, 관련 장관 및 기관,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9·11 테러'에 대해 미국이 보복전쟁을 선언한 후,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삶은 더욱 황폐해지고 있다.

유엔이 운영하는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은 3년째 가뭄에 시달려 왔고, 올해 말까지 전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5백50만 인구가 전적으로 구호에만 의존해서 겨울을 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영국에 본부를 둔 자선구호단체 크리스찬 에이드의 아프가니스탄 책임자 크리스 버클리는 현재 서방의 모든 구호단체가 속속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상황 속에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굶주림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고립된 마을마다 아이들과 주민들은 영양실조와 콜레라로 죽어가고 있으며, 궁여지책으로 시작한 아편 재배도 탈리반 정부에 의해 금지됐다고 전했다.

버클리는 또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85%는 농민이며, 대부분이 신문, TV, 라디오를 갖고 있지 않고, 심지어는 우편 서비스조차 존재하지 않아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나 탈리반의 불상과괴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성급한 보복전쟁을 반대하며, 이번 사건에 편승해 엉뚱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지 메거진'의 조지 몬비엣은 "만약 오사마 빈 라덴이 없었더라면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을 만들어냈을 것"이라며, "지난 4년간 오사마 빈 라덴은 MD를 추진할 때마다, 방위비 증강을 주장할 때마다, 주요한 조약을 파기할 때마다 인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몬비엣은 현재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근거로 그를 주범으로 단정짓고 있지만 테러범과 오사마 빈 라덴과의 명확한 연관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뿐만 아니라 테러범들의 기지로 추정되는 이라크와 레바논 베카 지역도 공격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 차관보 포울 울포윅, 부통령 덕 체니의 보좌관 르위스 리비 등이 대표하는 워싱턴의 강경파들은 대통령에게 "이번에 사담 후세인을 권좌에서 몰아낼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자제를 촉구하는 전세계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옥스팜 영국,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영국지부 등을 포함해 14개의 영국 주요 자선구호단체들은 미

국의 성숙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들은 성명서에서 "미국에서 수천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우리는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유엔고등판무관 실 루드 루버즈도 미국이 전쟁을 계획할 때는 수백만의 빈곤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에게 끼치게 될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 92년과 94년 이스라엘 대사관 테러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유대인 단체들이 나섰다. 이들은 18일 미국이 복수의 길을 선택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테러에 남편을 잃은 말라부드 씨는 "우리가 선택할 길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라면서, "복수는 좀더 많은 희생만을 가져오며 정의만이 이러한 테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알림〉 인권운동사랑방, 시민인권상 수상

21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재승)로부터 제9회 시민인권상을 받고, 상금으로 1천만원 을 수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사업회 최영도 운영위원장은 "사회적 금기에 대해 용기있게 부딪힘으로써 인권문제의 지평을 한뼘 한뼘 넓혀가고 있는 이 단체의 활동을 주목하고 격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선정이유를 밝혔다.

류은숙 대표권한대행은 감옥, 군대, 피차별 소수자, 어린이 등등 새로운 문제의 도전과 사회권이라는 광대한 분야에서 "진보적 인권운동과 활동가 중심주의라는 믿음을 나침반 삼아, 철저히 민중으로 내려가는 새로운 차원의 인권운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사회진보연대 김진균 대표의 축사가 있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시그 노조, "파주에서 일하고 싶다"

노조협오증이 부른 또 다른 장기파업

"파주에서 일하겠다는 것은 곧 노조 집행부도 파주로 오겠다는 것 아니냐?" 시그네틱스 양수제 대표이사께서 지난 8월 10일 시그네틱스 노조(위원장 정혜경, 시그 노조)와의 실무면담 과정에서 내뱉은 말. 그것은 분명 노조협오증이였다. 이날 양 대표이사의 발언은 '파주공장으로 가서 일하겠다'는 노조의 요구와 '파주공장에서는 절대 안 시킨다'는 사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24일 현재 파업 64일째.

반도체 조립업체, 시그네틱스

반도체 조립업체 시그네틱스는 66년 미국자본 필립스에 의해 세워졌다. 이후 거평그룹이 95년 인수한 후, 96~97년 2천억 이상을 투자하며 파주에 제2공장을 신설했다가, 98년 과다부채로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이때 시그 노조는 △임금동결 △상여금 반납 △주택자금 등 중단·축소 △퇴직금 누진제 폐지 △호봉승급 6개월 분 반납 등 워크아웃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임여인력 발생시 파주공장으로 배치전환한다'는 합의서를 사측과 체결했다. 한편 사측은 서울공장을 매각하여 부채를 갚고, 서울공장의 시설과 장비는 파주공장으로 이전한다는 약정서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체결했다.

이주불가자 모집, 사실상 인원정리

당시 노조원들은 '서울공장이 매각되

면 자신들은 당연히 파주공장에서 일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들의 소박한 바램은 지난해 6월 영풍그룹이 시그네틱스를 인수하며 뒤틀리기 시작했다.

영풍그룹은 '서울공장 이전시 이주불가자로 지원하는 이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600%를 지급하고 실업급여 혜택을 주겠다'면서, 2000년 11월 30일자로 이주불가자 모집공고를 냈다. 그러나 공장이 언제 어디로 이전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이주불가자를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의 '인원정리'였다. 이에 노조에서 강력히 반대했지만, 사측은 올해 4월까지 이주불가자를 계속 모집했다.

노조 임은옥 교육선전국장은 "당시 회사는 이주불가자 지원자에게 '당장 나가자 않으면 위로금도 없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며, "이때 반강제적으로 회사를 떠난 조합원이 1백8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안산공장행, 정리해고 수순밝기

영풍그룹의 인원정리 작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월 1일 영풍그룹은 서울 노동자들을 상대로 서울공장을 8월 이후 안산으로 이전한다고 통보하고, 안산에 곧바로 제3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안산공장의 규모가 서울공장의 1/3 수준이며, 사측이 안산공장에 대해 어떠한 투자계획도 없다는 것. 임 교육선전국장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안산공장으로 가면 임여인력이 생길 수밖에 없

2001년 9월 25일(화)

제 194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정리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9천여 평 부지의 파주공장은 6백70여 평의 유휴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 유휴공간이라면, 굳이 안산에 제3공장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 또한 올해 초까지 파주공장은 계속해서 사람을 뽑았기에, 사측의 결정에 따라 서울 노동자들이 파주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보인다.

이에 대해 사측은 △파주공장과 서울공장의 작업공정이 다르다 △파주공장의 유휴공간은 이미 투자계획이 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안산공장에도 투자를 하겠다는 식의 논지를 펴고 있다. 하지만 "안산공장으로 가면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노조의 물음에 대해, 영풍그룹은 "그건 모르겠다"며 고용안정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 와중에 영풍그룹은 23일 서울 노동자 전원을 안산공장으로 전보 발령하고, 같은 날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파주로 가고 싶다"

시그네틱스가 파주이주 희망자를 전원 수용하는 것. 이것이 98년 워크아웃 상태에서 고통분담을 결의했던 시그 노조의 주요한 요구사항이다.

하지만 영풍그룹과 시그네틱스는 지난 6월부터 조합원 91명의 임금 50%와 조합비 전액을 가압류하고 있으며, 시그 노조 임행관 부지회장 등의 집을 가압류했다. 지금까지 파업투쟁에 폭력, 성추행 등을 일삼아 왔으며, 24일 아침에는 정혜경 지회장의 남편을 긴급체포하고, 지회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시그 노조는 오는 26일 산업은행본점 앞과 영풍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영풍그룹의 노조협오증이 계속되는 한 이들의 투쟁도 계속될 것이다. (범용)

◎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당당하게', '스스로' 권리찾기

우리는 '무슨무슨 사각지대' 하면 떠오르는 노동자가 있음을 안다. 이름하여 불안정노동자, 정치경제학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소위 상대적 과잉인구이다. 완전실업·반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임시노동자, 일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비정규노동자, 불안정노동자, 주변부노동자, 실업노동자 등등. 이들은 일할 권리에서, 노동3권에서, 생활권에서 여전히 그리고 점점 더 배제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동거 10월 26~28일 '민중복지와 노동자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을 펼친다.

장애노동자는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이주노동자는 '연수취업제 폐지', 비정규노동자는 '비정규직 철폐·노동법 계약저지', 실업노동자는 '안정된 일할 권리', 산재노동자는 '완전한 보상·재취업 보장' 등 각각의 노동자가 처한 현실에서 제기되는 특수한 요구도 있지만, 이들 모두가 힘주어 주장하는 것은 '일할 권리', '노동3권 완전보장', '근로기준법 준수'이다. 참으로 익숙한 구호다. 그야말로 노동자의 기본권이 아닌가.

물론 이것이 모두는 아니다.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무엇보다 '노동권'을 강조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노동자생활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구비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노동권의 기초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불안정노동자들이 모여 노동권을 넘어 생활권을 찾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스스로 찾아' 가겠다는 말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한마당을 충분히 주목해야 한다.

이 사회는 노동자들이 모든 권리에서 점점 배제되어 가는 것과 비례하여, 소수의 자본가에게 더욱더 부가 집중되고 있다. 이게 소위 빈익빈부익부 아닌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력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노동자·민중은 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있는 한켠에 왜 단시간노동자와 실업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가. 노동시간이 단축된다지만 살인적인 노동강도는 왜 나아질 전망이 안 보이는가. 이유는 하나다. 사회적으로 축적된 부를, 자본은 소수자본(가)에 집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자를 자르기 때문이다. 신기술 도입으로 노동이 편해지기보다는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거나 아예 노동에서 배제되는 사태를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한다.

사회적으로 축적된 부는 사회로 돌려져야 한다. 이 사회의 어느 구성원도 사회적 필요노동시간만큼의 노동을 통해 생존할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권리가 박탈되는 유일한 이유는 자본의 탐욕이다. 이 탐욕을 제어하고, 그만큼을 노동자·민중의 혜택으로 돌려내는 것, 부를 사회화시키는 것, 이것이 복지의 출발이다. 10월 말, 불안정노동자의 권리선언에 귀기울이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주간인권호름

(2001년 9월 17일 - 9월 24일)

1. 선택하라! 항복 아니면 죽음...

미 정보기관, 미국테러 사건에 이라크 연루 가능성 흘러(9.18) / 미 국방장관, '1개 이상의 국가가 지원했을 가능성 있다'(9.18) / 미 국방장관, 보복전쟁 작명 - '무한정의 작전'(9.19) / 부시 상·하원 합동연설, "우리와 함께 하든지 테러분자들 편이 되든지 둘 중에 택하라"(9.20) / 부시, 빈 라덴 자산 동결(9.24) / 미국, 파키스탄과 채무연장 협정 맺어(9.24)

2. 아프가니스탄, '지하드 전사' 30만명 동원

아프간 최고지도자, "명확한 증거·경제제재 해제·제3국 재판 보장해야 빈 라덴 넘긴다"(9.19) / 아프간 성직자 회의, '라덴에게 자발적으로 떠날 것' 요구(9.20) / 아프간 국방장관, "성전 경험 있는 30만명 동원"(9.24)

3. '테러 반대 평화살아' 미온 놔 잡아내자'

미 행정부, 테러혐의자에 무제한 도청·기소시한 규정 없애는 등의 '반테러 동원법' 제정 움직임(9.19) / 미 의회 상·하원 법사위, '반테러 동원법' 최우선적으로 다루기로(9.19) / 정부, '국가 대 테러지침' 보다 강화된 '테러방지법' 제정하기로(9.21)

4. 보복전쟁 반대

가톨릭평화사, 미국 테러참사 희생자 추모 및 보복전쟁 반대집회(9.18) / 천주교사제단·민족문화작가회의·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전쟁반대' 성명 잇달아(9.19)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군사작전 연합이 생기면 아프간 난민 돕기 위해 인도주의 연합' 촉구(9.20) / 파키스탄, 보복전쟁 반대 격렬시위 - 4명 사망 50여명 체포(9.21) / 파키스탄, '미군영사용 허용, 지상군진입도 협력정신 따라 검토'(9.23)

5. 미국의 우격다짐의 결과

일본, 자위대 미군보호 목적 무기사용 허용 법개정 추진(9.19) / 아랍에미리트연합, '아프간 탈레반 정부와 단교' 결정(9.22) / 사우디, 미 군사기지 제공요청 거부(6.23) / 사우디, 아프간 탈레반정부와 단교검토(9.23)

6. '무한 안보 작전'의 피해사례

남·북·해외 범민련, 6·15 공동선언 이행문제 강조하는 새 강령·규약 발표(9.18) / 검찰, '민경대 방문록' 강정구 교수 기소(9.21) / 검찰, 화염병 던진 대학생에 손해배상소송 청구(9.21)

7. 노동자, 자주적인 조직 꾸릴 수 있다

서울고법, '조종사노조 적법'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9.18) / 서울고법, '실업자·구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판결(9.19) / 환경노동위 국감, '장애인에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60만원, 장애인 월평균 임금 44만원'(9.18) / (주)대용, 환노위 국감에서 CCTV 철거의사 밝혀(9.20)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9월 26일(수)

제 194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위장 집회가 판친다”

“매일 건물 앞에 와서 집회를 하나까 은행에서도 한 달 짜리 집회 신고를 냈더군요. 이제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할지...” 시그네틱스 노조 정상우 조직 부장은 지난 24일 집회신고를 내려갔다가 신고를 못하고 돌아왔다.

시그네틱스 노조는 지난 8월부터 시그네틱스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오는 29일부터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본점이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신의 건물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집회장소를 신청한 것이다. 집회는 대부분 ‘주장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열리기 마련인데 이처럼 집회할 장소를 잃어버리면 집회를 여는 사람들은 맥이 탁 풀려 버린다.

해당기업, 집회장소 선정

이 같은 경우는 비단 시그네틱스 뿐이 아니다. 건설운송노조도 마찬가지로 경우를 당했다. 건설운송노조는 ‘노조 인정, 사업주 구속·처벌’을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서울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해왔다. 8월 초까지는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했으나 8월 초 집회기간을 연장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같은 장소에 레미콘 회사 유진개발이 집회신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건설운송노조 윤봉하 조직부장은 “사측에서 집회신고를 했다는데 9월이 다 지나가도록 실제로 집회가 열리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다”며 “이는 분명히 집회방해 목적으로 허위·위장 집회신고를 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진개발 관계자는 “집회신

고는 12월말까지 내놓은 상태며, 1주일에 한 번 정도 회사이전 홍보와 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개발은 99년에 광화문 미 대사관 근처로 사무실을 옮겼는데, 이전 후 2년도 더 지나서 회사이전 홍보를 한다는 말이 쉽게 납득되지는 않았다.

경찰이 ‘위장집회신고’ 종용하기도

한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집회가 있을 때 집회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집시법 8조다. 집시법 8조는 “시간과 장소가 겹침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경찰이 두 집회가 서로 목적으로 보아 상반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권 차장은 또 “많은 관련단체들이나 민간기업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집회를 막으려고 허위·위장집회를 장기간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심지어는 경찰 스스로 이 조항을 악용해 사회단체들의 집회를 막는 경우도 있다. 아셈이 열린 지난해 10월 강남경찰서는 강남일대 주요도로에 있는 공기업·민간기업 등에 연락을 취해 회의장 및 숙소주변 지역에 집회신고를 하도록 요청해 집회를 원천봉쇄한 바 있다. 이는 일반인론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당시 경찰은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아셈 기간동안

사회·노동 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먼저 집회신고를 해달라”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집회신고를 낸 기업들 대부분은 경찰 측 요구에 따라 ‘집회방지용’ 신고를 내기만 했지 실제 집회는 거의 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회기간이 1주 이상 신고된 집회 가운데 36.7%는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집회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로경찰서 정보계 관계자도 “지금은 노조·사회단체나 기업들이나 할 거 없이 대부분이 1개월 이상 장기집회신고를 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주변이나 주요 집회장소에는 여러 단체들이 한꺼번에 장기집회 신고를 하려고 해, 1주일 단위나 1개월 단위로 신고하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집회 방해용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집회 방해목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절박한 호소, 불법 뒷에 걸린다”

건설운송노조 윤 조직부장은 “명백하게 집회방해를 목적으로 낸 집회신고는 타인이 집회를 열고 싶어도 열 수 없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조합원을 모아 서울에 와도 집회를 열 만한 장소가 없어 ‘여의도공원’ 같이 엉뚱한 곳에서 집회를 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 조직부장은 덧붙여 “관련단체나 기업들이 ‘집회방해용’ 허위·위장 집회신고를 한다면 생존권 투쟁에 직면한 노동자·민중들은 결국 ‘불법 아닌 불법’ 집회를 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집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태섭)

박경석 씨가 풀려난 이유

목회자 벌금대납, ‘측은지심 벗어나 장애인 인권에 관심필요’

지하철 선로를 접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다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지않아 노역형을 살던 장애인 이동권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이 지난 22일 영등포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떤 정책도 마련하지 않는 데 저항하는 의미로 “차라리 노역형을 살겠다”고 밝힌 박 집행위원장이 풀려난 것은 영등포 구치소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목사들이 지난 22일 벌금 2백89만원을 대납했기 때문이다.

벌금대납에 앞장선 목사는 벌금대납경위를 묻는 기자에게 “영등포구치소에 박 씨와 같은 1급지체장애인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라며,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는 구치소에서 노역형을 사는 사람을 목회자로서 외면할 수 없었다”고 벌금대납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방을 방문해 대화를 한 후, (박 씨가) 얼마전 세종문화회관 앞 버스 안에서 장애인 문제를 호소하는 뉴스에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집행위원장은 “목회자로서 측은지심을 발동하며 벌금을 대납한 것은 이해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통윤의 음란함을 고발한다!

검열반대 공동행동, 28일 ‘음란 페스티벌’

예 정통윤을 폐지해야하는지를 알리는 색다른 ‘페스티벌’이 열린다.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퇴폐적이고, 자퇴생들은 모두 불량 청소년이고, 산부인과와 관련된 성 지식이 불건전하며, 정부비판자는 반사회적 빨갱이다”고 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오히려 ‘음란’하다고 주장하는 ‘음란 페스티벌’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

진보넷, 문화연대 등 22개 인권·사회단체가 참가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검열반대공동행동)이 28일 오후 4시 인사동 서울은행 앞에서 ‘음란 페스티벌’을 연다. 검열반대공동행동이 2주에 한 번씩 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데마집회’ 4번째 주제는 ‘음란’으로, 김인규 웹아트·이반 동호회 삭제·아이노스쿨 폐쇄조치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정통윤의 행위가 ‘음란’한 권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빛낸 말이다.

검열반대공동행동 참가단체인 문화연대, <대자보>가 주관하는 ‘음란 페스티벌’은 ‘아시시... 퍼포먼스’, ‘힘을 합쳐 음란물 만들기’ 등을 통해 인터넷 정보를 ‘음란’이라는 추상적 잣대로 재단하는 정통윤의 행위가 검열임을 밝힌다. 페스티벌 문의 : 02-773-7707

(심보선)

박 집행위원장은 “장애인 이동권 등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 문제는 벌금대납 등 개인차원 접근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지난 2월 6일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지하철 서울역 선로를 접거했다가 장애인 30여명과 함께 철도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지난 6월 26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심보선)

(주)대용, CCTV 철거

작업장 ‘노동자 감시는 인권침해’ 확산 계기

(주)대용이 작업장 내 CCTV를 철거함으로써 CCTV철거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대용노동조합이 승리를 거뒀다.

(주)대용은 지난 24일 저녁 8시 작업장 내외부에 설치한 CCTV 7대를 모두 철거했다. “감시없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자감시 문제로 파업을 진행한 대용 노동조합(위원장 박성준)은 25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영산강 환경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주)대용 정희철 사장이 “작업장 내 CCTV를 철거하겠다”고 밝힌 후 4일만에 CCTV가 철거된 것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영옥 사무국장은 “작업감시는 버스·은행·백화점뿐만 아니라 사무직노동자도 그 대상으로 한다”며 “CCTV라는 수단 말고도 전자우편·전화 등의 도·감청, 위성 위치추적시스템, 생체인식기 등 그 종류와 범위는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대용노조 박성준 위원장은 “CCTV 철거 파업이 승리한 것은 인권단체연대회의 등이 지원활동을 펼치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작업장 감시문제에 대해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 안고 함께 싸웠기 때문”이라며 “첨단기술을 이용한 노동자 감시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용노동조합은 지난 8월 28일 CCTV철거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주)대용은 이에 대해 직장폐쇄를 하고, 비조합원들을 동원해 ‘CCTV가 회사를 살리는 길’이라는 내용으로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등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북지역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23일 ‘노동감시반대·대용CCTV철거 전북공동대책위’(공동대표 문규현등)를 꾸려 (주)대용의 CCTV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며, 이 문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해왔다.

한편 민주노총은 9~10월에 걸쳐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감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 이 결과를 분석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올 가을부터 단체협상을 하는 산하 노조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비정규노동자, 투쟁은 계속된다

파견철폐공대위 50차 수요집회, "파견제는 현대판 노예제도"

"아침부터 새벽까지 몸 버리고 속 버리고 일했는데, 이제 와서 필요 없다 이제 와서 나가라니 웬 말이나. ... 힘 있는 자 보호하고 힘 없는 자 무시해도 되는 건가."

26일 점심 무렵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울려 퍼진 노래. 그곳에는 이 노래가사 하나하나가 몸에 와 박히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다. 지난해 9월 20일부터 시작한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수요집회가 1년을 넘겨 50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애초 수요집회는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발하고 이 제도를 없애자는 요구를 내걸고 시작됐다. 수요집회가 해를 넘기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삶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방송사에서 차량운전을 10년 넘게 했던 방송사 비정규노조 주봉희 위원장은 파견법 시행 2년이 되던 지난해 6월 느닷없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1차집회부터 단골로 참여해온 주 위원장은 "파견제는 노동자 공급사업을 합법화해 사실상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학습지 산업노조 이소영 위원장은 "밤늦게까지 밤이 부르드도록 집집을 옮겨다니며 정식휴가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통을 토로했다. 최근 법원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들이 나온 것에 대한 규탄도 잇따랐다.

2001년 9월 27일(목)

제 194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현재 비정규직 투쟁의 선두는 아무래도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 한국통신계약직 노조 한창원 쟁의부장은 "언젠가 정규직화될 거란 희망에 참고 일했는데, 작년 12월에 대량 해고를 당한 후 지금까지 싸워왔다"며, "오랜 투쟁으로 무척 지치지만 비정규노동자들 모두 절대 포기하지 말자"며 힘을 북돋웠다.

수요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박문진 부위원장은 "비정규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건 돈이 없거나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동의 유연화를 최고로 여기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이재웅 서울본부장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 수요집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주영)

“전쟁반대! 전쟁지원도 반대!”

정부가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보복전쟁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26일 민중연대, 소과개성국민행동 등 8개 연대단체들은 제2차 연대집회를 열어 미국의 보복전쟁에 반대하고 한국의 전쟁지원에도 반대했다.

이날 집회에서 통일연대 한상열 대표는 이번 테러로 죽은 사람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이번 테러는) 미국의 오만한 패권주의가 낳은 자업자득"이라며 "미국은 이번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근본적으로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농 강병기 사무총장은 "한국정부가 노동자·농민의 요구는 외면하면서, 미국의 요구에는 즉각 반응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방향을 비판했다.

한편 27일 3백여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전쟁반대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범용)

“장애인, 너희들은 집회하지마!”

경찰, 불법집회 전력 이유로 집회 불허 통고

집회 때마다 경찰의 극심한 제지를 받아왔던 장애인이동권연대(공동대표 박경석 등)가 이번엔 아예 집회 불허 통고를 받았다.

26일 종로경찰서 측은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실로 찾아와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지난 7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8월에 버스를 점거해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 및 폭력을 행사한 바 있어 27일 열릴 집회 시에도 불법 집회가 명백해 금지 통고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종로경찰서 측은 또 "집시법 12조에 의거 장애인이동권연대 측이 집회를 열려는 광화문 앞이 법률에 규정한 주요도로에 해당돼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27일 오후 1시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광화문 앞까지 이동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시민 선전전'을 열 계획을 세우고, 지난 25일 집회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박경석 공동대표는 "이전 행동만으로 다음 집회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 명백하다는 경찰 측 주장은 납득하기가 힘들다"며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심태섭)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오늘날 경찰은 만만 먹으면 집시법의 갖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폭력시위우려·시간장소제한·시설보호 등의 집회금지조항, 신고·해산 규정, 금지통고와 질서유지선 제도 등 현행 집시법에는 갖가지 독소조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집시법, 잘못된 출발과 유신개악

62년 12월 31일 제정된 집시법은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제정 당시 신고·금지통고·이의신청·해산 등 집시법 제도의 뼈대가 만들어졌으며, 이미 △일출선·일몰후 △대사관 등 2백미터 이내 △주요도로 △중복집회 등 집회금지 조항이 존재했다.

이후 집시법은 유신독재의 시작과 함께 73년 3월 12일 대대적으로 개악됐다.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원 이외에 주최자 및 연사의 주소, 성명, 직업, 연제 및 연설의 요지 등 집회신고 항목이 대폭 늘어났으며,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폐지됐다. 집회신고시간도 48시간 전에서 72시간 이전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한 집회금지 사유로 '현재지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신설됐으며, 이는 89년 전면개정 때까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원천금지 조항으로 악명을 날렸다. 그 외에 집회 주최자 금지행위의 목록에 △관공서, 군부대, 학교, 연구기관, 도서관, 의료기관 등의 주변에서 업무나 학업에 지장을 주는 소란행위 △교통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교통소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5공 쿠데타 후 다시 개악

73년 12월 18일 72시간 전 집회신고 규정이 48시간으로 다소 완화된 집시법은, 80년 12월 18일 국가보위입법회의 시절 또 개악됐다. 시위의 개념이 확대되고, 이전에는 옥외집회만 허용됐던 경찰관의 출입이 모든 집회로 확대됐다. 이는 곧 집회금지 및 통제 대상이 확대됐다는 뜻.

62년 집시법 제정 이후 거듭된 개악에 따라, 집시법이 전면개정된 89년까지, 거의 모든 반정부 집회는 예외없이 불허됐다.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야 할 집시법이 오히려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됐던 것.

87·88년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보고서는 당시 집시법에 대해 "치안유지"라는 명분하에 특히 반체제적 정치운동, 정권비판 활동, 노동운동 등 그 시대의 정부정책에 장애가 되는 활동을 권력적으로 배제하는 '치안형법'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반민주 집시법 개정, 89년 불가피

그러나 80년대 계속해서 성장한 민중운동은 87년 직선제와 88년 여소야대 정국을 쟁취하고 각종 반민주악법의 개폐문제를 전면화했다. 또 89년은 전민련, 전농, 전교조가 결성되는 등 민중운동이 한껏 고조된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호법이 개정되고, 사회안전법이 폐지되고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됐으며, 집시법은 3월 29일에 전면개정됐다.

전면개정된 집시법은 △시위의 개념을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집회금지 사유를 대거 삭제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고 △금지통고에 대한 불복절차규정을 부활하고 △대사관 등 2백미터 이내 금지 규정을 1백미터로 완화했으며 △주최자의 준수사항도 대폭 축소했다.

경찰, 법 조항 악용은 여전

하지만 금지통고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집회금지 사유가 여전히 모호하며, 시간과 장소의 금지규정은 여전히 과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89년 주요 반정부 집회를 모두 금지하면서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집회는 선별허

가했다.

당시 7월 9일 경희궁 공원의 '전교조 탄압저지 및 합법성쟁취 국민대회'는 파키스탄, 오만 대사관 등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불허당한 반면, 4월 14일 같은 장소에서 상이군경회가 주최한 '민주화위장 좌경폭력세력 규탄궐기대회'는 허가됐다. 또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11월 5일 한국노총 주최의 '노동법개정 및 경제민주화 촉구 결의대회'는 무사히 치루어진 반면, 11월 12일 지역·업종별 전국회의의 '노동악법철폐 및 전노련 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는 불허됐다.

99년의 개악과 역사의 교훈

집시법은 89년 전면개정 후 3차례 수정을 거쳐 99년 5월 24일 또 다시 개악됐다. 당시 집시법 개정은 조용히 추진되는 바람에, 시민사회와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된 집시법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 거주자·관리자가 ...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를 집회금지 사유로 추가하고, 질서유지선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시설보호 조항은 올해 대우차, 효성 등 노동자투쟁 및 대학내 외부단체 집회 등에서 집회를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고, 지난 7월 11일 건설운송노조 집회에서는 질서유지선 제도로도 악용됐다. 당일 종로경찰서는 이용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과 시위용품들이 질서유지선을 벗어났다고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해 난지도 등으로 해산시킨 것.

결국 조금이라도 모호한 집시법 조항은 여지없이 경찰에 의해 악용되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 집시법의 역사는 민중들의 투쟁이 없이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대대적으로 침해당하는 오늘, 개악과 남용으로 점철된 집시법의 역사는 오히려 집시법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9월 28일(금)

제 194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다원성 반영 미흡”, 나머지 위원 선정 주목

국가인권위법이 공포된 지 4개월만에 국회는 4명의 인권위원을 추천했다. 24일 민주당은 유시춘 전 민주당 당무위원(상임)과 박노현 방송통신대학교수(비상임)를, 한나라당은 유현 이천시법원 판사(상임)와 김덕현 변호사(비상임)를 추천했다.

그러나 추천이유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먼저 각 당의 인권관련 활동을 하는 인권위원회는 신문기사를 통해 추천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거듭된 확인 결과, 민주당 이명식 부대변인은 “추천을 받아 당 지도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양섭 의원국장도 “총재가 포함된 지도부에서 결정했다”며, 추천기준에 대해서는 “인권위법에 규정된 기준에 준한다”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는 26일 성명에서 이번 추천이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론화나 수렴절차는 무시된 채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창국 기획단장을 포함해 추천자 5명 중 3명이 법조인이라며, 「사회의 다원성을 대표할 수 있고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다양한 구성원들로 조직돼야 한다」는 “파리원칙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대회의는 이번 추천과정에서 “인권위원 인선이 밀실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한다”면서, “국회에서 추천한 인권위원들 다수가 뚜렷하고 지속적인 인권활동의 경험을 가진 인사인지 사뭇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나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

한 유현 판사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정기승) 소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헌법은 △헌법이론과 관례연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다가 고통을 받는 사람 법률지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기업 창달을 위한 법률적 노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식에 대한 경고 등을 목적으로 98년 4월 22일 창립됐다. 헌법사이트(www.law717.org)에는 27일 현재 1백 53명의 회원이 수록돼 있다. 헌법은 국보법 개정에 반대하고, 시민운동을 기업인들을 괴롭히는 집단으로 여기며, 김근태·이부영·추미애 의원 등

을 ‘헌법적대 경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정관에는 △목적에 찬동하고 절차에 따라 가입한 국내 외 변호사를 정회원으로, △목적과 사업에 기여했거나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절차에 따라 가입한 시민을 명예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판사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회비만 내는 정도였으며,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헌법의 취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정 의원국장은 “과거의 경력이 어떠한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느냐”며 질문 자체를 일축했다.

국가인권위는 대통령 지명 4인·국회 추천 4인·대법원장 추천 3인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지명 3인·대법원장 추천 3인이 인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선될 6인의 인권위원의 전체적 면모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범용)

만화사랑방

이동수



법의 여신은 두 눈을 가리고 있다. 공평정대한 판결을 위하여...

우리 법관 나리도 두 눈을 가리고 있다...

제발 빨리 판결을!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지난 9월 4일 현직 경찰관이 “현행 집시법은 비현실적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논문을 써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영등포경찰서 김상희 조사반장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신고 내용이 너무 많아 법이 천명한 신고제 취지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됐고 △집회기간 규정 미비로 집회 방해 목적용 장기 허위 신고가 이뤄지고 있으며 △애매한 금지통고 사유와 집회 허용에 대한 경찰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등의 이유로 집시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집회자유확보 연대기구’ 움직임

사회단체들도 이번 정기국회에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 등은 9월 들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만들기 위해 사전모임을 하고 있다. 10월 초 연대기구 발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대사관·주요 도로 집회 금지 △야간 집회 금지 △주거 지역 집회 금지 문제 등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홍석인 간사는 “사회단체들은 집시법 가운데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독소조항들을 제거하는데 우선적인 중점을 두고 있다”며 “검·경의 집시법 ‘개악’ 움직임을 미리 막는 것까지 활동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자유권위원회 이창조 상임활동가도 “집시법 독소조항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현실이 우려된다”며 “여러 사회단체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정기국회 기간에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단체들은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로 정책팀을 꾸린 상태며, 여기서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 의원 소개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사회단체들이 만들 개정안에는 △집회금지 구역 축소 또는 폐지 △현재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야간집회에 대한 원천적 허용과 제한적 금지 △집회 절대 금지 조항인 5조에 대한 수정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소조항, 전면적 문제제기

사회단체들은 개정안 마련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행동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사회단체들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대사관 같은 집회 금지 구역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독소조항 ‘불복종’ 운동 △집시법 개정 행동주간 선포 △집시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다각적인 행동을 통해 집시법 개정 흐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집시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허위장기 집회 신고 △대사관 주변 집회 금지 문제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 의원 측 개정안은 허위로 장기 집회 신고되는 집회를 막기 위해 7일 단위로 집회 신고를 하게 한다. 또한 신고를 해놓고 고의적으로 집회를 열지 않으면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케 하고, 상습적 허위 집회신고자는 일정기간 집회를 신고를 받아주지 않게 하는 일종의 ‘징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의원들도 개정필요 공감

박 의원 개정안은 또한 건물밀집지역에서 대사관 주변 1백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은 사실상 ‘집회금지’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 대사관 입주 국가를 직접적 집회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대사관 주변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 측은 의원 발의 형식으로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대사관 주변 집회허용 조항은 전향적이나, 허위 집회 신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고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거나 집회를 열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일정기간 집회를 금지시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태섭)

2001년 집회·시위 관련 주요 검·경 발언

- 4월 29일 “경찰은 이제 시위현장에서 물러나야”(부평 대우 폭력 진압 후 서울경찰청 이동환 경감, 이부영 경찰청장에 공개 서한)
- 5월 24일 “변형된 1인 시위는 위법”(정광섭 종로경찰서장, 신문 기고)
- 6월 18일 “시위 따른 민·형사 소송 적극 지원”(대검공안부 전국 13개 지검에 ‘불법집단행동 피해 신고센터’ 설치, 소송 지원)
- 6월 18일 “서울 주요도로 집회·시위, 금지 또는 제한”(이팔호 서울지방경찰청장)
- 7월 5일 “지역별 집회참가 인원·규모 제한해야”(서울지검 공안2부, 서울과 같은 경우 4대문 안은 집회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해야)
- 9월 4일 “현행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영등포경찰서 김상희 경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집회·시위관리를 위한 경찰작용의 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에서)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9월 29일(토)

제 194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제1948호는 10월5일에 발행합니다. 추석,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타협? 무슨 타협? 노조는 없애야 돼!”

대영CC, 경기보조원 65명 집단해고

단체협약을 강그리 무시하고 노조파괴 공작에 열을 올리는 사업장이 있다. 바로 74만명 36층 규모의 대형골프장인 경기도 여주소재 대영루미나 CC(대표이사 감배권). 대영CC는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지난 16일 조합원 16명을 징계하고 21일에는 조합원 65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사건은 회사가 노조와의 협의없이 경기보조원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에서 시작됐다.

원래 편성된 조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14일부터 이에 따르도록 요구했다. 조별로 출퇴근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조편성은 도우미들의 생활패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노조는 ‘근무조건 변경시 사전에 노조와 협의한다’는 단행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징계와 해고로 대응했다.

대영CC 경기보조원의 진술은 어떻게 든 노조를 없애려는 사측의 의도를 보여준다. 경기보조원 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5시30분 경 경기과 앞에 경기보조원들이 모인 곳에서 감 대표이사의 협박발언이 이어졌다. “서비스업계엔 노조가 절대 필요없다”, “집단행동 주동자를 색출해 해고하겠다”, “노조간판을 강제 철거시키겠다”, “자율수칙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해고 조치하겠다.”

경기보조원 김△△ 씨는 15일 감 대표이사 경기보조를 하면서, 노조에 관해 대화하다가 감 대표이사에게 “노조하고 잘 타협해서 이 회사를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감 대표이사는 “타협? 무슨 타협? 노조는 없애야 돼!”라며 김 씨 말을 단호히 자르기도 했다.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형근) 조철 수

석부위원장은 “사측의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대영CC노조는 25일 성남노동사무소에 사측을 고소했

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노조를 적대시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한편 대영CC노조 (위원장 최병환)는 27일 쟁의발생 신고를 했다. (범용)

<논평> 헌법 회원이 인권위원이라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할 인권위원을 각각 2명씩 추천했다. 그런데 추천된 인권위원의 면모와 추천과정을 지켜보면 우리는 놀라움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우선, 이번 추천에서 드러난 양당의 태도는 오만하기 그지없다. 양당은 인권위원 추천과정 및 그 기준에 대해 한마디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인권위원은 임기 3년 동안 국가인권위를 좌지우지하며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활동할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때문에 국민들로서 선정된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선정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마땅히 알 권리가 있다. 각 당의 ‘인권전담기구’라 할 당내 인권위원회조차 “신문기사를 통해 추천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할 지경이니, 국민들은 ‘주는 떡’이나 받아먹으란 뜻인가?

무엇보다도 경악할 사실은 한나라당이 추천한 유현 판사의 이력이다. 우리가 유현 씨의 이력을 충분히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유 씨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번)의 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 헌법이 어떠한 조직인가? 98년 최장집 교수, 올해 한완상 교육부총리에 대한 색깔시비 등 ‘사상검증’이란 이름 아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해 온 단체다. 특히 99년 국정감사에서 제주 4·3사건 희생자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는 이유로 추미애 의원을 ‘헌법 적대자’로 낙인찍고 있다는 사실은 헌법의 ‘반인권적 행보’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이러한 조직의 회원이 어찌 감히 인권위원회에 끼어 들 수 있단 말인가? “아는 사람이 있어 회비만 내는 정도”였고 “헌법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유현 씨의 해명은 공색할 뿐 아니라, 공인이 되기에 너무도 무책임하다.

따라서 우리는 유현 씨에 대한 인권위원 추천을 당장 철회할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더불어 나머지 세 명의 인권위원 피추천자들의 경력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공개적인 확인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한다.

거듭 강조하건대, 인권위원은 그 어떤 공직보다도 ‘인권’에 대한 헌신성’이 요구된다. 김·경 등 막강한 권력기관을 상대로 소신있게 싸우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울곧게 지킬 수 있는 인물만이 인권위원 자격이 있다. 기득권의 울타리에 안주해온 사람보다, 권력에 맞서 인권옹호활동을 펼치거나 높은 인권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 소임에 적합한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제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맡겨진 6명의 인권위원 명단도 조만간 발표된다. 청와대와 대법원만큼은 여야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주문한다.

이달의 인권 (2001년 9월)

흐름과 쟁점

1. 테러응징의 다른 모습 : “내 편 안들면 재미없어!”

지난 11일 밤, 미국을 강타한 무차별 테러는 전 인류를 실의와 공포에 빠뜨렸다. 미 대통령 부시는 “21세기 첫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언명(9.12)했다. 미국 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암살도 불사하는 ‘더러운 전쟁’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9.16) 이어 미 정보기관은 이라크 연루가능성을 흘리는가 하면(9.18), 부시는 “우리와 함께 하든지 테러분자들 편이 되든지 둘 중에 택하라”(9.20)고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은 또 자신들에게 협조한 파키스탄과 체무연장 협정(9.24)을 맺어 ‘자기들 편을 든’ 나라에 확실한 사랑을 제 공하는 시범(?)을 보였다.

2. “전쟁반대! 전쟁지원도 반대!!”

‘9·11’ 미국 테러 이후 한국정부는 테러 희생자 ‘애도의 날’(9.14)을 했다. 김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모든 협력과 지원을 하겠다”(9.17)고 하더니, 군 관계자는 “비전투요원 파병을 검토”중(9.27)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미국의 보복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던 사회단체 회원들을 연행(9.17)해 난지도 등에 ‘버렸다.’ 미국의 ‘더러운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천주교사제단·민족문화작가회의 등의 성명(9.19)으로 계속되었고, 수백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의 더러운 전쟁지원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9.27)을 내기에 이르렀다.

3. 대용 CCTV 철거 - 첨단기술의 또 다른 용도, 노동자 감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에서 실업자로, 생활조건이 나날이 어려워지던 노동자에게 드물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노동자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노동통제강화의 수단에 삼는 CCTV철거를 요구 파업(8.28)을 했던(주)대용노조가 마침내 CCTV를 철거하는 데 성공(9.24)했다. 위성위치추적시스템, 생체인식기부터 전자우편·전화 도감청까지 첨단기술을 이용한 감시는 작업장 말고도 버스, 은행, 백화점 등 곳곳에 널려있다.

4. ‘단순추락사’, 알고보니 구타·사건 은폐, 축소의혹

97년 처음으로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당시 한총련의 투쟁국장이던 김준배가 사망했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단순추락사’했다는 김준배는, 프락치에 의해 경찰에 팔아넘겨졌으며, 자기를 잡으러 온 경찰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발표(9.3)했다. 당시 사망사건을 지휘했던 현직검사 정윤기는 자신은 진상규명위에 출두하지 않겠다(9.3)고 천명하고 나섰다. 또 진상규명위는 당시 구타에 가담한 경찰관을 ‘처음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중(9.3)이다. 또한 정 검사는 ‘목격자 조사’도 벌이지 않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짓는 등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5. 국가인권위원회에 추천된 헌법회원

여야 정당이 2명씩 인권위원을 추천(9.24)했다. 여야 어느 정당도 추천과정 및 추천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정당의 인권위원회 관계자조차 “신문기사 보고 알았다”고 말할 정도(9.27)였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추천한 유현 판사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원(헌번사이트 www.law717.org 참조)으로 밝혀졌다(9.27). 인권·사회단체들이 지난 3년동안 피눈물 흘리며 이룩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결핍하면 ‘사상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는 단체의 회원이 임성하게 된 것이다.

논평

- ‘노동통제 CCTV’를 철거하라(9.1)
-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9.8)
- 보복과 응징이 아닌 정의를(9.15)
- 양지마을, 그 기약 없는 피해회복(9.22)
- 헌법 회원이 인권위원이라니?(9.29)

인권이야기

- ‘뻔뻔한’ 퀴어들의 두 번째 커밍아웃(9.4/신윤동욱)
-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제... (9.11/정육식)
- 인권의 이름으로 옹호해야 하는 것(9.18/장여경)
- ‘당당하게’, ‘스스로’ 권리 찾기(9.25/김혜란)

기획

-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

- ①대송택 노동자, “TKP가 내 일터다”(9.12)
- ②7천 해고자에게 닫힌 ‘대화의 문’(9.13)
- ③(끝)비정규직 정규직화, “싸우기를 포기하면 얻은 것도 물거품”(9.14)

기획

-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 ①“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9.19)
- ②집회금지조항, “결명 결린다”(9.21)
- ③‘허위·위장 집회가 판친다’(9.26)
- ④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9.27)
- ⑤(끝)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9.28)

연재

-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 ②“알맹이 없는 대회로 만들 순 없다”(9.5)
- ③(끝)더반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 지향(9.13)

인권하루소식

2001년 10월

(제1948호-제1965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0월 5일(금)

제 194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밀실인선 지겹다” 1인시위 돌입

인권단체들 반발 속 인권위원 국회본회의 통과

여·야가 추천한 인권위원 4명에 대해 “인선과정과 기준을 공개하라”는 인권단체들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별다른 검증과정 없이 이들을 인권위원으로 표결 선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유현, 유시춘, 김덕현, 곽노현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상정되어 연기명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물론 추천사유조차 소개되지 않았으며, 이를 문제제기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결국 국회의원 2백32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들 모두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인권위원 중 특히 문제가 된 인물은 유현 전판사. 유 전판사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희장정기승, 아래 헌법)’ 소속으로 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을 크게 의심받아 왔다. 헌법은 그 동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고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해 온 단체이기 때문.

그러나 별도로 제출된 의안지에서조차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오히려 유 전판사의 이력에는 헌법 경력이 표시되지 않았다. 또 그의 인권경력은 김근태 국회의원의 ‘남영동 밀실 고문사건’에 대한 1심 재판 당시 경찰관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 유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동안, 국회 정문과 민주당·한나라당 앞에서는 이

에 항의하는 인권활동가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이들은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 아래 연대회의) 소속 활동가들. 1인시위에 앞서 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 다 망치는 인권위원 인선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곽노현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추천자들은 최근 10여 년 동안 인권 관련 활동에서 들도 보도 못한 인사들”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도 4일 성명을 발표해, “국가인권위는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겸비하고 사회 여러 영역

의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돼야 한다”며, 유시춘, 유현, 김덕현에 대해 “매우 적절치 못한 인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인권운동을 수행해 온 전문성을 갖춘 인권운동가들이 국가인권위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대회의는 여·야에 대해 “추천 사유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는 “남겨진 6명의 인권위원 명단 발표 시 여·야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따라 김광수 상임공동대표 등은 5일 오전 11시 청와대와 대법원을 방문해 인권위원 인선과정에 대해 연대회의의 의견서를 전달한다. 연대회의는 이미 지난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앞으로 면담요청서를 보낸 상태. 또 인권활동가들은 4일에 이어 5일과 6일에도 청와대와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한다. (범용)

만화사랑방



이동수

* 노조 탄압에 물불안가리는 '엽기정부'?

어느 청송 출소자에 대해 '짜고 치는' 재판

검찰, 청송 교도관 고소한 윤 씨 무고죄로 기소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형사지법 522호(담당판사 김홍준)에서는 청송 교도관들의 악랄한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한 윤치고 씨를 검찰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한 희대의 재판이 열렸다.

윤 씨는 청송감호소에 수감 중이던 93년 교도관들의 집단구타와 인권유린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가 무혐의 처리되자, 다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교도관들은 윤 씨에게 '가출소 내지 작업반장을 시켜 주겠다'며 재정신청을 취하하라고 종용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중 윤 씨는 94년 1월경 교도관 전재원 씨로부터 "재정신청이 취하된 지 알아라"는 말을 전해들었다. 이에 대해 마땅히 확인할 길이 없어 농담으로만 여겼다가, 윤 씨는 96년 10월 청송에서 가출소한 후에야 전 씨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윤 씨는 홀출단신 고아 출신으로 당장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기에 그후 1년간 변호사 단체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했다. 그리고 주위의 도움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한국문서감정원으로부터 '재정취하서가 위조되었다'는 감정서까지 받아냈다.

윤 씨는 이 감정서를 근거로 98년 3월 당시 교도관이었던 문용환, 전재원, 김영복 등과 여광석 소장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99년, 검찰은 들연 윤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윤 씨가 제기한 사건의 재판을 중단하고, 검찰이 뒤늦게 제기한 무고죄에 대한 심리만을 진행하고 있는 것.

이 재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신청취하서의 서명과 무인이 위조됐는지의 여부다. 검찰의 의뢰로 실시된 대검찰청 문서감정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위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다. 27일 열린 재판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양후열 씨는 '재정신청취하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임영화 변호사는 "무인 주변의 명암이나 무인의 모양, 서명글자의 압력을 조사했나"고 물었고, 이에 대해 양 씨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무인 주변의 명암이나 서명글자의 압력을 고려하지 않고, 글자와 무인의 모양만으로 동일인의 것이라고 판단한 것. 양 씨의 감정은 대검찰청의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변호사의 심문과정 내내 감정사진 한번 들춰보지 않고 계속 잠만 자던 검사는 자기 차례가 되자 감정인에게 "전문가로서 양심을 걸고 감정했나"는 시시껄렁한 질문을 하며 이날 심리를 마쳤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한국문서감정원 이송훈 씨는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상반된 감정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씨의 관찰에 따르면, 재

정신청취하서에 있는 3개의 무인상태에 드러난 무늬의 웅선에는 마찰하면서 문지른 흔적이 많이 나타나 있으며 이들 마찰흔적이 서로 같았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재정신청취하서에 있는 무인) 다른 지면에 압지된 무인을 은박지를 벗긴 검종이를 사용해 3, 4회 전사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이 씨는 "(재정신청취하서에 있는) 윤치고의 성명 3자 3개의 필적은 꼭꼭 눌러서 그린 필적"이라고 감정했다. 이는 글자의 한 획을 한번에 쓰지 않았다는 것으로, 재정신청취하서의 위조사실을 의미하는 것.

다행히 판사는 오는 18일 열릴 다음 재판에서 이 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임영화 변호사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 다 알지 않나"며 벌써부터 윤 씨를 위로했다.

교도관의 독직폭행에 대한 재소자의 법적 호소가 얼마나 어려운지, 대개의 출소자들이 생존의 위협 속에서 그 소송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는지! 윤 씨의 재판과정은 이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김보영]

검찰, '추가기소 없다' 약속 깨고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검찰은 지난달 2일 자진출두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구속해 이전 형 집행정지 잔여형기를 집행하더니, 잔여형기가 모두 끝나자 지난 3일에는 단 위원장을 추가 기소해 또 다시 구속·수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4일 1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위원장의 재구속을 규탄하고 단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단 위원장의 추가구속·수감방침은 (검찰이) 지난번 '추가기소를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행동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단 위원장의 이번 구속은 김대중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서울지검 공안2부는 단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교통법·노동조합관계법' 위반 혐의 등 모두 28개 정도의 혐의 사실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으로 알려졌다.

회견장에 나온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단 위원장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비단 단 위원장 하나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꼴"이라며, 단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후, 민주노총 허영구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및 임원 10여 명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5일 12시 청와대 인근 청운파출소에서 단 위원장 구속·수감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다. 또 8일부터 13일까지 '단병호 위원장 구속규탄과 석방촉구 투쟁주간'으로 선포하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의 공동행동 지침으로 △깃발 달기 △현수막 걸기 △규탄집회 열기 등을 결정했다. [심대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0월 6일(토)

제 194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노동과 복지는 권리다”

‘생산적 복지’에 문제제기,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열린다

실업자를 게으른 노동자로 낙인찍는 '생산적 복지', 혹독한 노동조건에 노출돼 한국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이주노동자, 불안정한 노동으로 노동시장의 주변에 내몰려 뒷골목을 헤매며 울음을 삼키는 노동자. 절반을 넘는 비정규노동자가 있어 끊임없이 근로조건에 하향조정 압력에 시달리는 정규직 노동자.

11일 10시30분, 느티나무 카페

이들 노동자들이 '일할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복지를 누릴 권리가 기본권이라고 천명하는 '민중복지와 노동자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이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시내 대학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등 진보적 사회운동단체들이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중복지와 노동자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 조직위원회 집행위'(민중복지 연대한마당) 발족을 한다. (☎ 02-774-8774)

'민중복지 연대한마당'은 조직위원 제안문에서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로 삶이 황폐화되고 고용과 임금조건이 악화돼 복지의 피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생산적 복지와 기업별 복지를 넘어 '공공적인' 복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대한마당을 통해 "생산적 복지의 허구성을 밝히고, 노동자가 수혜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권리의 주체임을 부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6월말부터 몇차례의 준비모임을 거쳐 집행위원회를 꾸렸고, 김세균(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장), 김용익(서울대대 교수), 박경석(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 등 5명을 공동대표로 위촉했다. 참여단체 대표 및 2백여명

의 조직위원이 최고 의사결정 단위를 이룬다.

'연대한마당'은 노동자 건강과 실업정책, 이주노동자와 의료보장 등의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한편, 비정규·이주·실업 노동자 마당, 사회복지기관 등 공공부문의 정규노동자 마당을 마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공공적인' 복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통일시켜 낼 방침이다. 연대한마당은 거북이 마라톤, 민중가요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중적인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심보선]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 항명죄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39명에게 지난 9월 28일 함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34명의 피고인에겐 1심과 똑같이 징역 3년이, 나머지 5명에 대해선 가족 중에 같은 죄목으로 복역한 이가 있다는 이유로 6개월이 감형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항명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던 관례가 깨진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군법원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 앞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똑같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 자체를 거부한 '민간 피고인'들에겐 군복무가 면제되는 최소한의 형량(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군법원의 양형은 여전히 가혹하다. 더불어 이번 재판은 '실정법의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

전과자란 낙인을 감수하며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양심'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고 싶다. 언제까지 '실정법'만을 탓하며 해마다 수백명의 젊은이들을 '양심수'로 만들 것인가.

물론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는 이미 국제무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공식 인정해 왔다. 한국정부는 1998년, 2000년 잇따라 "사상·양심·종교의 합법적 표현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한다"는 요지의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E/CN.4/RES/2000/34)에 찬성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병역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오랫동안 '정치적 양심수의 인권'을 우선시 해 왔던 우리의 '인권관' 역시 다시 성찰해 볼 때다. 종교적 소수자라고, 내놓고 싸우지 않았다고, 그들의 인권이 뒷전으로 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를 비롯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조차도 그들에겐 너무도 늦은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영 곳곳에서 '양심수'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1천5백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그들을 우리 곁으로 데려와야만 한다.

인권위원 인선, "투명하게 하라"

인권단체대표들, 청와대·대법원 앞 1인 시위

4일 민주당·한나라당·국회 앞 1인 시위에 이어, 5일 인권위원 밀실인선에 반대하는 인권단체대표자들의 1인 시위가 청와대와 대법원 앞에서 이어졌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 김광수·이혜숙 상임공동대표 등은 5일 "이름만 덜컥 발표하지 말고 '납득할 수 있는 인선'을 밝히며 지명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청와대와 대법원 앞에서 연이어 1인 시위를 했다.

인권단체연대회의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국가기구에 인권의 이름으로 경보를 울리기 위해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는 억압적 국가기구에 서슴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 "인권"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진 인물을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인 선정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을 지명할 때는 지명이유를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날 청와대 초소 앞에서 '인권위원 인선기준 공개'를 호소하며 1인 시위를 하던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권한대행이 202경비대에 의해 붙들려다가 30여분 후인 오전 11시 50분경

풀려나기도 했다.

연대회의 송원찬 집행위원장은 이미 발표된 5명 중 3명이 법조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 각 부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법조인 편중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집행위원장은 1인 시위를 한 이유에 대해 "지난 달 28일 김대중 대통령과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5일 면담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어제(4일) 아무도 우리를 만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연대회의는 6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청와대와 대법원 앞에서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이윤주 평등노동조합주노조지부장 등이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연이어 벌인다. [심보선]

아프가니스탄, 20여 년의 고통

70년대 말 이후 소련의 침공과 내전, 가뭄 그리고 가혹한 정권의 억압 등으로 고통 받아오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현재 미국의 공습 위협 속에 고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주 동안 1만 5천여명의 아프간 난민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 파키스탄으로 떠났으며, 수십만의 난민들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이동중이다. 이미 파키스탄에 약 2백만, 이란에 약 1백4십만,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등 인접국가에 약 3만 명의 아프간 난민들이 정착해 있고, 미국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난민은 늘고만 있다. 하지만 넘쳐나는 난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국가는 미국의 움직임에 발맞춰 국경을 봉쇄했고 국제적 구호단체마저 대부분 철수해 아프가니스탄 내부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최악의 영·유아사망률, 모자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다의 문맹률 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평균 수명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1인당 이용 가능한 식량이 가장 적은 나라 세 곳 가운데 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약 3분의 1은 국제기구의 원조로 연명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30년 간 지속된 가뭄과 폭설로 인한 농작물수확 감소가 가장 큰 이유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연이은 구호단체의 철수로 약 1백만의 아프가니스탄 인들이 아사위기에 처해 있"으며 "파키스탄 쪽에 식량이 있으나 전달할 방법이 없다"고 아프가니스탄이 봉착한 위기를 전하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 이란 등도 어렵기는 비슷해서 아프간 난민에 대한 추가적인 수용을 거부하고, 난민들을 아프간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국제법은 난민(Refugees)을 다른 나라로 탈출한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어서 아프가니스탄 국내의 난민들(Internally displaced people)은 국제법상 규정된 난민으로써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WFP, UN 등 국제단체들은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를 호소하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관관(UHCHR)의 루버(Rudd Lubbers) 씨는 지난 20일 "미국과 국제사회가 공격을 위한 연합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구호를 위한 연합을 결성하는 데에도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한 바는 시사하는 점이 크다. [박수영]

항명죄 - 실정법의 벽은 높았다 3년형, 위헌심판제청도 기각

항명죄 혐의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3년씩을 선고해 오던 군법원이 이례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 2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명죄(징총거부)로 1심에서 징역3년씩을 선고받은 여호와 의증인 34명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가족 가운데 아버지나 형이 이미 같은 죄목으로 복역한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선 6개월을 감형,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의 특수사항과 타종교와의 형평성 등을 언급하며 "내심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양심을 겉으로 드러내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37조2항을 근거로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한편 변호인단이 균형법상 항명죄와 관련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청구도 기각됐다. [이창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0월 9일(화)

제 195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보건의료단체 회원 9명 대공분실에 연행

제보자, 영장발부시기·수사대상 7명 실명 거론

보건의료운동 단체회원 9명이 경찰 보안수사대에 연행됐다.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 소속 회원 9명이 8일 오전 직장, 집 등에서 서울시경 보안수사대 흥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현재 연행자 가족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임시대책위가 꾸려졌다. 대책위는 연행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권정기, 김미혜, 김영숙, 김철웅, 라영찬, 박주홍, 이상아, 이종실, 지철

한편 같은 날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민의련)'은 지난 4일 "최근 경찰 보안수사대와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최근의 이완원 집권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민주세력을 구애의연한 좌익 이데올로기로 몰아세워 국민을 우롱하기로 합의한 바, 그 대상이 바로 민의련"이라는 편지를 '무언의 지지자이며 동조자'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 편지에는 "이미 공안기관에서 민의련의 조직관련 문건들을 침탈하여 공안문제연구소에서 이적표현물로 감정을 해놓은 상태이며, 귀 연합을 이적단체로 몰아세우기 위해 밤낮으로 각본을 짜고 있다"고 써여 있었으며, "구속 대상자를 10~12명으로 선정하고, 24시간 주거지·사무실 주변에서 불법적으로 잠복·미행을 하여, 일거수 일투족을 이적활동으로 짜 맞추고 있는 실정"이라고 고발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편지에 체포영장 발부일시를 '10월 8일~10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체포영장 발부 대상자 7명

의 이름을 정확히 적시한 것. 하지만 민의련은 "체포영장 발부 대상자의 이름을 확인해 본 결과 모두 진보의련

회원"이라며, "(익명의 제보자가) 민의련과 진보의련을 혼동한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민의련은 임시대책위와 별도로 보건의료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10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과 함께 '공안사건 조작 중단 및 연행자 전원 석방 요구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범용]

묻지마 인선기준, 상관하지마 인선과정

인권위원 11명 사실상 모두 정해져

6일 오전 청와대·대법원 앞에서 인권단체연대회의의 '국가인권위원 인선기준 공개'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는 시간, 김대중 대통령은 상임위원에 박경석 성공회대 객원교수를, 비상임위원에 이진강 변호사와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인권위원 명단을 공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8월 저녁 본지에서 대법원 공보관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명단 공개를 요청하고 나서야, 정상훈 사무관은 김오섭 변호사, 신동운 서울대 법학과 교수, 조미경 아주대 법학과 교수가 지명됐다고 뒤늦게 확인해 주었다. 물론 이들이 왜 인권위원으로 선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또한 대법원장이 이들 3명을 지명한 사실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8월 1일 인권위원장으로 김창국 변호사를 내정한 이후, 인권위원 11명에 대한 인선은 사실상 모두 끝났다. 9일 오후 5시 청와대에서 이들에 대한 임명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 아래 연대회의)는 지난 4일부터 3일간 국회, 청와대·대법원 등에서 연일 1인 시위를 벌였고, 5일에는 '인권위원의 이름만 덜컥 발표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한까지 청와대와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연대회의는 9일 오후 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인권위원의 무원칙·밀실인선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다. 집회에서는 지금까지 인권위원 인선에 관한 경과가 보고되고, 무원칙·밀실인선을 상징하는 퍼포먼스가 계획되어 있으며, 반전평화를 호소하는 긴급발언도 있을 예정이다. [범용]

<국가인권위원, 무원칙·밀실인선 규탄집회>

- 10월 9일 (화) 오후 2시 / 명동성당 들머리
- 국가인권위원 인선 경과보고 / 무원칙·밀실인선 규탄 및 향후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대응 / 반전평화 호소 / 무원칙·밀실인선 규탄 성명 / 퍼포먼스

◎ 신운동의 인권이야기

강제국가는 아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 못지 않게, 영화 <조폭 마누라>가 개봉 5일만에 100만을 동원하며 흥행기록을 깨뜨렸다는 사실은 나를 절망케 한다. 영화 <친구>, <신라의 달밤>, <조폭마누라>로 이어지는 '강제 영화' 성공의 대열은 한국이 '강제 국가'라는 나의 편견을 뒷받침하는 알리바이로 손색이 없는 탓이다. 아무리 코미디로 포장되고, 우정으로 미화되었다 해도 강제와 은근한 매력에 '넘어가는' 관객의 대열 앞에서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 여자들이 없는 자리에서, 호시탐탐 강제로 대한 찬사를 늘어놓는 남자들 사이에서, 나의 두려움은 공포로 바뀐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 둔감해져버렸지만, 다른 문화의 시선으로 보면 한국 사회의 폭력성은 쉽게 그 이빨이 드러난다. 얼마전 취재차 만났던 미얀마 이주 노동자는 도통 이해하기 힘든 한국인들의 습성으로 '화내는 습관'을 꼽았다. 미얀마에서는 다시 안 볼 사이가 아니면 그렇게 막말을 하지 않는다고, 더구나 손찌검을 하는 일은 강자들이 아니면 거의 없다고, 그는 전했다. 그가 목을 입에 달고 살게 된 것도, 술 담배를 배우게 된 것도 3년 동안 한국 사회에 '적응'한 결과다.

지난 9월말, 터키에서 열린 국제평화 세미나에 다녀왔다. WRI(War Resisters' International)라는 평화운동단체가 주최한 이 회의에서 해외 평화운동가들이 가장 궁금해한 사실은 "격렬한 반정부 운동이 일어났던 80년대 한국에서 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없었느냐?"는 것이었다. "설사 손가락을 잘라서 군 입대를 피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군사주의가 강했던 탓"이라고 답변했다. 병거벗은 국가폭력 앞에 왜 방어적 폭력이 불거졌는지, 병역의 의무가 얼마나 견고하게 굳어진 신성불가침 영역이 있었는지, 술한 알리바이들이 떠올랐지만, 나조차 온전히 설득하지 못했다. 끈질긴 자문이 머리 속을 땀돈다. '왜 하나같이 생각조차 못했을까?'. 아무래도 그 혐의는 폭력친화적인 한국 사회의 습속에 가 닿았다. 저항 세력마저 물들어 버리는.

강제국가를 지명하고, 무한정의를 외치는 미국은 어떤가? 터키에서 만난 미국의 할머니 평화운동가 도리는 "뉴욕에 20년을 사는 동안 단 한번도 받거리를 마음 놓고 다녀본 적이 없다"며 "마치 미국정부가 테러만을 폭력인 것처럼 비난하지만, 미국의 일상 그 자체가 폭력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폭력적인 일상이 아프가니스탄 공습에 대한 미국인의 90%를 넘는 지지의 배경이 되었다고 하면 과도한 추측일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혹은 아랍이든 폭력에 '지나치게' 민감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강제국가에서 살아야할지 모른다.

<한겨레21> 기사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1. 미·영 아프간 폭격, 김 대통령 '테러 응징 전폭지지' 일 총리 워싱턴 기자간담회 "미 공격 시 자위대 파견 검토" (9.25) / 노벨문학상 수상자 나딘 고티에·쿤터 그라스·다리오 포, 노벨평화상 수상자 남아공 데스몬드 투투 주교·오스카 아리아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 "보복공격은 폭력의 악순환일 뿐" (9.26) / 이란 최고지도자 "아프간을 공격하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것" (9.26) / 워싱턴·암스테르담 등 반전 시위 (9.30) / 미·영 합세 아프간 침공해 카불 등 6곳 용단 폭격 (10.8) / 김 대통령 "테러에 대한 응징에 전폭적 지지" 담화문 발표 (10.8)

2. 문지마 인선기준, 상관하지마 인선과정 여야 정당, 인권위원 추천 (9.24) / 국회, 인권위원 선출 (10.4) /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 선정" 비판 (10.4) / 청와대·대법원 앞 1인 시위 돌입 (10.4-6), 김 대통령 인권위원 지명 (10.6)

3. 단병호 위원장을 석방하라! 검찰, 단위원장 만기출소 앞두고 영장 신청 (9.28) / 단위원장 영장실질심사 거부, 서울지법 영장발부 (9.29) / 민주노총 "단위원장 구속은 노동운동 전면탄압" 대정부 강력투쟁 선언 (10.4) / 단위원장 구속관련 천주교 사제단·수녀회·평신도 명동성당 농성, "사제와 약속 짓밟은 DJ정부 회개해야" (10.8) /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 (단위원장에) "노사정 위 복귀중용, 반성문 요구" 밝혀 (10.8)

4. 양심적 병역거부, 실정법 벽은 높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선고, 아버지·형 등이 같은 죄목으로 복역한 5명을 제외하고 모두 3년 선고, "내심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양심을 걸로 드러내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37조2항을 근거로 제한할 수 있다" (9.28) /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인단이 군형법상 항명죄와 관련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 (9.28)

5. 노동자 삶이 위태롭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가운데 60% 이상이 심판 시한인 90일을 넘기고 있다" (9.24) / 주5일근무제 시행 합의 실패, "정부 단독으로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에서 월 1회 또는 격주로 주5일제 수업하겠다"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 (10.5) / 사법부 공무원도 '전국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 결성,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와 함께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행동하겠다" 대법원은 '현행법 위반이 인정하지 않겠다' (10.7)

6. 기막 국제방직의류가죽가공노조연맹 (ITGLW), "스리랑카·방글라데시 등에 진출한 한국의류업체들이 현지노동자를 노예처럼 착취" (9.27) / 복지부 "변비약, 여드름치료제, 복합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1천4백종에 대해 11월부터 보험 적용 단계적 폐지"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 발표 (10.5)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0월 10일(수)

제 195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국가인권위 생명력은 민주성 담보”

청와대에선 인권위원 임명식, 명동성당에는 인권단체 항의 집회

"인권은 없고 위원만 있는 인권위원회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11명이 임명식을 마친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원 선정 기준 미공개와 밀실 인선 과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오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광수 등) 소속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모여 '국가인권위원, 무원칙·밀실인선 규탄집회'를 열었다.

인권단체연대회의는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이후 한결같이 주장해 온 것은 인권위원들을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인 선정과정을 통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인권위원은 우리 사회 각 부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성과 다원성에 입각해 선정되어야 인권위원회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임명된 인권위원들이 밀실 속 추천자에 대한 눈치를 보기보다는 국민과 인권단체들의 뜻을 살피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계속적인 검증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권단체연대회의 송원찬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위원회를 만든다면서 여느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것처럼 임명되는 사람의 이름만 발표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인권을 위해' 만들어지는 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망각한 것이 아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편, 집회에 참가한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30여명은 또한 지난 8일부터 미국이 연일 아프간을 공습하고 있는데 대해 "결코 보복과 전쟁이 테러를 방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실망을 넘어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쟁을 통해 발생할 무고한 희생과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며 '전쟁 반대'는 언제나 우리 사회의 뜻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통령, 인권위원 11명 임명식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1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청와대 공보수석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인권위원회를 만들고자 했으나 늦어졌다"고 지적하고 "인권위원회의 감시 기능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인식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인권위원들에게 말했다. 이 자리에서 또

한 김창국 인권위원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권리를 찾아주는 기관으로서 사회적·제도적·전통적 약자를 깊이 살펴가는데 노력하고자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심태섭)

인권위원명단(위원장 포함 11명)

▲김창국(61, 인권위원장) 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장,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이하 상임위원

상임위원 3명 ▲박경서(62) 현 인권대사, 전 성공회대 객원교수 ▲유시춘(51) 현 통일문화학회 창립준비위원회 고문, 전 새천년민주당 당무위원 ▲유현(56) 전 수원지법 양평군 이천시법원 판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비상임위원 7명 ▲곽노현(47) 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전 인권공대위 상임공동집행위원장 ▲김덕현(43) 현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 현 여성변호사회 회장, 전 서울민사지법 판사 ▲김오섭(59) 현 변호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동운(49) 현 서울대 법학부 학부장, 현 서울대 법대 교수 ▲이진강(58) 현 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정강자(48) 현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전 인권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조미경(62) 현 아주대 법학부 교수, 현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편집자 주=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여성인원위원을 4명 이상 임명하도록 돼있다. 아래 명단에서 ♣표시돼 있는 위원이 여성위원

2001년 1월~6월까지의 인권소식이 묶인 <인권하루소식> 합본16호가 있습니다. 가격 : 1만원 (우송료 별도)

단위원장, '불법행위 반성' 종용당해 천주교계, 단병호 위원장 석방 요구 농성돌입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의 재수감이 결정되기 직전, 서울 지검 공안2부 윤웅걸 검사가 단 위원장에게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한데 대해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달 27일, 윤 검사는 만기 출소 예정일을 6일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단 위원장을 이례적으로 저녁 7시경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불러들여 8시30분경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반성문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

이는 지난 6일 단위원장의 변호인인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자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단 위원장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이다.

윤 검사는 27일 단위원장을 호출했을 당시, 반성문 외에도 △앞으로 폭력사태 우려가 있는 집회를 열지 않겠다 △파업을 자제하고 불법파업을 지도하지 않겠다 △노사정위에 복귀하겠다 등의 약속을 단 위원장에게 요구했다고 한다. 단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위 사항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윤 검사 측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민주노총은 "검찰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안하무인적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특히 손나구 교육선전실장은 "노동운동의 대표에게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노총과 노동운동 역사에 대한 모욕"이라고 분개했다. 손 실장은 또 "폭력사태를 우려해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집회의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파업을 자제하라는 것 역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어처구니없어 했다.

뒤늦게 밝혀진 이런 사실들은 검찰이 단 위원장을 추가 구속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손 실장은 "(단 위원장이) 뻔히 안 쓸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쓰라고 요구한 것은 검찰이 단 위원장을 구속하고 싶어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이어 손 실장은 "정권이 단 위원장을 구속한 이유는, 이후에 정권이 펼칠 노동정책이 노동계가 크게 저항할만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며, "정권은 단 위원장 석방 후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 더욱 거세질 상황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실장의 주장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나눈 신승남 검찰총장의 발언에서도 입증된다. 지난달 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8월 단 위원장 구속 당시 법무부가 "추가 구속은 없다"고 김승훈 신부에게 한 약속을 깬 것에 대해 항의하러 갔다. 이 자리에서 신 총장은 사제단 신성국 공동대표에게 "단 위원장을 석방해서 생기는 부담이 재수감해 서 얻는 부담보다 더 크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천주교계는 '약속을 짓밟은' 김대중 정권의 회개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부터 명동성당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후 민주노총은 천주교·기독교·불교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변 등과 함께 단 위원장 석방을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범용)

"보복전쟁·일본 군사대국화 반대!" 한·일 사회단체들 반전·평화 한 목소리

미국 테러 사태 이후 줄곧 반전 운동을 펼쳐온 한·일 두 나라 사회단체들이 '미국 보복 전쟁 반대와 일본 군사대국화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는 이후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해 한국 정부에게 자위대 군사 활동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심사된 것이다.

9일 오전 민중연대·참여연대·녹색연합 등 319개 한국 사회단체와 반차별국제운동일본위원회·아시아인권기금·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PARC) 등 28개 일본 사회단체들은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전쟁에 반대하고 아시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일본 사회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보복 전쟁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일 사회단체들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에 대해 "보복 전쟁은 미국 시민들을 테러로부터 보호할 수 없"으며 "오히려 미국은 21세기를 또다시 유혈 충돌과 군사적 대립으로 몰고 간다는 전세계적 분노와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은 또 일본에 대해 "아시아·태평양전쟁 이후 최초로 자위대를 실전에 파병시키려는 아프간 전쟁 지원 시도는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일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세계 평화를 위해 한국은 미국의 군사보복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 협력을 증진시켜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현장인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한 사회단체들은 9월 11일 이후 한·일 두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자국 정부에 대해 전쟁 지원에 반대해왔던 단체들이다.

이번 공동성명을 내는데 일본 측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PARC)는 미국 테러 사태 이후 일본에서 국회 앞 반전 집회(9월 17일), 주일 미국대사관 앞 반전 집회(9월 21일)를 개최했고, 지난달 27일에는 한국 553개 사회단체들이 채택한 '전쟁 및 전쟁 지원 반대' 성명을 일본어로 번역해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파시킨 단체로 전해졌다.

한·일 사회단체들은 이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등 다른 아시아 9개 나라 사회단체들과 오는 22일 '동시다발 반전평화 행동'을 추진하는 등 "전쟁에 반대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항의하는 행동을 아시아 전체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성명에 참여한 한국 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명동성당 앞 가톨릭회관에서 '반전평화 시국대선언'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하는 오는 15일에는 '일본 군사대국화 반대·침략 전쟁 책임 인정' 등을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0월 11일(목)
제 195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정리하고, 또다른 비극의 출발

대우차 해고자, 총체적 '삶의 질' 후퇴

자신도 모르게 삶을 덮쳐온 불청객 정리하고. 그 희생자인 해고자의 삶은 '삶이 아니다'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았다.

전국금속산업연맹(위원장 문성현)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성당에서 "정리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과 건강상태 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지난 2월 대우자동차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의 실상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원진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소장 김목호)와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대표 조옥화, 문병호)가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정리해고자 2백47명을 모집단으로 하고, 동종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K사의 현지 노동자 1백67명을 비교군으로 해, 설문조사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정리해고자 노동자의 삶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실업급여로 근근히 생활하는 해고노동자들의 경우, '전단지를 돌리고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면서 겪는 자괴감과 절망을 생생하게 토로한다. 한 노동자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일주일, 열흘 눈물 흘리면 다 잊어버리는데, 해고당한 날부터는 쉼 없이 눈물이 나오, 눈물이 나면 안 되는데, 내가 땀땀하면 괜찮는데, 억울하니까 눈물이 나오"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 해고노동자들은 "이제 곧 끝이 될 '실업급여에 대한 기간 연기'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점에 가장 큰 관심을 보임으로써,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 측은 "해고가 소득·가족관계·심리적 안녕·건강 등에서 부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미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선, 소득의 격감으로 인해 생활 곤란·주거형태의 변화를 겪은 사람이 20.7%로 나타났고, 실업급여 종료 후 생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도 36.4%에 달했다. 식료품비를 억제하고 있다는 노동자는 무려 80.5%나 됐다.

가족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줄어든 가정은 69.4%, 부부싸움이 잦아진 가정은 72.6%, 성생활이 줄어든 부부들은 65.4%로 나타났다. 또한 정리해고 이후 이혼한 가정이 1가정, 이혼을 논의하는 가정은 16가정, 별거상태에 들어간 사례는 5가정으로 조사됐다.

해고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분석도 나왔다. 건강상태가 악화됐다고 응답한 사람이 80.9%, 의

료기관 이용이 증가했다는 사람이 28.7%에 달했다. 특히 정신건강수준을 측정된 결과, 비교집단인 현직자들이 13점을 얻은 것에 비해 해고자들은 24.2점을 얻어 정신건강이 아주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가족관계가 나쁜 해고자는 좋은 해고자보다 최고 83배정도 더 정신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도 현직자들 가운데 65%가 '희망적'이라고 답한 반면, 해고자들은 61.5%가 '비관적'이라고 답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노동환경연구원·사회복지학자들은 "기존 구조조정 의 상처는 최근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해고·실업노동자들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해고·실업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총체적 사회안전망 확충과 치유책들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방안으로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 강화 △실업급여 기간·수준의 재조정 △실업부조 제도 신설 △실업자에 대한 의료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금속연맹 홈페이지(metal.nodong.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심태섭)

● **인권운동사랑방 10월 월례포럼** ●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말한다

- 10월 13일(토) 오후 3시/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405호(한우리교회)
- 초청발제 :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진행
- 1.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써보기(참석자 모두-조별)
- 2. (쟁점토론) : 병역거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나/직업군인에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되는가/양심의 판단기준은/기존 병역특례와 대체복무는 어떻게 다른가/ 대체복무제, '국가 동원권'의 강화 아닌가
- 참석자와 발표자간에 격의 없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담당 : 이창조)

“강정구 교수에 국보법 적용 말라”

사회단체 성명...정개모, 국보법 개정안 상정 추진

경실련 통일협회·민주노총·민변·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인권위는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강정구 교수 등 8·15 민족대축전 관련 구속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말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강 교수는 지난 8월 ‘민경대정신’ 발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상사비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실련 통일협회 등은 “강 교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민경대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며, “강 교수의 행동은 원천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는 어디까지나 납득 사회의 유연성과 관용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실정법 위반으로 간주된 범민련측 회합도 정부 방침에 맞게 연방제

강령을 수정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상 시비를 근거로 정상적인 시민자격을 박탈하려는 국가보안법 적용시도는 우리 민주사회의 수치일 뿐”이라며 “화해·협력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계속 만들어낼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12일 열릴 예정이던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은 연기됐다.

이에 앞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아래 정개모)’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회의를 갖고, 지난 4월 발의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치권에서도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가 불거질 것 인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실측은 “이번 정개모의 결정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당에서 국보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범용)

‘반전·평화’ 염원

765개 사회단체 시국선언

“미국의 보복전쟁 즉각 중단! 한국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지난 8일 미국이 아프간을 공습한 데 대한 시국선언이 연일 잇따르고 있다.

10일 오전 명동 가톨릭회관에서는 각계 사회단체 대표·활동가들이 모여 미국의 아프간 공습에 반대하며 평화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교육·노동·농민·문화·빈민·인권·시민·여성·종교·통일·평화·학술·환경단체 등 각계를 망라한 전국의 76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반전평화 시국선언문’에서 “인류는 지금이라도 테러와 전쟁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의 시대를 열기를 소망하고 있다”며 “미국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인류의 목소리가 새로운 전쟁에 대한 옹호가 아닌 평화에 대한 열망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언문은 또 “미국의 군사 보복을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전투병력이나 비전투병력이나, 병력이나 물자나를 막론하고 모든 형태의 전쟁 지원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자원활동가 신주희 씨는 자신의 두 아이와 함께 연단에 나와 “온 세계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화염과 전쟁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코 죽음이 일상화되는 전쟁을 지지하지 말아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행사를 마친 참석자들은 광고사거리까지 평화대행진을 진행하고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반전평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심태섭)

클릭! 인권정보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행이 아닌 ‘감옥’행으로 양심의 자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우리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 제18조 1항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수차례의 결의안을 통해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을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하고 △병역 거부 중에도 양심적인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이 없는 국가에서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차별을 두지 않고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판단할 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결의안에 찬성한 우리 정부 역시 시급히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해
 - :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위한 시론(조국)
 - : 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증인 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임종인)
 - : 인권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덧붙이는 얘기들(이대훈)
2.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 결의안(1984년부터 2000년까지)
3. 양심적인 병역거부와 관련된 외국의 경험
 - 1) 대만 대체역(사회역) 제도에 관한 경험 소개
 - 2) 콜롬비아 양심적 징집거부 운동과정에 대한 고찰(Ricard Pinzon)
4.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엠네스티 정책지침(국제엠네스티)
5.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기사 모음

◆ 자료문의 : 최은아 (angelica-choi@hanmail.net)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0월 12일(금)

제 195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민간건강보험’ 추진... 건강도 부익부 빈익빈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의 ‘민간건강보험(아래 민간보험) 도입 추진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어, 노동자·민중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는데 이어, 10일에는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연구팀’을 이달 안으로 꾸리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민간보험 도입은 지난 5월부터 꾸준히 검토돼 왔던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직접 타진해 보기 위해 실무적인 연구팀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구팀은 보험업계, 병원협회, 의사협회, 건강보험공단측 실무자들과 학계 연구자 등 10여 명을 섭외하는 중”이며 “민간보험의 실현에 관한 다양한 의제들을 다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후 꾸러질 연구팀은 빠르면 올해 안으로 민간보험 도입방안을 마련해, 사회·노동단체들과 공개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병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아래 민의련)’은 “민간보험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보험의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건강보험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평했다.

민의련 관계자는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보험급여율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민간보험은 ‘보충적 보험’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이라며, “보험급여율이 6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민간보험은 도입될 만한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민간보험을 도입하려는 의도는 국민건강을 위해 쓰는 돈이 부담되지 않게끔 하는 태도와 다름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이후 공공건강보험의 급여율은 현재의 60%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암보험’과 같은 유사의료보험은 가입자 1천2백만을 넘기고 있다. 만약 민간보험이 도입된다면 더 많은 보험회사들이 ‘건강보험시장’에 뛰어들어 마케팅을 비롯한 부대비용들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과할 것이다.

또한 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MRI나 CT 촬영 같은 고가의 의료행위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민간보험은 이러한 고가의 의료행위를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고가의 의료행위의 혜택은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갈 것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가의 의료행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적자와 민간보험의 존재를 이유로 고가의 의료행위에 대해서까지 보험급여를 확대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종규 편집홍보차장도 “질 좋고 값비싼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돈 있는 사람들은 민간보험을 들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라며, “정부는 민간보험의 도입계획을 철회하고 공공건강보험을 더욱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태섭)

만화사랑방

이동수



정통부, 자유게시판 아예 폐쇄

'욕설·비방' 문제삼아 사이버 항의 원천봉쇄

지난 9일 정보통신부(장관 양승택, 아래 정통부)는 자신의 홈페이지(www.mic.go.kr) 자유게시판을 돌연 폐쇄했다. 현재 그곳에는 "일부 네티즌들이 자유게시판의 익명성 등을 악용하여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해 ... 부득이 자유게시판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지되어 있다.

정통부 정보전산과 조규조 담당관은 "자유게시판의 글들은 욕설이나 비방, 명예훼손이 주류"라며, "이는 정부정책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유게시판 원래의 기능이 아니"라고 폐쇄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이버 민원실, 전자공청회, 장관과의 대화방 등의 의견수렴 창구가 있기 때문에 "(게시판 폐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정통부의 입

장을 대변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킹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기존 공무원들이 내부고발을 위해 자유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유게시판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명을 전제로 운영되는 사이버 민원실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지적한 것. 장실장은 덧붙여 "익명으로 누구나 와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이 가져온 민주주의적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참여연대 김보영 간사는 "지금까지 국민들은 공개적으로 토론하거나 논의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욕설·비방 등에 대해 "이러한 억압적인 문화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가장 이용율이

높은" 자유게시판을 폐쇄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 또한 김 간사는 "최근 정통부 장관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니 폐쇄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게시판은 민원을 제기하는 창구 이외에 대중들에게 회자되는 내용을 다른 이용자가 알 수 있는 공간이기도하다는 것이 김 간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사이버 민원실 등에 올려진 글은 당사자 이외에는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결국 정통부가 몇몇 욕설·비방 게시물들을 문제삼아 자유게시판을 폐쇄하는 바람에, 이제 정통부 홈페이지에서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벌어지는 합리적인 논박까지 볼 수 없게 됐다.

현재 정통부는 "초기에는 인터넷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 자유게시판은 그 효용을 다했다"고 과감히 말하고 있다. 자유게시판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길이라고 믿는 이들 앞에서, 이제 겨우 활성화되기 시작한 토론문화는 또 다시 움츠러 들고 있다. (범용)

국보법사건, 첫 불구속 수사 진보의견 연행자 8명, 영장 모두 기각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연)' 회원 8명이 지난 8일 서울서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가 10일 모두 석방됐다. <관련기사 본지 10월 9일자> 당시 연행자는 모두 9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최종 8명으로 확인됨

이들 중 이00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10일 오전 영장청구 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이들 모두에게는 불구속 수사방침이 내려진 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연행자 진원이 석방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구속수사가 원칙이었던 국가보안법 사건의 관행은 깨졌다. 한편, 진보의연은 95년부터 반자본 진보노선에 입각해 보건의료운동을 벌여온 단체다. (범용)

'10월 26~28일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조직위 발족

11일 오전 민주노총, 보건복지민중연대, 장애인노동권연대 등 20여개 사회단체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복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 한마당(아래 연대한마당) 조직위원회'(공동대표 박경석 등 4명, 아래 조직위)를 발족했다. 현재 조직위에는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평등노조, 전국빈민운동연합 등도 참여하고 있으며, 연대한마당은 오는 26~28일 서울 흑석동 소재 중앙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직위는 회견에서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개혁의 칼바람이 실업·산재·장애·이주노동자들을 함식적인 고용불안과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았다"며, "연대한마당을 통해 주변부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설 수 있는 노동자·민중 연대전선을 구축하고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대한마당 행사목표를 △ 고용불안 저지, 노동기본권쟁취 △ '생산적복지' 허구성 폭로 △ 사회적 권리 주체로서의 연대적 복지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한 연대한마당 세부행사에는 '신자유주의와 민중 복지', '의약품 공공성', '산재노동자와 사회보장' 등을 주제로 한 강연회가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해외단체 활동가 초청강연도 있다. 또한, '산재·장애·비정규 노동자' 등과 '주거권 쟁취·교육 개혁' 등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도록 중앙대 교정 곳곳에서 부문별 한마당 행사가 열리게 된다. 부문별 한마당은 운동회, 장애체험 등 다양한 교육·문화·체육행사를 포함한다.

한편, 연대한마당을 마치는 28일 오후 행사참가자들은 중앙대에서 여의도 광장까지 '연대와 행동을 위한 행진'을 하게 된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0월 13일(토)

제 195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테러박멸' 논리에 홀대받는 기본권

미국·전화·이메일 감청, 이민자 구금·추방 법안 추진

'9·11 테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난 지금 테러를 막고 미국 민주주의의 희생을 막는다는 미명 아래 반 민주주의적 법안이 속속 통과되고 있다.

지난 96년 오클라호마 테러 사건 이후 의회를 통과해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대테러법안의 확대 적용뿐만 아니라, 미국 입국자들의 인종별 분석 허가, 영장없이 이메일 감시와 전화 도청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들이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96년의 대테러법안은 미국 이민귀화국이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테러혐의가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 추방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 자신도 대통령 후보였을 때 이러한 증거불충분의 부당함을 비판했으나, 지난 9월 미 행정부는 의회에 아무런 증거 없이 테러 용의자를 구금,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권한도 요구했다.

'9·11 테러'에 대응한다는 명분에 맞장구친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FBI나 다른 수사당국이 단 한 명의 재판관

승인 하에 전화나 전자우편에 대한 전국적인 추적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게다가 미 상원은 DCS 100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사당국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들에게 가입자들이 교환한 이메일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DCS 1000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장착되면 이메일 제목, 웹 서핑 목록, 다운로드 등 사용자의 모든 인터넷 활동을 알려주는 소프트웨어이다.

미 국무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제 사회의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미 국군인보호법(American Servicemembers Protection Act)을 지난 10월 5일 승인했다. (→ 2면에 이어집니다)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지난 5월 "민간건강보험 도입" 방침을 밝혔던 보건복지부가 다섯 달이 지난 지금 다시 민간건강보험을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하겠다고 한다.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 논리는 간단하다. "현행 건강보험은 MRI 검사나 CT촬영 등 비급여 대상종목이 많아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민간보험이 긍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현행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더 이상 국민건강에 돈들이기 싫다'는 고백성사나 다름없다.

물론, 독일·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 민간보험이 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 나라에서는 환자들이 의료비 가운데 90%에 가까운 공공보험 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처럼 보험 급여율이 50%를 갓 넘기는 게 결코 아니다. 또한 유럽에서 운용되는 민간보험은 '성형수술', '우선 진료 보증'과 같이, 말 그대로 편의를 위한 '보충 역할'일 뿐, CT 촬영 등과 같은 일반진단 항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보건복지부는 함께 밝혀야 한다.

그런 기준 없이 민간보험 도입을 강행한다면 이는 반드시 공공보험의 체제 약화로 이어질 게다. 지금도 보험금 분담률이 높다고 야단법석인 자본가·사업주들이 민간보험 도입 후에는 그것을 핑계삼아 분담률 축소를 시도할 게 뻔하고, 재정적자를 호소하는 정부는 보험혜택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공 건강보험의 적용수준과 범위가 정체되거나 후퇴할 때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서민들이다. 민간보험료를 부담할 여건이 안 되는 서민들은 질 좋은 서비스와 폭넓은 보험혜택으로부터 다 시금 배제될 수밖에 없다.

건강권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현되어서는 안되는 본원적인 인간존엄성의 문제다. 이제 정부는, 건강보험이 공적부조의 한 형태로 사회경제적 분배를 구현하는 도구임을 상기하길 바란다. 보다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최소한의 공급'을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보장'을 궁극적 당위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2001년 국가 예산 중 보건복지부에 책정된 예산은 전체의 6.61%. 정책적 재고와 함께 윤리적 부끄러움을 느끼기 바란다.

2001년 1월~6월까지의
인권소식이 묶인
<인권하루소식>
합본16호가
있습니다.
가격 : 1만원 (우송료 별도)

공무원노조, 대세가 되다 지역공대위 속속결성, 법원공무원도 노조추진

정부가 노사정위 타령만 하면서 공무원노조의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만, 이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전국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아래 전법련)가 결성되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위원장 차봉천, 아래 전공련)의 활동을 지지하고, 공무원노조의 도입을 위해 전공련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인사구조를 갖고 있는 법원 공무원노동자들마저 '공무원노조' 결성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나서으로써 이제 공무원노조를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 12일에는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서울지역공동대책위(공동대표 강내희 등, 아래 서울공대위)'가 출범했고, 오는 11월 4일에는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전국공무원가족 한마당'이 열린다.

특히 전공련은 13~14일 대의원·간부 수련회에서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안을 확정짓고 향후 공무원노조 추진일정을 공유한다. 전공련은 이번 정기국회내에 공무원노조 도입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노조결성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러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로 전국공무원가족한마당을 상징하고 있다.

서울지법 공무원직장협의회 이종환 회장은 전법련 결성에 대해 "궁극적으로 공무원노조의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현재 전법련은

울산·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18개 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원 및 서울남부지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전법련이 결성되면 △법원 내부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사법부의 민주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3권이 모두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7일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공대위 출범 이후, 인천, 부산, 경남, 대구·경북, 그리고 경기 등 지역공대위의 결성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진보연대, 불교인권위 등 총 115개 단체가 서울공대위를 출범시켰다. 이날 출범선언문에서 이들은 "우리 스스로의 단결된 힘만이 우리의 소중한 권리와 요구를 지키고 찾을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강조했다.

서울공대위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앞장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서울시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교수노조(준), 자치단체노조, 비정규노동자 등과 함께 투쟁한다고 천명했다. 또 서울공대위는 전공련과 교수노조(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각급 정부기관의 결정과정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제도적 참여를 적극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범용]

● 인권운동사랑방 10월 월례포럼 ●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말한다

- 10월 13일(토) 오후 3시/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405호(한우리교회)
- 초청발제 :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1.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써보기(참석자 모두-조별)
- 2. (쟁점토론) : 병역거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나/ 직업군인에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되는가/ '양심'의 판단기준은/ 기존 병역특례와 대체복무는 어떻게 다른가/ 대체복무제, '국가 동원권'의 강화 아닌가
- 참석자와 발표자간에 격의 없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담당 : 이창조)

ILO 조사단 단위위원장 특별면회 예정

국제노동기구(ILO) 조사단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특별면회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는 한국의 노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카리 타피올라(Kari Tapiola) 사무차장, 결사의자유과 디파 리쉬케쉬(Deepa Rishikesh) 법무관 등 두 명의 조사단을 오는 15일 파견할 예정이며, 이 때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동탄압 진상조사를 벌이고 단 위원장을 면회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는 ILO 이사회를 앞두고 국제자유노련(ICFTU)이 단 위원장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한국을 제소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한국의 노동탄압 문제가 ILO에서 또 다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심보선]

→ <‘테러박멸’ 논리~>에서 계속

이 법안은 현재 설립 준비중인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미국인 또는 우방의 시민을 구금했을 때 무력을 사용하여 구금을 해지시키는 것과 NATO와 일부 미국의 주요우방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비준했을 경우 미국의 군사원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를 대표한다는 수정헌법 제4조는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주거 등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정헌법 제9조는 또한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부인되거나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자유수호를 위해 '테러를 박멸'한다며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박수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0월 16일(화)
제 195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정통부의 거짓말, 감춰진 검열

유해매체 전자적 표시, 인터넷 검열체계 가동

지난 12일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정통부) 장관의 고시로, 그 동안 '정통부가 인터넷상 검열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는 사회단체들의 의혹이 한층 명백해졌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통신망법)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정통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면, 전자적 표시는 픽스(PICS) 기술 표준에 따르며,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거짓말 하나>
"유해매체 표시, 차단 안 된다"

그런데 차단 프로그램과 결함되지 않는 한, '픽스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표시(아래 픽스 표시)'만으로는 청소년 유해매체를 차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통신망법 어디에도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 이를 근거로 정통부는 "유해매체를 표시하는 것은 검열과 무관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5호에는 '기존 PC방의 청소년용 컴퓨터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다. 또 청소년보호법 제4조와 제5조는 사회 및 국가, 공공단체가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

상 PC방, 도서관, 학교 등 공공장소의 모든 컴퓨터에는 차단 프로그램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될 것이다. 유해매체 표시와 차단 프로그램은 뿔레에 뿔 수 없는 관계라는 말이다.

<거짓말 둘>
"고시된 것만 유해 표시하면 된다"

정통부에서는 "청소년보호위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것에 대해서만 정보제공업자가 유해 표시를 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본인이 스스로 유해매체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의무는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윤리위)의 차단 프로그램은 유해 표시가 안 된 매체에 대해 차단 여부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며,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는 유해 표시가 안 된 매체에 접근 못하게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래야만 유해 표시가 안 된 유해매체물에 대해 접근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해매체물이 아니어도, 유해 표시를 하지 않으면 유해매체물처럼 차단당하게 된다는 뜻. 이에 "정보제공업자들은 모든 매체물에 유해매체물인지 아닌지를 표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거짓말 셋>
"윤리위 S/W, 안 써도 된다"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 관계자는 "PC방 등에 차단 프로그램을 의무화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윤리위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픽스 표시를 읽지 못하는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미 장관고시를 통해, 정통부는 윤리위에서 제공하는 세이프넷 홈페이지(www.safenet.ne.kr)에서 youth.rat 파일을 다운받으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장여경 실장은 "윤리위의 차단 프로그램은 국가기관이라는 공신력과 무료라는 잇점 때문에 빠르게 보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만약 이렇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은 윤리위의 차단 프로그램에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하는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팔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결국 모든 차단 프로그램이 픽스 표시를 검색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거짓말 넷>
"유해표시, 내용등급제와 다르다"

현재 윤리위는 통신망법 제41조를 근거로 내용선택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있다. 내용선택 소프트웨어는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를 5단계로 구분한 후,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기게 한다. 현재까지는 일단 내용등급 소프트웨어와 유해매체물 차단 프로그램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은 "내용등급 소프트웨어도 차단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픽스 기술표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차단 프로그램이 내용등급 소프트웨어와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인터넷 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단식을 포함한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졌다. [범용]

◎ 정육식의 인권이야기

생화학 테러는 남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 탄저균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등에서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백색가루가 발견되면서 전세계가 생화학 무기 테러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9.11 테러와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복 전쟁, 그리고 미국의 공격목표가 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보복테러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조직의 보복테러가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렇듯 '백색 공포'라고 일컬어지는 생화학무기 테러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일부언론과 정치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들먹이면서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이들이 얘기하는 북한위협론은 북한이 5천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을 비롯한 10여종의 생물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운반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기초한 확인되지 않은 추정치에 불과하다. 또한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한 테러조직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및 제조기술을 구매했다는 비확인 정보까지 서슴없이 내보내고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생화학무기 테러공포와 이에 따른 미국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반테러리즘 정책은 북미관계는 물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이다. 북한은 여전히 "테러지원국"이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등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주범"으로 묘사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대량살상무기 제조기술을 테러조직을 비롯한 반미성향의 국가들에게 이전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미국정부가 정치적 의도와 관계없이 그렇다고 믿는다면, 한반도 정세는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책을 촉구해야 할 언론 등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안전을 불안하게 할 소지가 크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을 강조한다면, 이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정부가 한층 대북 강경책을 강화시켜도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북한 생화학무기 위협론'이 갖는 또 한가지 문제는 혹시라도 남한에서 생화학테러가 발생할 경우, 북한의 소행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는 비이성적인 여론몰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백색 공포' 확산을 북한위협론으로 쉽게 연결시키는 안보산업주의가 결코 국민들이 안전을 위한 발상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대표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1. 단병호 위원장 석방 운동 확산
천주교 대책위 대표단, 민주당 한광옥 대표 면담 "단 위원장 석방 촉구"(10.9)/ 국제자유노련 빌조든 사무총장, "ILO는 단위원장 구속에 대해 개입해야" ILO에 항의서한 발송(10.9)/ 민주노총, 단 위원장 석방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10.13), 국제노동기구 카리 타피올라 사무차장, 결사의 자유 분과 디파 리시케시 법무관 "단 위원장 구속 진상 파악 위해" 방한(10.15)

2. 정부 "전쟁 지원", 사회단체 "전쟁 반대"
국방부, "수송·의료진 등 450명 지원 검토"(10.9)/ 한·일 두 나라 3백47개 사회단체 서울·도쿄 동시 반전성명 발표(10.9)/ 한국 7백65개 사회단체 반전성명(10.10)/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종교단체 반전기도회(10.11)/ 미국 국무부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방한 "한국 쪽 지원 필요하면 요청하겠다"(10.11)/ 미국 상·하원 이틀에 걸쳐 '반(反)테러법' 고속 통과 "영장 없이 이메일 열람, 전화 감청"(10.11~12)

3. 벽에 부딪힌 '이적단체' 구성 시도 - '진보의련' 사건
서울지법 한주환 판사, '진보의련'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10.10)/ 서울지법 단독14부 신광렬 판사, '만경대 방명록'으로 구속된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 보석신청 받아들여(10.11)

4. 전교조, 전국 규모 투쟁 전개
전교조 16개 시·도지부, '교원성과 상여금지, 7차 교육과정 철회, 사립학교법 제정, 교육재정 6%확보' 등 요구 2만5천여명 규모 조퇴투쟁(10.10)/ 교육인적자원부, 전교조 조퇴투쟁 관련 교원 현황파악 지침 시·도 교육청에 내려, 전교조 "노동기본권 침해" 주장(10.12)

5. 성매매를 근절하라
"지난해 군산 매춘업소 화재참사 여성들 경찰서장·파출소장 등에 성상납했다"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소송에서 새움터 김현선 대표 증언(10.12)/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하라", '성매매 근절 프로젝트 2001'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인 미국·일본·필리핀 등의 여성운동가 10여명 서울지법 앞(10.12)

6. 그 밖의 소식
대법원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 "집회·시위, 신고내용과 달라도 무조건 저지는 위법"(10.9)/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 "결혼한 여직원을 퇴직시킨 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조처는 남녀차별"(10.9)/ 민의련·사회진보연대 등, '민중복지·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 조직위' 발족(10.11)/ 의문사진상규명위, "91년 참원대 탄은주(당시 19살)씨 사망 사실 10년 만에 확인"(1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혜옥 선임연구원,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청·감청 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민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있다"(10.15)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재소자들은 권리구제 못 받는다?

대구교도소, 재소자 행정심판 서류 폐기...2개월 징벌까지

교도관들이 고의로 소송서류를 폐기했다는 주장을 한 재소자에게 징벌을 주고 변호사접견마저 불허돼 교도소측이 고의적으로 소송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행정심판 서류, "분실했다" 발뺌

지난 9월초 대구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재소자 김용호 씨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굵은 눈물방울을 떨쳤다. 김 씨는 대구교도소로 이감되기 전에 안양교도소에서 받은 징벌이 억울하며 제출한 행정심판서류를 교도소측에서 고의로 폐기했다고 말한다. 김 씨는 지난 5월 28일경 행정심판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집필허가여부를 묻는 '보고전'을 제출, 같은 달 30일 행정심판 서류를 작성해 당시 담당교도관인 김성수 주임에게 제출했다. 며칠후 행정심판서류 접수여부를 문자 김주임은 "관공실에 갖다줬다. 그런데 그쪽에서 분실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씨는 이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소장 및 보안과장 면담을 신청했으나 불허됐고, 인권단체에 보내는 서신마저 여러 차례 불허당했다. 김 씨는 이런 사실은 함께 방을 쓰는 재소자들이 분명히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에 보내는 서신도 불허

김 씨는 7~8월 사이 인권운동사랑방에 보낸 19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이 받은 편지는 총 6통으로 나머지 13통은 불허

된 것으로 보인다(이중 불허사실이 확인된 편지는 2통). 발송된 6통 중에서도 5통은 우체국소인이 편지작성일로부터 9~15일이 지난 날짜로 찍혀있어 교도소 측의 지연발송을 추측케 한다. 교도소측은 이런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성수 주임은 전화통화에서 "허가받지 않고 작성한 서류라서 본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신 담당자는 "인권운동사랑방에 보내는 편지를 불허한 적 없다.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느라 10여일 지연한 사실은 있다"고만 밝혔다.

항의단식에 2개월 징벌

김 씨는 교도소측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에 항의하기 위해 9월 14일부터 단식에 들어갔으나, 같은 달 16일부터 이를 이유로 금지 2월의 징벌조치를 받아 독방에 수용됐다. 10월 15일 이상희 변호사가 행정심판서류 폐기문제와 서신불허 및 서신 장가지연 발송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김 씨 접견을 하려했으나 징벌중이라 불허했다. 대구교도소 소장은 사실확인서에 도장까지 찍어주며 "고소하려면 하라"고 큰소리까지 쳤다. 결국 징벌이 끝나는 11월 중순까지 김 씨 스스로 억울함을 호소할 길은 막힌 셈이다.

교도소측의 이런 조치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김 씨는 9월초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와 접견할 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7일간 조사실에 수용되기도 했다. 김씨는 이 때 '교도소의

2001년 10월 17일(수)

제 195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이감협박과 징벌위협'에 대해 호소했다. 그러나 △접견규정시간인 10분을 초과해 16분 동안 접견 △공격자 이름 거명 △접견 전날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이유 등으로 7일간 조사실에 수용됐다가 반성문을 쓴 후에 풀려나왔다.

청원, 행정심판 접수는 교도소 맘

대구교도소의 기본권유린 상황은 악명높다. 지난해 이아무개 씨는 밀서를 통해 대구교도소의 청원 및 소송방해에 대해 청와대와 법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이정근 씨, 박종남 씨, 최경식 씨도 청원이나 소송진행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한다. 유태수 씨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간 후에야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다.

지난 해 본 기자에게 "청원은 아무나 손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큰소리치던 대구교도소 이상열 보안과장은 최근 "대구교도소에서 청원이나 소송을 방해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을 바꿨다. (김보영)

행정심판이란?

(법무부교정국 홈페이지 '수용자처우' 권리구제 www.moj.go.kr/corrections) 소장면담이나 청원결과에 대하여도 만족하지 못하는 수용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교도관의 불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교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권리침해의 내용이 형사사건에 해당될 때에는 수용자가 직접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수용자 권리보장의 일환으로 신입시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준수사항을 각 수용거실에 비치하거나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고 있다.

작지만 크게 울리는 국보법폐지 목소리

국폐모, 정기국회 폐회까지 국회 앞 1인 시위

"일반 사회단체들과 함께 시민들도 힘을 보탠다면 국가보안법이 더 빨리 폐지될 수 있겠죠." 정치권 안팎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요즘 한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아래 국폐모)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10월 4일부터 국회 정문 앞 1인시위에 들어갔다. 매일 정오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토·일을 빼곤 꼬박 서있다. 국폐모가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정치권의 움직임. 국폐모 반의견 간사는 말한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 총무가 9월에 '국보법이 사문화 됐

는데 굳이 개폐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한나라당은 미국 테러사건 이후에 '국보법 전면폐지를 외치는 세력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해 봐야 한다'는 섬뜩한 주장까지 하기도 했죠. 국보법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얘기가 거꾸로 간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1인 시위에 들어갔죠."

국폐모는 지난 7월 기존에 있던 사회민주주의연합과 사회개혁운동연합이 결합돼 만들어진 단체로 회원 대부분이 회사원, 자영업자, 학생들로 이뤄져 있다. 1인 시위가 시작된 지 13일째인 16일, 반 간사는 국회 앞 시위자로 나섰다. 시위를 마친 반 간사는

2001년 1월~6월까지의
인권소식이 묶인
<인권하루소식>
합본16호가
있습니다.
가격 : 1만원 (우송료 별도)

"그동안 서민노련 사건도 있었고, 황선씨 사건, 강정구 교수 사건 등 끊임 없이 국보법 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비록 지금은 작게나마 1인 시위가 전개되고 있지만 점차 확산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반 간사는 또 "국폐모 회원들은 국보법이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시민들"이라고 덧붙였다. 1인 시위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국폐모는 지금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소속 단체가 아니다. 이에 대해 국폐모는 "단체가 작고 연대기구에 들어가는 자신감이 적었다"고 말한다. 곧이어 그들은 "저희가 작기는 하지만 의사결정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데 집중력이 있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국폐모는 국가보안법이 대표적인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폐모는 국보법 폐지에 대한 시민사회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 이번 달 31일 기획 강좌를 열 계획이다.

기획강좌나 1인 시위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전화(02-744-7988)나 전자우편 antikukbo@antikukbo.net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폐모 홈페이지는 http://www.antikukbo.net [심태섭]

인터넷등급제 반대! 정통부장관 고시 반대!

- 때: 10월 18일(목) 오후 1시~3시
- 곳: 강남역 8번출구(시티극장 방면)
- 문의: 02-7744-551

단위원장 석방공대위 발족 인권·사회·환경 등 83개 단체 결함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구속에 항의, 석방을 촉구하는 운동이 사회단체에까지 확산됐다. 16일 오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민가협·전농·참여연대·민주노총 소속 대표·활동가들이 모여 '단병호 위원장 석방 촉구와 김대중 정권 부도덕성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단병호위원장석방공대위'를 발족했다.

이들은 발표한 성명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중재로 검찰에 자진 출두한 단 위원장을 중재자와의 약속을 깨면서까지 구속한 일은 단순한 노동사안이 아니며" "이는 정부의 도덕성 문제이자 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노동계 대표가 세 번씩이나 수감된 양심수 문제며, 나아가 일반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노동자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사회 각계 각층의 힘을 모아 단 위원장 조기 석방과 구속 노동자 석방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단위원장 석방공대위는 앞으로 민변을 중심으로 단위원장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사회 각계 인사 5백인 서명운동·종교인 시국기도회·청와대, 정당 항의 방문 활동 등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김 대통령에게 노벨상을 시상한 노벨평화재단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국제자유노련에도 단 위원장 구속에 대해 알리는 등 국제 연대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16일 대의원대회에서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등 노동운동탄압 분쇄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단위원장 구속하며 반성문을 종용하고 '파업 포기 종용'을 운운 한 것은 파업권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처사'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17일부터 전국 14개 지역 주요 거점에서 일제히 천막농성에 들어갈 것과 '단위원장 석방 전 조합원 서명운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0월 18일(목)
제 195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시켜 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지법 민사단독 33부(판사 심준보)는, 지난해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던 4명과 변호사 김승교·이상희 씨 등 6명이 국가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이 변호인·피의자 접견시 사진을 찍는 등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 행위"며 "국가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각 3백만~5백만원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속당한 사람이 변호인과 접견해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체포·구속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인 내용"이며 "구속당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 민혁당 사건 조사 당시, 담당변호사 지정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상희 변호사가 피의자 최진수 씨를 접견하지 못하게 막은 바 있으며, 김승교 변호사와 피의자 박정훈 씨가 접견할 때는 국정원 직원이 접견실에 불쑥 들어와 사진 촬영을 하기까지 했다.

김승교 변호사는 "신체가 구속된 사람을 위해서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

유롭게 피의자·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시켜준 데 이번 판결은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국정원의 위법적인 접견 관행이 바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재판부가 접견인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는 것도 위법하다고 밝힌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이 접견실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사진을 찍는 관행을 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희 변호사도 "이전 접견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백만~2백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보통이었는데 이번 위자료는 이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이는 재판부가 국정원에 대한 '징벌적' 효과를 염두에 둔 것 같다"고 평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의 불법 행위는 인정하면서 임동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직접적 책임이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심태섭]

<책읽기>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2 여성의 눈으로 노동운동사 재서술

'아이맥전자 종업원들은 71년 2월 15일 노조를 결성, 분회장으로 최언을 선출하였다. 회사측은 노조를 파피 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

았고, 급기야 분회장 최언, 부분회장 윤용섭을 해고조치하였다. 노조분회 전조합원은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나 노랑진경찰서에 의해 강제해산되었다. 회사측은 무기한 휴업을 단행하고 조합원 51명을 집단해고함으로써 많은 사회인들로부터 규탄을 받았다. 노사는 철종교섭하여 정·부 분회장 및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키는 등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노조 결성으로 인한 당시 분규는 조합원들의 강한 단결과 끈질긴 투쟁으로 노조측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금속노련, 1993)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2]는 위와 같이 소위 '성별 중립적'인 서술방식에 이의를 제기한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 2면에 이어집니다)

<파견법 철폐와 방송사 비정규직노조 투쟁승리 '하루주점'>

- 10월 20일(토) 오후 2시~자정/ 서강대 학생식당
- 주최: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관: 민주노총 서울본부, 파견철폐공대위
- 후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국언론노조, 서강대 총학생회
- 문화공연(예정): 연영석, 최도은, 박 준
- 문의: 민주노총 서울본부 오상훈 조직부장 (02-2269-6161)

○ 공판안내 ○

- 18일 오후 3시 서울지법 309호 - 2001 통일대추전 범민련 6명 (국보법)
- 18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52호 - 청송교도소 출소자 윤치고 씨 (무고죄)
- 23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 양지마을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문날인 거부자, '78+'에서 '1912+'로 5개단체 연대기구 결성, 지문날인 반대운동 벌이기로

지난해 '반짝' 하고 끝나는 듯하던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이 최근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이는 '지문날인 거부 홈페이지'(fprint.jinbo.net)에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 이 홈페이지는 지난해 5월 30일 지문날인 거부자 78명이 '지문날인 제도에 끝까지 불복종하겠다'며 결성한 '지문날인 거부 78+' 모임에 의해 제작됐다. 그 날은 구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상실되기 바로 전날. 당시 거부자들은 '비록 지금은 78명에 불과하지만 계속해서 참여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모임의 이름을 '78+'로 정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지난해 여름부터 사실상 중단됐고, 이에 지문날인 거부 홈페이지도 이름만 남겨둔 채 운영을 중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78+' 모임의 참가자였던 윤현식 씨가 지난 8월 우연히 이 홈페이지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애초 78명이었던 지문날인 거부자의 숫자가 어느덧 1천7백 명을 훨씬 넘어섰던 것. 이에 윤 씨는 홈페이지를 호스팅했던 진보넷에 문의했고, '지문날인 거부자가 이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 앞의 숫자가 자동적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때 윤 씨는 '(홈페이지) 관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원이 자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지문날인 제도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반면 기존 (지문날인 거부운동)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 운동을) 너무 방치했던 것 아니냐'며 자성했다고 한다. 지문날인 거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존재한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지난달에는 지문날인반대연대가 결성됐다. 여기에는 '지문날인 거부 1912+'(17일 현재) 외에 그 동안 지문날인 제도에 문제를 느껴왔던 △서울대 디지털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 △다음 카페 '존재미증명자들의 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 위한 행동연대 △서울영상집단이 참여했다.

현재 윤 씨는 개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조합방식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서울영상집단은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각각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앞으로 주민등록카드 미발급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경찰청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서'의 폐기 또는 반환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99년 9월에는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오는 27일 오후 4시 정동아트선제센터에서는 서울영상집단 이마리오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시사회가 열린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지문날인 거부자였던 이 감독이 경찰서에서 십지문을 찍을 수 밖에 없었던 자신의 경험을 직접 영상으로 옮긴 작품. 이 감독은 "사람들이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27일 시사회 후 2차 정기모임을 가진다. 이후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순회상영하며, 이를 계기로 지역별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을 만들고 이들을 네트워크로 묶을 계획이다. (범용)

인터넷등급제 반대! 정동부장관 고시 반대!

- 때: 10월 18일(목) 오후 1시-3시
- 곳: 강남역 8번출구(시티극장 방면)
- 문의: 02-7744-551

(→ 1면 <책임> 기사에서 계속됩니다)

서술한 앞의 진술에서는 여성노동자의 역할을 파악하기 힘들다. 양성 중 지배적인 성은 남성이기 때문에, "노동운동 활동가나 참여자의 성을 구분하지 않고 노동자, 조합원, 종업원 등으로 서술하면" 대부분 남자로 받아들여지기 때문. 그렇기에 아이택전자에서 최초 노조가 결성될 때 참여한 노동자 40명 중 38명이 여자라는 사실은 독자를 놀라게 할 수도 있다.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기획하고 이옥지·강연순 씨가 지은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2]는 무엇보다 기존의 남성 중심적 노동운동사에서 가리워진 여성노동자의 역할과 그들 역사의 의의를 집요하게 파헤친다. 지은이들은 서문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이 노동운동사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힌다. 그래서인지 이 책은 활동가나 참여자들의 성을 명확히 하고 특히 여성들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한국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일제시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책은 여성노동자운동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것 이상의 문제를 던진다. "담당한 노동문제와 그것을 야기시키는 사회 전반의 모순을 해결하는 과제는 남녀노동자들의 공동된 노동운동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까지 남성노동자들은 그들의 아내이자, 자매, 딸의 존재로서 "여성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제문제들을 자신들의 운동과 투쟁의 과제로 삼지 않았다"고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것.

결국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지금까지 노동운동의 역사가 새롭게 읽히게 된다. 그 동안 가리워진 여성노동자의 역할과 여성노동자운동의 역사가 분명히 보이면서, 어쩌면 남녀 모두 존재하지 않았던 기존의 노동운동사에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의 존재까지 살아숨쉬게 되기 때문이다. 시기시기마다 중요한 사업장별로 벌어졌던 파업과 투쟁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다 보면, 독자들은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노동운동 70년의 역사를 단숨에 거슬러 올라온다. 그러기에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2]는 여성의 눈으로 새롭게 서술된 노동운동사 그 자체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0월 19일(금)

제 195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묶인 채 조사 받는 건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피의자가 포승과 수갑으로 묶이 묶인 채 검사조사실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지난달 21일 서울경찰청 형사들에 의해 체포된 이종필 씨(23)는 "구속이 후 검사실에서 4차례 조사 받는 동안, 줄곧 팔과 상반신이 팽팽 묶인 채로 있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무죄로 추정될 권리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1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가

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올해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이며, 현재 성동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이 씨는 심판청구서에서 "검사실에서 조사 받는 동안 포승줄과 수갑 때문에 팔을 움직이는 것은 물론 어깨를 움직이는 것조차 매우 어려울 정도였으며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느꼈다"며 "이 때문에 신체의 자유는 물론, 심리적인 자기를 방어·변명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지난 달 28·29일과 10월 4·5일, 상반신을 묶인 채 서울지검

동부지청 308호 검사실에서 조사가 진행되자 "자유로운 상태로 진술하고 싶다"고 담당검사에게 요청했다. 이에 검사는 함께 있던 교도관에게 "도주 우려가 없는 것 같으니 풀어주라"고 했다. 그러나 교도관은 "규정에 따라 계구(피의자를 계호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해제할 수 없다"며 검사의 요구를 묵살했다.

교도관이 이 씨를 풀어주지 않은 것은 '계호근무준칙' 제332조 1호 및 2호 규정에 의거한 것. 훈령은 교도관이 피의자에 대해 △계구를 사용한 채 조사실 내에서 근접해 계호할 것과 △검사로부터 교도관의 '퇴실 또는 계구의 해제'를 요청 받았을 때 이를 거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씨의 청구대리인 김승교 변호사는 "법무부 훈령인 계호근무준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따랐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한 것은 아니"라며 "지금은 구속된 피의자도 경찰 조사단계나 법정에서 조차 수갑·포승으로 묶이지 않는데 유독 검사조사실에서만 계구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훈령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검사조사실을 제외한 검찰청 모든 곳에 대해 계구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한편, 구치감에서의 포승·수갑 사용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전 대표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미 석방됐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이후 법무부가 훈령을 개정해 구치감 내 계구사용을 금지했으므로 수갑사용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다"며 2000년 4월에 와서야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결정 당시, 하경철 재판관만이 "수갑사용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다수의 의견에 유일하게 반대했다. (심태섭)

만화사랑방

이동수



정통윤, 인터넷 검열준비 끝!

사회단체들, '내용등급제 저지' 단식농성 계획

18일 오후 1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아래 정통윤) 부근 강남역 8번 출구로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소속으로 격주 금요일마다 집회를 해왔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목요일이었던 이날은 지난 12일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에 항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긴급집회를 열었다.

그동안,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중단, 정통윤 폐지' 등 공동행동이 외치는 주장들은 정보통신 분야에서만 쓰이는 낯선 용어들과 정무축이 펼쳐지는 복잡한 대응논리에 왜곡돼, 일반 대중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영경 정책실장을 만나, 정부와 공동행동 사이에 오고가는 복잡한 논박을 따져 봤다.

◎ 이번 정통부 장관고시는 단지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매체에 전자적 표시를 하라는 것 뿐'인데, 공동행동이 그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 청소년 유해매체를 전자적으로 표시할 때, '픽스(PICS)'라는 기술표준만을 사용하게 했다. 현재 정통윤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는 바로 그 픽스를 인식해 접근을 차단한다.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가 전국 공공장소에 설치되면,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일반인까지 접근이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 큰 문제는 어떤 정보가 청소년 유해매체인지, 아닌지를 정통윤이 결정한다는 것.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정통윤의 인식과 기준은 심각하다. 올해 김인규 교사의 나체 예술작품 음란사비, 동성애자 커뮤니티와 자퇴생들 싸이트에 대한 불온사비에서 잘 드러나듯, 정통윤은 자신의 잣대를 온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검열이다.

◎ 정통윤은 내용등급서비스가 '검열'이 아닌 '자율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 (정통윤의 내용등급서비스는 유해의 범주를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등으로 구분하고 각 범주를 5등급으로 나누어, 이 기준에 따라 정보의 등급과 차단의 정도를 국민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등급서비스상의 기준에 따라 국민들이 등급과 차단정도를 스스로 정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현재 정통윤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등급기준을 정한 후 이를 따르라고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통윤이 인터넷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를 선정하고 차단하는 등 실제 검열행위를 하면서도, "내용등급서비스는 자율규제"라는 이야기만 하면서 "자신들은 검열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공동행동은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하지 말자는 입장인가?

= 현재 인터넷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는 '불법정보'와 '불온정보' 그리고 '청소년유해정보'가 있다. 정부는 이 개념들을 불분명하게 섞어 쓰면서, 인터넷이 마치 음란물로 넘쳐나는 양 불안감을 가중시키면서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권한을 확대시키고 있다. 공동행동 입장은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는 규제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불온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는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정통윤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터넷 공간이 더욱 무질서해지는 것 아닌가?

= 규제 주체가 정통윤이든 아니든 '인터넷 내용에 대한 위협성 여부'만을 공정하게 판단하면 된다. 정통윤 폐지 이후 민간자율적인 내용규제기관을 둘 수도 있다. 분명한 건, 현행법상 인터넷 유해매체물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정통윤이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한

다면 인터넷의 자유는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 다음주 월요일부터 명동성당에서 '60일 1인 릴레이 철야단식'을 시작한다. 우선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사회단체들에게 주위를 환기시켜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 여론의 주목을 끄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범용)

시민단체, 프라이버시 핸드북 발간 함께하는시민행동, 무료 공개·배포

지난 11일, 함께하는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은 개인정보 판매, 개인 정보 도용 등 점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여러 쟁점을 짚어주는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아래 소책자)을 발간했다.

소책자는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도용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스팸성 메일·전화·우편 △작업장 감시 등 다양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들을 모두 27가지 유형별로 분류해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수록했다.

소책자는 또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 프라이버시 개념 해설 △프라이버시보호 10계명 △프라이버시 용어 해설 등도 덧붙였다.

소책자에서 다룬 내용은 올해 초부터 시민행동 홈페이지 '고발 및 제보 게시판'에 올라온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400여건을 분석·정리한 것이다.

시민행동 정보정책팀 박준우 씨는 "최근 들어 인터넷뿐 아니라 작업장 감시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프라이버시가 아주 쉽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소책자가 자신도 모르게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아 괴로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했다.

소책자는 시민행동 정보정책팀 홈페이지(<http://www.privacy.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단행본으로 핸드북을 받아보고 싶은 사람은 시민행동에 문의하면 무료로 제공한다. 문의 전화 02-765-4708.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0월 20일(토)

제 195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파견허용업무 아니면 2년 지나도 고용보장 안 돼'

법률로 규정한 파견허용업무 이외에 불법파견을 한 경우는 파견기간 2년이 지나도 직접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중노위(위원장 임종률) 판정이 나왔다. 이는 노동부와 지노위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견근로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던 것을 부정하고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 비난이 일고 있다.

17일 중노위는 지난 3월 28일 인사이트코리아노조 지무영 위원장 등 조합원 4명이 SK주식회사(대표이사 유승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에서 "파견대상업무 이외 업무에 종사한 3명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직접고용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전 서울지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했던 결정을 취소했다. 지난 3월 22일 서울지노위는 "파견법상 파견기간 2년이 지나 이미 SK에 직접고용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복직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정은 중노위가 "인사이트노조 조합원들이 2년 이상 불법 파견근로를 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부당해고"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는데 논란의 여지가 크다. 중노위는 재심판정서에서 "현행 파견법 6조 3항(파견근로 2년 경과 후 직접고용 조항)은 같은 법률 5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까지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했다. 파견법 5조에는 파견대상업무를 '전문지식·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적 생산 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직 △항만운송직 △철도 운송직 △화물유통직 등에 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파견철폐공대위 이병희 집행위원은 "파견법 6조 3항이 '파견허용업무에만 한정한다'는 규정이 전

혀 없는데도 중노위는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노위 결정을 뒤집었다"며 "이로써 사용주들은 불법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집행위원은 또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도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힘든 판에, 아예 파견노동자들의 권리를 송두리째 짓밟은 꼴"이라며 (→ 2면에 계속)

〈논평〉 인터넷검열, 묵인할 수 없다

12일 정통부장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방법' 고시(告示)를 끝으로 '유해매체표시제'와 '내용등급서비스'를 양날개고 한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무한공격' 준비가 갖춰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둔 정보통신윤리위에 의해 인터넷 표현물이 '불온'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낙인찍힐 경우 '인터넷 세상에서 격리될' 각오를 해야한다. 청소년보호법, 통신망법, 음비계법 등이 정통윤의 '불온', '유해' 낙인을 뒷받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자신의 정보 하나하나에 등급을 매기고, 항상 '유해함' 혹은 '유해하지 않음'을 전자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은 불문가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통윤의 기준에 맞춰 스스로 인터넷 표현물에 유해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접근을 아예 못할 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은 미국의 파상공격에 속대밭이 된 아프간의 악몽을 인터넷상에서 떠올리게 충분하다. 이에 인터넷검열을 반대하는 남녀 활동가들이 다음주부터 60일 동안 '24시간 노상철야단식'을 이어간다. 정통윤의 모든 검열행위를 반대하고, 나아가 정통윤 폐지를 위해 결사항전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회단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만 쓰이는 낯선 전문기술용어와 정부의 복잡한 대응논리에 명확한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통윤의 검열행위가 어제, 오늘 일이나"며 농장을 부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는 인터넷에서 차단되어야 한다"며 정통윤의 '무한공격'을 묵인하는 분위기가 있다.

우리는 다시 자문해야 한다. 누가 정통윤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를 선정할 권한을 주었는가? 정통윤은 과연 청소년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는 수호신이 될 수 있는가? 정통윤이 들이대는 잣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수수방관할 경우 정통윤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인터넷의 바다에 흐르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지금이라도 정통윤이 인터넷의 질서를 평정할 것이라는 일말의 미련이라도 버리자. 아직도 늦지 않았다. '유해매체표시제'든 '내용등급서비스'든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모든 등급체계에 반기를 들자. 정통윤을 폐지하고 그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청소년 보호'라는 조급함 때문에 인터넷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능성을 포기하며 정통윤이 무소불위의 군주가 되는 작금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무기의 범람, 인권의 제약

미·러, 인권침해 사실 알면서도 군사원조

아프간 반군에게 무기가 흘러 들어 가고 있다. 무기의 무제한적 공급과 군사원조는 아프간 민중들에게 심각한 인권의 제약을 초래할 것이다.

17일 국제앰네스티는 외부국가들이 아프간 반군인 북부동맹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군사원조를 하는 것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무기공급이 집단학살, 고문 및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와 전쟁범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5일 휴먼라이츠 워치도 반군세력들에 대한 군사원조를 억제할 것을 촉구했다.

아프간반군의 주요 무기공급처는 이란과 러시아다. 최근에도 이란과 러시아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아프간 반군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9월 26일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이바노프는 96년 이래로 러시아는 아프간 반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러시아는 미화 4천5백만 달러 어치의 무기를 반군에게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미 의회도 북부동맹 및 적절한 반군 세력에게 미화 3억 달러 상당의 직접적 군사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이 이미 반군세력들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행정부는 미 정부가 반군에게 은밀히 재정원조를 하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에 대해 의견 표명을 거부한 바 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반군에게 흘러들어가는 돈이 러시아나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는데 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사원조 및 무기공급에서 반군세력의 끔찍한 인권침해 경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아프간 집권세력인 탈레반에 의한 인권침해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반군세력의 인권침해도 심각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반군세력들이 주로 탈레반을 지지한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이나 파슈툰 종족을 대상으로 즉결처형, 민간인 주거지 방화, 습격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해왔다고 밝힌다. 97년 5월 말 3천명의 탈레반 포로를 즉결처형하고, 98년 9월 20일 아프간 수도 카불의 야간시장에 로켓을 쏘아 수많은 민간인을 죽인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금과 같은 군사원조는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준 역사의 악순환을 끊기보다는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휴먼라이츠워치는 미

국, 러시아, 이란 등 아프간 반군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들은 반군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공모했다고 간주될 것이며, 따라서 그에 따른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손준혁 전 한총련 의장 4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창학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난 98년 한총련 6기 의장 손준혁(29)씨에 대해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말 구속·기소됐다. (심태섭)

단 위원장 결국 기소

서울지검 공안2부는 19일 형집행정지로 수감중 불법집회와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다시 구속수감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단 위원장은 지난 9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롯데호텔, 대한항공, 서울대병원 등의 파업과 민주노총 도심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에서 단 위원장 기소는 "상식이하의 노동탄압"이라고 규정하고, 20일 오후 2시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16개 도시에서 도심 집회를 열어 단위원장 기소를 규탄할 방침이다. (심보선)

● 행사안내 ●

■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결과 보고서발표 기자회견

· 때: 10월 22일(월) 오전 11시 / · 곳: 안국동 카페 느티나무
· 주최: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4)

■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60일 '노상철야단식 농성' 기자회견

· 때: 10월 22일 오전 11시 / · 곳: 명동성당 들머리
· 문의: 진보넷 (02-7744-551)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

· 때: 10월 23일(화) 오전 10시 / · 곳: 안국동 카페 느티나무
· 문의: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 (02-2636-0163)

<~SK(주) 손들어주기>에서 계속

"결국 중노위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사업주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구제신청을 청구한 인사이트노조 조합원 4명은 SK주식회사에서 저유원과 사무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지난 해 3월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11월 SK측에 의해 해고를 당해 지금까지 1년 여동안 정규직화 및 복직 투쟁을 해왔다.

한편, 인사이트노조, 한통계약지노조, 린나이노조, 파견철폐공대위 등은 19일 오전 공덕동 중노위 앞에 80명이 모여 규탄집회를 열고 "중노위 공익위원 전원 사퇴, 파견근로자 보호 없는 파견법 철폐"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인사이트노조는 이번 중노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0월 23일(화)

제 1960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류은숙

편집인: 심보선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현행 중·고등학교 교칙이 학생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금지조항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 대표육이은)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왔던 전국 2백44개 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학생인권을 논의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교칙이 제한하고 있는 학생 기본권의 성격과 제한 근거에 대해 검토했다"며 "교칙을 분석해보면 교칙이 학생의 인권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학생 인권의 어떤 내용을 보장·제약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작성·발표한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 보고서,는 전국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 규정 △선도 규정 등 3부분에 대한 교칙을 수집, 이를 분석한 결과다. 교칙은 학생들을 상대로 우편과 이메일,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수집했다. 교칙분석에는 방송대 강경선 교수(헌법), 이석태 변호사,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교육법학) 등이 분석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회칙의 경우, "대다수 학교가 학생회 선출에 있어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입후보 자격을 품행단정, 성적우수, 교사추천 등으로 규정해 학생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뒤 유엔어린이·청

소년권리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12조)'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다수 교칙이 학생회 자치활동을 보장한다는 문구만 두고 회칙개정, 예산운용 등 학생회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교사집단인 '지도위원회'에 부여한 점도 문제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용의복장과 관련해서는, "신발, 머리길이, 속옷 제한 기준이 너무 자

의적이고 모호해 규범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결여된 교칙이 많았다"며 "특히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속옷 규정은 지금이라도 모든 교칙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선도규정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학생·보호자에 대한 직접 진술권 보장과 재심청구권 보장 또한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은 "금지과 처벌을 강조한 현행 교칙들은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교칙이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태섭)

검열반대행동, 릴레이 철야단식 돌입

정보통신부 장관고시로 틀을 갖추고 11월 1일 시행을 앞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사회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22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각계 인사 및 남녀활동가들은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정보통신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60일간 1인 릴레이 철야단식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11시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희 소장,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이용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야단식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단식결의문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실체는 '등급을 다는 것'이 아니라 '차단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이고 <청소년에게 유해함> 혹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음>이라는 등급을 달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고발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견장에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안성배 정책기획팀장도 "통신질서확립법은 사이버상의 국가보안법"이라며, "문화예술 컨텐츠가 점점 더 디지털화하는 속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예술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얼마전 동성애자 사이트 엑스존 재심요청을 정보통신윤리위가 기각했다"고 밝히고, "왜 음란한지 설명도 하도 않는다"며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기준에 심각한 불신을 표했다.

한편 이날 첫 단식에 나선 이종희 소장은 인터넷 검열을 상징하는 칼을 목에 차고 내용등급제 시행에 대해 항의했으며,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은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시행되는 11월 1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범용)

◎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기술의 '억압'은 덜 억압적일까?

신자유주의적 권력의 속성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통제와 자발적인 참여로 매꾸고 있다고 한다면 현대 기술은 그 천생연분이다. 특히 감시 기술과 같은 현대의 통제 기술은 언제나 '정치적인 중립성'을 내세우면서 권력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과거의 사전 검열보다 더욱 무서운 검열 제도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은 공권력이 과거와 같은 사전 검열을 할 수 없는 새롭고도 강력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적인 방식의 검열을 통하여 그들의 통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한다. 이제 그들의 법에는 "건전한 홈페이지만 유통하라"는 노골적인 문구는 없으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홈페이지는 픽스(PICS) 등급을 달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에 호응하기 위하여 피씨방, 학교, 도서관에 픽스 등급을 인식하는 차단 소프트웨어들이 널리 보급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 말에 따르면, 이것은 '자율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게 될 일은 이렇다. 나의, 혹은 우리 단체의 홈페이지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판정되어 피씨방, 학교, 도서관에서 흑시라도 차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 자기 검열을 해야만 할 것이다. 홈페이지가 성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권력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늘 비교해야 한다. 사고의 틀이 제한되는 것이야말로 규율 권력이 힘을 발휘하는 지점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억압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바야흐로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기술적 수단에 의하여 정부의 의도가 '사실상' 관철되는, 새로운 검열 방식이 등장한 것이다.

로렌스 레식이라는 법학자는 '보이지 않는' 픽스가 과거의 검열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웹 인프라의 일부로 작동하면서 개인이용자, 프록시서버, 인터넷서비스제공자 그리고 국가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과 내용을 생산하는 방식, 궁극적으로는 넷의 구조 자체에 까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레식은 이런 환경이 과거 '보이는' 국가의 검열과 씨름해 왔던 활동가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 우리 상황이 바로 그런 것 같다.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사회단체간에 일어난 간이나 입씨름이 계속되어 왔지만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목전에 둔 지금 이 시점에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잘 모르고 있다. 정부의 '중립적이고 자율적 기술' 논리에 밀린 탓일 게다. 그러나 "법처럼, 소프트웨어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라는 레식의 말이 옳다. 언제나 문제는 심층적인 권력 관계인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15일 - 10월 22일)

1.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검열이 아니라고?

검열반대공동행동, "정통부장관고시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확정" 성명(10.15) / 정보통신활동가들 정통윤 부근 긴급집회, "인터넷 내용등급제 중단" (10.18) / 검열반대공동행동,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회견... 60일간 '1인 릴레이 철야노상단식' 돌입

2. 고이즈미 일 수상, 구령이 담 넘 듯 어물쩍 '사과'

고이즈미 방한, 한일정상회담...고이즈미 과거사 사과 진전없어, 사회단체 "미흡하다" 즉각 비판(10.15) / 청와대, 대일보복조치 해제 착수(10.16) / 국회대정부질문, "조선일보 등 친일 행적 교과서에 왜 서술 안 하나?" 난타(10.18) / 일 중의원,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 통과...자위대 파병 가능(10.18) / 중국 한일정상회담, 7대 현안 조속타결 합의(10.20)

3. 정부, 회개커녕 단위원장 기소

사제단 등, 단 위원장 석방공대위 발족(10.16) / 서울지검 공안2부, 단 위원장 기소(10.19) / 민주노총, 단 위원장 구속 규탄 18개 도심집회(10.20)

4. 의문사, 진상규명엔 시효가 없다

의문사위 출범 1주년... 최종길교수 의문사, 조직적 은폐 가능성 제기(10.18) / 의문사위, 80년대 '녹화사업' 대상 1천1백명...이윤성씨 의문사 조작 확인(10.21) / 의문사위, 최종길교수 동배틀린행 공작의혹(10.21)

5. 프락치버서, 한국사회에서 설 곳 없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신용정보회사 개인신용정보 유출 실태 심각(10.16) / 지문날인거부자 모임, 1917명으로 증가... 경찰청 보관 심지지문원지 반환운동 계획(10.22)

◎ 주요판결

피의자·변호인 집결방해, 국정원에 국가배상 판결(10.16) / 윤남근 판사, 성신여대 총장반대 교수에 2천만원 벌금 선고(10.17) / 중노위, "불법파견은 2년 지나도 고용의무 없다"(10.17) / 98년 한총련 순순핵 6기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4년·자격정지 4년(10.17)

◎ 통계

통계청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임시·일용직, 임금은 상용직의 절반, 근무사정은 비슷...월평균 167만원(상용직)·91만3천원(임시직)·68만8천원(일용직), 고용보험가입률 80.0%(상용직)·20.9%(임시직)·3.3%(일용직), 1년 이상 근속 임시직 44.0%, 3년 이상 근속 임시직 18.5%, 1년 이상 근속 일용직 18.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0월 24일(수)

제 196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행'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지난 17일 한 재소자가 '교도관이 헌법소원을 방해했다'며 담당교도관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최00 씨는 지난 1월 관복(상의)불착용으로 금지 2월의 징벌조치를 받고 있었다. 그의 구속사유는 감감미수 등의 혐의. 그러나 최 씨는 이를 부인하며 상대방 여성을 무고로 고소했고, 검찰에 의해 기각당하자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에 제출한 재항고마저 징벌 중이던 1월 8일 기각됐다.

이에 최 씨는 마지막 구제절차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담당교도관에게 집행보고전을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교도관은 "조사나 징벌 중에는 집행허가가 안 된다. 징벌 끝나면 제기하라"며 보고전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최 씨는 징벌이 끝난 3월 4일 집행신청을 다시 요구했으나, 이번에는 "사회에 나가 재심을 청구하라"며 집행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한다.

재심청구와 헌법소원을 놓고 고민하던 최 씨는 8월 9일에서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 씨의 헌법소원은 이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시효인 30일을 훨씬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최근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는 광주교도소 감일호 주임은 "담당자가 헌법소원을 권장했으나 최 씨 스스로 징벌 후에 제기하겠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집행을 불허하거나 어떤 설득을 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 속에서 사건의 진위는 검찰의 기소 후 법정에서 밝혀

질 것이다. 그러나 편파적인 검찰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사실 조사에 나설지 그리고 최 씨가 확보했다는 증거와 증인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집시법(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의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가 구성돼 활동에 나섰다. 23일 인권단체연대회의, 민주연대 등 86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발족한 것.

지난 수년간 집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사회단체들이 연대기구까지 구성하며 집단 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도전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 연석회의는 올 정기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을 관철하기 위해 독자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의 권리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각종 규제조항을 통해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대표적인 반인권법률로 지목돼 왔다. 그 가운데 △헌법 21조(집회에 대한 사전허가 금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엇보다 이런 논란은 '금지 중인 수용자는 집견·서신수발·전화통화·집필·작업·운동·신문열람 등이 금지된다'는 행형법 시행령 145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규정은 재소자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징벌 중인 재소자에게 권리구제의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의 변호사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재소자의 기본권인 집견·서신 등을 금지해 권리구제 제도의 접근을 가로막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평했다. [김보영]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있는 '집회 사전금지' 조항(5조) △집회의 내용과 형식에 관계없는 '외국대사관 및 국회 등의 1백미터 반경 내 집회 원천금지' 조항(11조)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조항(12조) △과도한 '신고'조항(6-8조) △위원장회를 양산하고 있는 '중복집회 금지' 조항(8조) 등이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연석회의는 "외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국내 현안인데도, 단지 집회에 정지가 외국공관 반경 1백미터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이와 같은 독소조항은 마땅히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관의 집회보호의무를 강화하고, 공권력의 부당한 집회방해 행위를 엄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족식을 가진 연석회의는 25일 서울시내 주요 대사관 앞에서 '집시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며, 11월 9일에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창조]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①

교칙, 학생 참여는 없다

“혹시 이런 인권사각 지역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나중에 남들의 인권이고 뭐고, 나만 살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요?”(오마이뉴스 독자의견)

22일 인권운동사랑방과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 대표 육이은)이 발표한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 보고서」에 대한 반응은 한마디로 교칙이 학생들의 존엄성과 인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본지 10월 23일자 참조>

교칙분석 자문위원으로 참가했던 이석태 변호사는 “교칙을 학생들의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의 교칙은 학생들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담국이 일반적으로 제시한 확실적인 기준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2백44개가 각기 다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칙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일선학교에서는 97년도 이전까지 교육부가 하달한 ‘학생선도규정 표준안’이 있었다. 그후 교칙 제정이 자율화되었지만 학내 여론수렴을 통한 개정없이 표준안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

이런 문제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해 일선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규율을 정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교칙 내용의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정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도 원칙적으로 일선학교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교칙 제·개정에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한 내용은 없다. 그나마 교직원과 학부모는 초·중등교

육법 제31조에 의거해 학교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학생은 여기서도 배제되어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의 현원일 참교육실천위원장은 “지금의 교칙은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을 뿐더러 학생들의 최소한의 의사표현도 제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교 운영 참여를 통해 민주적 훈련과 자기 권리를 자각할 수 있기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전국 2백44개 중·고교 교칙을 수집·분석한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를 4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글쓴이는 차례는 다음과 같다.

- ① 교칙: 학생 참여는 없다
- ② 학생회칙: 학생회는 깡테기
- ③ 용의복장 규정: 속옷 색깔도 맘대로 안돼
- ④ 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위해서는 교칙의 제·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원)

<인터뷰> 캠페인에 참여한 고등학생 2여고 김모 학생(16세)

◎ 교칙을 분석하게 된 이유는?

=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결정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건 지난해에 있었던 두발자유화 운동에서 경험한 것이기도 한데요,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구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근본적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교칙분석은 그런 학교의 비민주적 구조나 인권침해 요소를 찾아내는 일이었지요.

◎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 제일 어려운 것은 역시 교칙을 모으는 일이었는데, 800여 명 회원들한테 홍보스티커하고 전단을 발송했지만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문제는 아이들이 교칙을 구할 길이 없다는 것이예요. 저는 중학교 때 선생님하고 가까워서 규정집을 구했지만, 다른 아이들은 교칙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도 학교에 이렇게 많은 규정이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 교칙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 제가 본 학교의 선도규정 중에서 ‘일장 금지’라는 것이 있어요. 학교 담을 넘으면 징계를 한다는 것인데, 징계는 훈계 혹은 교내봉사, 심한 학교는 사회봉사까지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학교 담을 넘는 것이 그렇게 징계를 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때때로 학교가 학생을 감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불건전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 캠페인을 통해 문제라고 지적할 부분은?

= 두 가지요. 우선 현재 교칙은 학생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학생 이외의 시각에서 ‘학생은 이래야 돼!’ 하면서 만들어 놓은 규율 같아요. 교칙을 보면요, ‘학생은 단정하고 학생다워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아름답고, 귀엽고, 깜찍하게’라고 바꾸면 정말 안 되는 걸까요?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해요. 마치 증인처럼 문제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느끼고 직접 나서야 하는 것이죠. (고근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0월 25일(목)

제 196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국정원, 친북인사 접촉 비밀 출판인 구속

발행인 포함 월간 『자주민보』 관계자 3명 체포

‘친북인사와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잡아 가두는 국정원의 관행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23일 월간지 자주민보(아래 자주민보)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찬양고무 혐의로 체포하고, 연행자들에게 대한 가택·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체포된 사람은 자주민보 이창길 발행인과 박준영 기자, 그리고 2달 전 자주민보를 퇴사한 백운중 씨 등 3명이다. 이날 체포된 이들은 현재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원으로 모두 연행돼 조사 받고 있다.

23일 오후 연행자 집견을 다녀온 김승교 변호사는 “국정원이 자주민보에 연재되고 있는 김명철 씨에 대한 글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 제작·유통, 통신회합 혐의를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이창길씨가 ‘작년 12월쯤 은행직원으로부터 국정원에 계좌 출입금 내역을 건네줬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걸로 봐서 국정원이 거의 1년 동안 내사를 벌여온 것 같다”고 말했다. 위에 언급된 김명철씨는 제일교포 군사평론가로, 지난해 5월 도서출판 살림터에서 출판된 『김정일의 통일전략』 저자이자 현재는 일본 내 조미평화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이 사건은 여러모로 살펴봐 작년에 발생했던 ‘살림터 사건’과 많이 닮았다. 국정원은 작년 11월과 올해 2월에 걸쳐 도서출판 살림터 송영현 사장과 미국 시민권자인 뉴욕민족통일학교 송학삼 교장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체포했다. ‘친북 인사’ 김명철 씨와 접촉해 ‘이적표현물’인 을 출간했다는 혐의였

다. 그러나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명철 씨가 친북인사다”라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우선, 국정원은 “김 씨가 조총련 소속으로 북한·조총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씨는 지난 1989년부터 조총련과 관계를 끊고 독자적인 북한·미국간 군사평론 활동을 해왔다.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공산당선언』, 『브레히트 연구』,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참된 시작』, 『태백산맥』 등. 이 책들은 검찰과 법원이 국가보안법 7조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책들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 끝에 확보한 ‘판례 상 인정된 이적표현물목록’에는 이처럼 사회과학, 문화이론, 소설을 비롯, 대학가에 뿌려진 온갖 종류의 유인물, 선거자료집, 성명서까지 이적표현물로 ‘낙인’ 찍혀있다.

목록을 보면 “이 문서들을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한 검찰과 법원이 이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든다. 만약 입증이 안 된다면, 이 ‘이적표현물’ 목록은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목록’으로 기억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적표현물목록>에는 애매하기 짝이 없는 국가보안법 7조(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 자의적이고 과도한 적용으로 일관해온 검찰과 법원이 사상적 소수자를 ‘적’으로 규정해온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돼있다. 이와 관련된 인권운동사랑방 소장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 목록-도서, 유인물 (법원, 대검)
- 교화상 열등 부적당한 도서목록 (교도소 반입금지 이적표현물)
- 연도별 이적표현물 접수·분석 건수 (민주이념연구소)
-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아티클19)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법원이 "징역형을 마치고 추가로 받는 보호감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였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징역살이 13년을 마치고 보호감호 중이던 피감호자 2명이 제기한 청구 소송 결과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주심 홍지영 판사)는 보호감호 중이던 송○○씨와 김××가 제기한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 "피감호청구자가 재범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송 씨와 김 씨는 지난 87년, 10여 차례에 걸쳐 협박·폭행을 통해 재물을 갈취한 혐의로 체포됐다. 88년 대법원 선고 당시,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범행 동기나 수단 및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 13년 및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재심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등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사회보호법 상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보호감호를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엄격히 해석한 것.

재판부는 이들 범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감호청구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또는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93년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보호감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범의 위험성 유무의 판단은 원심 판결 선고 때(88년)가 아닌 재심판결 선고(01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결국 재판부는 두 사람이 징역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누우치고 재소자 정신교육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생 모범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장래에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 즉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것. 범행 당시의 동기나 방법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 안원영 사무차장은 "이번 소송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보호감호 제도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었지만, 재심 판결은 과거가 아니라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데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 대상자를 평가하여 가출소를 결정할 때, '현재의 정황'을 기준으로 피감호자들을 판단할 지가 주목된다.

한편, 소송을 대리했던 박승진 변호사는 "현재 보호감호 처분은 지극히 일방적인 교도관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감호 처분을 받을 때 "피감호청구인들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가운데, 교도관이 아닌 중립적 인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덧붙였다. 현재 송 씨와 김 씨는 법원 판결 후 출소한 상태며,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범용)

AI, "단위원장 석방 운동 펼치겠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과 관련해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석방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엠네스티 수기 나가라(Suki Nagara) 캠페인 담당관과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동아시아담당 조사연구담당관 등은 지난 23일 오전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단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 내 구속 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엠네스티 공식 서한을 김 대통령과 한국정부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23일 오후로 예정됐던 엠네스티와 단병호 위원장 사이의 접견은 서울구치소 측 일정 조정에 따라 25일로 연기됐다. 공식일정을 마친 엠네스티 관계자들은 27일 런던 본부로 떠날 예정이다. (신태섭)

'집회·시위 금지 지역을 파괴하라!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

◆ 집시법 전면 개정을 위한 사회단체 1차 공동행동 ◆

- 언제 : 10월 25일(목) 낮 12시-1시
- 누가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문의: 참여연대 홍석인 간사 02-723-4250)
- '1인 시위' 장소
 - ▶ 종로타워빌딩(국세청) - 온두라스대사관 입주 건물
 - ▶ 교보빌딩 - 네덜란드 대사관 외 5개 대사관 입주
 - ▶ SK빌딩 - 파라과이 대사관 입주
 - ▶ 광화문빌딩 - 브루나이 대사관 입주
 - ▶ 태평로빌딩(삼성본관) - 싱가포르 대사관 입주
 - ▶ 삼성생명보험빌딩 - 엘살바도르 대사관 입주
 - ▶ 코오롱빌딩 - 캐나다대사관 입주
 - ▶ 영국대사관 앞
 - ▶ 미국대사관 앞
 - ▶ 일본대사관 앞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0월 26일(금)

제 196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란에 관해 국방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5일 홈페이지(http://www.mnd.go.kr)에 올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는 글에서 "대체복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수용불가의 이유로 든 것은 △남북 분단의 특수한 안보환경 △병역거부 움직임의 확산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시비 등이다. 국방부는 '입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소수자의 인권보호 등을 내세워 '대체복무' 허용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인권문제와 국익보호 문제로 오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어 "병역거부자는 누구나 부담하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거부에 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는 '병사들의 양심과 사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하는 것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미 국제무대에서 한국정부가 보여온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최근 들어서만 98년, 2000년에 잇따라 "사상·양심·종교의 합법적 표현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한다"는 요지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E/CN.4/RES/2000/34)에 동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인사복지국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유엔인권위 결의안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외교통상부가 국방부의 의견을 물어왔을 때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한국 정부가 거기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엔 결의안은 각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며, 강제규정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지금과 같은 안보상황이 변하지 않고 징병제가 유지되는 이상 국방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조)

'윗분 눈에 거슬린다', 1인시위도 밀어내 사회단체, 외국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시위 전개

집시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공동행동의 포문이 열렸다. 12일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는 서울 시내 주요 대사관 및 대사관 입주 건물 앞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를 벌이고 "대사관 앞 집회금지 조항을 비롯한 집시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시위는 미국·영국·일본 등 3국의 대사관과 종로타워(온두라스 대사관 입주), 삼성생명보험빌딩(엘살바도르 대사관 입주) 등 7개 주요건물 앞에서 낮 12시부터 1시간씩 전개됐다.

'연석회의'는 25일 "외국 대사관과 국회 등 주요시설 반경 1백미터 이내에서 원천적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집회성격과 관계없이 외국 공관이 입주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제한함에 따라, 재벌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해 집회를 봉쇄할 목적으로 외국 공관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1인시위가 벌어지던 광화문빌딩(브루나이대사관 입주) 앞에서는 건물 경비원들이 시위를 벌이던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활동가를 강제로 밀어내는 일이 벌어졌다. 경비원들은 "윗분이 눈에 거슬린다고 했다"며 "이곳은 사유지다. 1인시위든 뭐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비원들과 활동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자 지나던 시민이 나서 "왜 1인시위마저 못하게 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1차 공동행동에 이어 다음주 화요일과 목요일엔 좀 더 강력한 2차, 3차 공동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심보선)

노동·생활권쟁취를 위한 연대한미당

- 일시 : 10월 26일(금) - 28일(일)
- 장소 : 중앙대학교 교내 곳곳
- 문의 : 집행위원회 (774-8774)

▶ 선언의 날 10/26

-공동토론회 : 불안정노동자의 권리선언 '노동유연화 반대, 노동권·생활권 쟁취'

▶ 어울림의 날 10/27

-노동자한마당 (산재·이주·실업·장애·비정규 노동자)
-분야별한마당(의약품 공공성·산재보험·교육개혁, 주거권쟁취)

▶ 행동의 날 10/28

-집회 「민중의 복지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② 학생회는 껌데기

- ①교칙; 학생 참여는 없다
- ②학생회칙; 학생회는 껌데기
- ③용의복장 규정;
속옷 색깔도 맘대로 안 돼
- ④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학교에서 학생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휴지줍기, 청소하기 매일 시키거든요. 그런데 학교 회칙을 바꾸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학생이 참관도 할 수 없어요. 학생은 휴지 주울 때만 학교의 주인인가요?”

어느 토론회에 참가한 한 고등학생이 한 얘기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자신과 관련 있는 일들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조차 주지 않는다.

학생대표는 소수학생의 특권?

지난해 11월 서울 서교 유00(18)군은 학생대표 선거에 부회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등록서류를 받으러 담당 선생님을 찾아갔다. 하지만 윤 군은 기

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서류조차 받지 못해 출마를 포기해야 했다. 학생회 회칙 중 ‘학생대표 출마조건’에 ‘학생회 간부는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회 회칙에는 ‘품행단정’, ‘성적우수’, ‘교사추천’, ‘유급 및 징계 시 출마제한’ 등의 규정이 있다.

윤 군은 이러한 규정에 대해 “공부를 잘하는 것과 지도력은 다른 문제인데, 성적우수 규정을 두는 것은 선생님들의 선입견”이라고 지적했다. 또 출마조건으로 인해 “학생들의 참여의 기회를 가로막을 수 있다”며 “출마조건이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학생회는 학교당국의 자치기구?

‘학생회’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모임’이다. 학생들이 주체이며,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학생들이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우리는 학생회라 할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회에

2001년 1월~6월까지의
인권소식이 묶인
<인권하루소식>
합본16호가
있습니다.

가격 : 1만원 (우송료 별도)

권한이 부여된 학교는 6곳에 불과하며, 147곳이 학교당국에 권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당국은 ‘학생지도위원회’라는 기구를 두고 △(총)대의원대회 안건 사전 승인, △학생회 회칙 제·개정, △예산, 결산, 감사, △학생회 임원인준 및 불신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규정상 ‘모든 학생회 활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지도의 방식인 ‘승인’ 또는 ‘제기’를 거쳐야 한다.

결국 학교의 권한은 학생회의 자치권을 고려 또는 존중하지 않는 과도함을 띠고 있고 이는 학생회에 대한 ‘장악’, ‘통제’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나에도 어린데 무슨 권리?

지난 8월 박형준(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2)군은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광주중고등학생연합’(이하 광주학생연합)의 공식 출범을 주도하고 ‘학생들의 학교운영위 참여’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인 이유로 학교로부터 ‘자퇴’ 또는 ‘전학’을 요구받았다.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간여할 수 없다’는 교칙을 박 군이 위배한 것.

광주학생연합 공동대표인 이00(사중학교 3년)양은 “어느 누구나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정치활동금지’나 ‘학교장의 행정사업에 간여 불가’라는 규정이 있는 한 학생은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 정보의 자유’ 등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김영원)



만
화
사
랑
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0월 27일(토)

제 196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교도소, 인권단체 재소자 면담 ‘거부·방해’ “권리행사 제한하지 않는다”에 “고발장 제출 제지했다”

교정시설이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재소자 접견을 가로막고 나서 무리를 짓고 있다.

한국의 인권개선상황과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4일 방한한 엠네스티 국제사무국 인권조사단은 24일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 임 모 씨, 이 모 씨 등을 접견하기 위해 안양교도소 측에 문서를 보내 접견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안양교도소측은 “이미 임 모 씨 등은 소내에서 권리행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들의 접견 요구를 수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씨 등은 국내 인권단체에 편지를 보내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소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호소를 해 온 바 있다.

안양교도소측이 접견을 거부하자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이를 강력히 비난했다.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안양교도소측이 면회를 거부한 것은 여전히 구 시대적이고 폐쇄적인 교도행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비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해명을 촉구했다.

한편 청송 제1교도소를 방문했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도 재소자들과의 접견권을 침해당했다. ‘소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4일 청송 제1교도소를 방문한 김보영, 유혜정 활동가는 당일 오후 3시 20분경 각각 재소자 이 모 씨와 유 모 씨를 접견하던 중 접견을 중단 당했다. 김, 유 활동가에 따르면 재소자 이 씨와 유 씨는 “지난 8월 24일 재소자 이 모 씨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일치된 주장을 했으며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번번히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 활동가들이 다시 이 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담당교도관들은 “소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접견을 중단시키고, 이에 항의하는 재소자를 데리고 소 내로 들어갔다.

이러한 청송 제1교도소측의 부당한 처사와 관련해 인권운동사랑방은 27일 법무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내는 한편 소송준비에 착수했다.

(→ 2면에 계속됩니다)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가 좋다

지난 3월 합헌결정이 내려진 사회보호법은 ‘제법의 위험성’이라는 명분으로 상습범 혹은 흉악범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보호감호 제도의 근거 법률이다. 하지만 최근 이 법에 따라 보호감호를 받던 이들이 청구한 재심을 법원이 받아들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했다.

현재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근거해 유죄가 확정된 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89년 위헌판결이 내려진 구 사회보호법의 필요적 보호감호 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했다.

지난 3월 현재는 보호감호 처분이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사회보호법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 법원은 보호감호 처분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내용을 본질로 하며 형사소송절차에 따른 점을 근거로, 보호감호 처분을 형사적 제재의 한 형태로 해석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해석으로 재심을 받아들인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다.

이번 재심판결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인성이 있을 때 제법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것과 제법의 위험성 유무는 과거의 시점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요지이다. 우리는 징역형을 사는 과정에서 제법의 위험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두 번째 논지에 주목한다.

징역형이 집행되기 이전과 이후에 따라 제법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면, 징역형이 집행되기 이전에 보호감호 처분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선고는 징역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제법의 위험성이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 제법의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번 재심판결 논지는 보호감호 제도 자체의 본원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도 상습범,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보호감호를 받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은 사회보호법이 유지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때만이 보호감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은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번 재심판결은 강력히 역설하고 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 인권조사단이 1천6백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하라고 강조한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이 지난 23일 '대체복무 불가' 발표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다.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26일 국방부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대체복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평화인권연대 등은 공개질의서에서 "기본적 권리로 보장돼야 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연구해야 마땅하다"며 "대체복무제는 사회성원의 지혜를 모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공개질의서는 또 "오래 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온 나라를 보더라도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안보에 영향을 주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특수한 안보환경"을 대체복무 도입 불가의 이유 중의 하나로 드는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 등 시대변화의 흐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라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여호와증인'뿐인 것은 맞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권리이지 특정집단의 권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평화인권연대 등은 98년, 2000년에 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대안 마련'이라는 결의안에 동의한 사실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국 정부는 자신들이 동의한 결의안을 이행할 의무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평화인권연대 등은 이어 △중국어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하고 있는 점 △독일의 경우 대체복무제도가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유엔인권

위에서 한국정부가 한 약속을 국방부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한국에서 조사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인권조사단은 26일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수"라며 "1천6백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6일 국제앰네스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1천 6백여 명의 석방 요구에 대해 "양심적 동기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현재 결정이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보선)

<자주민보> 발행인 등에 영장발부 국보법 '통신·회합죄' 적용

지난 23일 국정원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월간 <자주민보> 이창기 발행인, 박준영 기자, 백운종 전 <자주민보> 기자들에게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발행인 등은 작년 5월 <자주민보>를 창간,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등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내용이 실린 이적 표현물을 지난 9월까지 매달 제작·판매하고, '북한 공작원'인 재일교포 김명철(57) 씨 등 반국가단체 성원과 통신·연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은 이날 마포 신수동 <자주민보> 사무실에서 이 발행인 등 구속과 관련 각 단체 실무협의회를 열어 △매일 국정원 항의 방문 △연대성명 및 연속광고를 내기로 했다. 또 29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자주민보' 탄압저지 구속연론인 석방을 위한 공대위' 결성식 및 자주민보 탄압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심보선)

(=> 1면에서 계속)

또 재소자 유 씨 등이 주장하고 있는 '교도관의 재소자 폭행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에 사실확인을 요구하고,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 변호사와 함께 청송교도소를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심보선)

● 행사안내 ●

■ <심포지움>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복지를 위한 대안

- 때: 10월 27일 (토) 오후 3시~6시
- 곳: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소극장
- 주최: 서울여성노동조합 (02-365-6594)
- 주제발표: 비공식부문여성노동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결과 및 대안
- 토론: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의 법적 보호방안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 사례발표: 가내노동자 / 사내개인 하청노동자 / 장애여성노동자

■ 고 윤금이씨 9주기, "2001 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 때: 10월 27일 (토) 오후 3시 / · 곳: 고려대학교 제2학생회관, 대강당
- 문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02-744-1211)

■ 노동3권 보장과 근기법 적용 쟁취를 위한 경기보조원 행동의 날

1.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재해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 때: 10월 29일 (월) 오전 10시 30분~오후 1시
 - 곳: 국회 헌정기념관
2. 경기보조원 행동의 날
 - 때: 10월 29일 (월) 오후 2시 / · 곳: 노사정위원회 앞

■ '명예회복법' 개정촉구 대회

- 때: 10월 30일 (화) 오후 2시 / · 곳: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 문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02-766-4624)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0월 30일(화)

제 196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붕어빵 봉투에 기록된 내 정보'

공공·금융기관 개인정보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아

행정·금융기관 등에 수집된 개인정보가 시중에 마구 돌아다니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아래 반대연대)는 28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안산시 등 행정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유출돼 붕어빵 봉투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연대는 지난 21일 한 회사원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제보 받아 23일부터 26일까지 자체 조사활동을 벌이고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반대연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에서 맨 처음 발견된 '개인정보 붕어빵봉투'는 서울 거여동 봉투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붕어빵봉투는 경기도 시흥시 등에서 나온 공공기관 문서가 12종, 금융기관 문서 3종 등, 모두 15종의 개인정보 문서로 제작돼 '개당 10원'에 팔려나갔다. 반대연대가 수집한 공공기관 문서에는 '세대현특수주소래코드대장, 통합공과금체납수용가내역서, 조정 및 수납·미수집계표, 조사대상필정부(지가조사부)' 등이 있었고, 금융기관 문서로서는 '신용카드 발급대장, 채무추심상황진행내역서, 기한부예금만기도래명세'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개인별 주민등록표 대사표'에는 개인정보 항목이 87개나 돼, 유출될 경우 한 가족의 정보가 모두 유출되는 꼴이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채무추심상황진행내역'의 경우, 채무가 있는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연체일·미환금액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 유출될 경우 개인의 신용과 명예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서로 밝혀졌다.

이번에 많은 문서가 유출된 경기도 시흥시청 측은 이에 대해 "폐지처분위탁을 받은 '재향군인회 경기지회' 측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청은 인수증, 용해확인서 점검 등 필요한 절차는 모두 거쳤다"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반대연대는 이 같은 시청 측 태도에 대해 "재향군인회가 시흥시청 측에 문서가 용해 처리됐다고 보고한 날짜는 지난 6월이어서 붕어빵봉투를 발견한 10월 21일과는 무려 4개월 이상이 차이가 난다"며 "시

청은 책임 회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중간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이번 문서 중에는 보존시한이 3년 이상 지난 공문서도 상당수 있어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문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 등을 하루 빨리 보완해 개인정보문서 폐기에 대한 현장관리·사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반대연대는 개인정보 문서 유출에 대해 경찰 측에 고발하고, 개인정보유출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사례를 수집해 국가·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계획이다. (심태섭)

고등법원,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손배소송, '수감자 가족인계의무 소홀히 한 점'만 책임몰이

'구치소 측의 성명불상자에게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배척하고, '건강상태가 나쁜 수감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지 않아 수감자가 가족의 간호권을 박탈'한 것에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민사합의8부(재판장 채영수)는 지난 98년 성동구치소에서 사망한 박 모씨의 유가족들이 낸 손배소송 선고공판에서 "수감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감자를 가족들에게 인계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해, 가족들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했다"며 "국가는 유가족에게 4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박씨 유가족들이 1심 때부터 "구치소 직원들이 박씨에게 폭행을 가해 박씨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당시 함께 재소하던 양모씨 등을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측에 책임을 물어 폭력행위에 제동을 걸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은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과정이 적언치 않은 점 △수감생활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구치소 직원들이 박 씨를 구타했다는 동료재소자의 증언이 있는 점 △신원과 주소가 분명한 박 씨를 직원의 폭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무연고자로 조작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법원은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이다.

박 씨 유가족은 박 씨가 지난 97년 벌금 7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성동구치소에 노역 유치됐다가 57일 후 뇌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하자 98년에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 (심태섭·심보선)

◎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너무 먼 복지, 이제 우리 손으로

10월28일, 이 땅에서 최초로 열렸던 '민중의 복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이 2박3일간의 모든 행사를 마친 날이다. 개막식과 토론회가 중심이었던 26일 '산언의 날'을 치루고, 참여노동자들이 각자 한마당을 만들기도 하고, 문화제로 함께 어우러졌던 27일 '어울림의 날'을 거쳐, 28일 '행동의 날'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노동자, 방글라데시아, 네팔, 필리핀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 방진복을 입은 산재노동자, 런나이코리아서비스노조와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의 비정규직노동자, 실업노동자 그리고 제 운동단체들이 천지인이 라이브공연을 하는 대형트레일러 앞 뒤로 행렬을 만들어 여의도에서 연세대까지 행진을 했다.

이들의 요구를 들어보자.

버스 타는 데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장애인노동자, '우리도 이 세상을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 일할 때는 산업역군이요, 노동자 해 후에는 산업쓰레기 취급 받는 산재노동자, '한 순간의 재해가 영원한 장애일 수 없다. 원장직 복귀 보장하라' / 정원경찰만 봐도 피해가야 한다는 이주노동자, '그 누구도 스스로 원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았다. 불법체류자 사면하고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만으로 더 많은 노동에 더 적은 임금을 강요받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 실업은 결코 개인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외치는 실업노동자, '실업자도 노동자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라'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외면할 요구인가? 아니 어느 것 하나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절실하지 않은 요구가 있는가? 한마당에 참여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한 두 번 씩 눈물을 삼켰다. 토론회 때도, 문화제 때도, 행진할 때도. 요구들이 절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요구를 스스로 싸워서 쟁취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진실하고, 순수했기 때문이다. 주변노동자에 대한 막연한 동정과 시혜, 애매모호한 도덕적 당위 따위는 더 이상 자리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래서 '사각을 허물며, 너무 먼 복지, 이제 우리 손으로'라는 슬로건이 더욱 가슴에 와 닿았다. 흑자는 "초기 전노협 만들 때 느낌이었다", "1988년 1차 전국노동자대회의 감동과 똑 같았다", "나이가 먹더니 눈물이 많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도 다 나같은 심정이었더라" 등등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나 역시 동감이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무척 행복하다. 그리고 그 보다 열 배쯤은 그 누구에게갈 것도 없이 고마웠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운동의, 희망의 새로운 씨앗이 트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한다. 이 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의미있게 평가될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주간인권호름

(2001년 10월 22일 - 10월 29일)

1. 집회·시위는 기본권이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 '관공서 앞 200미터 이내 지역 집회·시위 못하게 집시법 강화' 건의(10.13) / 집시법개정연석회의 발족(10.23) / 집시법개정연석회의,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10.25)

2. '거인' 이스라엘의 '모마' 팔레스타인 '팔 비틀기'

이스라엘 총리, "팔레스타인이 암살범 신병인도 안하면 17일 점령한 곳에서 철군 안 한다"(10.22) / 유엔 안보리 성명, "이스라엘 군 철수 촉구"(10.25)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무력도발 방지역속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철군 시작(10.28)

3. 반테러 전쟁에 '인권은 거추장스러울 뿐'

미국 내 이슬람·인권단체, '반테러법안 인권침해 우려' 성명(10.22) / 정부·민주당, 테러방지법 제정하기로(10.25) / 미 의회 압도적 표차로 통보 없이 감시·수색, 테러혐의 외국인 최대 7일까지 임의로 구금 가능한 '반테러법' 통과(10.25) / 부시 미 대통령, 의회통과 '반테러법'에 서명, 27일부터 발효(10.26)

4. '미국의 아프간 공격은 또 다른 테러'

미국 버클리 시의회, 미국의 아프간 공격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10.19) / 중남미 가톨릭 주교 성명, "미국의 아프간 공격은 또 다른 테러"(10.23) / 워싱턴·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주요도시, '아프간에 대한 군사공격은 9·11 테러에 대한 해법 아니다'며 반전시위(10.27)

5. '과거 규명안하면 다시 되풀이 된다'

민간인학살특별법제정공대위, 특별법 제정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조사 촉구(10.22) /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 '녹화사업' 진상규명 요구(10.23) / 군부대 조사중 의문사한 이윤성 씨 유족, 국가상대 손해소송(10.24) / 유럽인권재판소, 코소보 전쟁당시 NATO의 옛 유고방송사 폭격 손해심리 시작(10.24) / 법원, '거창사건 유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10.26) /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최규하·전두환 등 17명을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30일 고소하겠다"(10.29)

6. 이제 북한 '인권'을 문제삼자?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북한의 인권보장 목표할 수 없다'며 전직 교위관료, 한반도 전문가 등 15명 이사로 참가한 가운데 활동시작(10.25)

◎ 통계

통계청 고용세부동향, 20대 실업률 6.1%, 실제 20대 취업자수는 398만5천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10.22) / ILO 보고서, 9·11 테러 여파로 전세계 관광노동자 10%인 880만명 실직 우려(10.25) / ILO 보고서, 한국청년실업률 95년 5.5%에서 99~2000년에 12%으로 증가(10.25) / 노동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20만 1천여 명 추산(10.24)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0월 31일(수)

제 196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류은숙

편집인 : 심보선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30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어떻게 시행하고 직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12일 인권위원 전원회의에서 시행령, 직원채용 특례규정안 등을 마련한 국가인권위는 절차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하는 한편, 법·시행령 제정시 거치게 돼 있는 공청회를 연 것이다.

공청회에서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시행령안은 '다수인 보호시설'로 관련법규에 규정된 아동복지·장애인 생활·정신질환자사회복지·정신요양·부랑인 보호·노인주거·의료 복지·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윤락녀 보호·외국인 보호·노년보호 시설 등을 열거했다. 다수인보호시설은 △생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설에서 하고 △입·퇴소가 자유로운 의사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사회·법률·경제적인 강제성이 있는 경우로 한 것. 이에 대해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신고시설에 필적할 만큼 많은 '미신고시설'을 '다수인보호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진선미 변호사는 "다수인 보호시설"을 열거하지 말고 예시규정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영석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은 사회적응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다수인 보호시설'의 범주에 들어가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급보호시설을 방문조사해 수용자를 면담조사할 때 구급보호시설 직원이 입회하는 경우도 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위촉하거나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입회직원의 수를

제한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술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 조항'을 시행령안에 더욱 구체화했다. 또 진정권 보장을 위해 △집필의 사전허가절차를 두지 않고, △수용자가 작성해 봉한 봉투에 다른 서류가 들어있을 지 모르는 이유로 봉투를 개봉할 수 없도록 하며, △진정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이를 압수하거나 폐기할 수 없고, △수용자가 전화 등을 사용하여 진정 의사표시를 할 경우 구급보호시

국가인권위 공청회 단상

'국가인권위, 법은 어떻게 시행하고 직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의 토론자 면면은 이렇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진선미 변호사,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이영석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장, 박주범 국방부 법무담당관, 김종학 경찰청 수사과장.

토론자로 참여한 사람들은 물론 모두 인권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기존 정부부처에서 참가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토론자 구성에 빈 구석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 인권단체 활동가는 "인권단체들이 토론에 안 나온 것 같다. 허전하고, 이상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름만 말하면 금방 알만한 어느 인사는 "왜 인권단체가 토론자에 한 명도 없는 거냐?"고 물었다.

공청회 때 한 토론자는 "민간인권단체 활동가를 국가인권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시비를 거는 것은 민간을 배제해 결국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어떻게 구제하고 보장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인권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모두 높은 인권감수성을 가진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국가인권위와 민간인권단체 사이의 관계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민간인권단체가 자신의 인권감수성에 기초해 인권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이를 국가인권위가 받아들일 때, 민간인권단체를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때 '인권'은 살아 숨 쉴 것이다.

공청회 후 기존 정부부처 관료들끼리 모여서 한 말을 소개한다. "(국가인권위)기획단 사람들이나 (국가인권위안보단) 시행령을 더 세게 해야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철학이 틀리다. 아무리 논리로 반박해도 소용없다. 무조건 끝까지 버티면 지네들이 별 수 있겠어?" 국가인권위가 민간인권단체들과 철학이 틀리지 않길 바란다. (심보선)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③ 용의복장, 속옷 색깔도 맘대로 안 돼

- ①교칙: 학생 참여는 없다
- ②학생회칙: 학생회는 껍데기
- ③용의복장 규정:
속옷 색깔도 맘대로 안 돼
- ④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아침 등교 길, 한 줄로 서있는 선도 부들 뒤로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학생들은 항상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 '머리가 너무 긴 건 아닌지, 양말, 신발은 괜찮은지, 명찰은 착용했는지..' 그러다 하나라도 복장 위반에 걸리게 되면 교문은 곧 지옥문이 된다.

머리가 길면 왜 안 돼요?

'△남학생의 경우 스포츠나 상고머리형 여학생의 경우 한갈래로 묶는 머리 △검정색 고무줄이나 고무밴드와 그에 크기와 굵기에 준하는 검정색 끈 △학생신분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늬와 장식이 없는 보편적인 검정색 단화'

단발교복에 똑같은 학생용 구두와 운동화를 신고 똑같은 가방을 들던 시대의 학생을 연상시키는 위의 규정은 2001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용의복장 규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의 내용이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어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교육청 게시판에서 글쓴이가 준 인 *고 학생은 "다음주 월요일에 규정에 맞지 않으면 머리를 자른다고 합니다. 정말로 머리가 길면 왜 안 되는 걸까요? 단지 눈살을 찌푸리는 몇 사람 때문에?"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규정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최소한의 설득력도 없기 때문이다.

'학생다움'으로 행해지는 폭력

대부분의 학교 용의복장 규정에는 '단정하지 못한', '흉한', '유행에 민감한' 등 객관적이지 못한 잣대들이 '학생신분에 맞는'이란 전제 하에 자리잡

고 있다. 그런데 학교마다 학생다움의 기준이 달라 '고무줄 규정'에 불과하다. 어떤 학교에서는 구두를 신는 것이 학생답고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답지 못하다. 결국 '학생다움'의 잣대는 학교에게 학생들의 용의복장에 대한 무제한적이고 강압적인 규제를 의미할 뿐이다.

교육청 게시판에 통해 '수업시간에 느닷없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머리를 자르고 나가시는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머리를 잘리는 느낌 아십니까?'라고 쓴 스고의 박00군의 고통스러운 호소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외에도 용의복장 규정에는 머리핀

의 길이와 굵기의 cm까지 지정하고 있을 정도로 세세하고 까다로운 규정들이 많다. 심지어 속옷의 착용유무를 비롯해 속옷의 색깔과 형태까지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나 '자기결정권' 같은 말을 꺼내는 것이 무색할 정도이다. 더 심각한 것은 아 이디가 hana988인 한 학생의 항의처럼 "용의 복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교복치마를 들춰 속치마까지 검사하고... 상의속까지 검사하는 학교의 행위"이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명백하고도 위법한 공격과 침해이다.

결국 학교는 '처벌의 압력'을 통해 규정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합리적인 근거와 민주적 절차를 수반하지 않은 용의복장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통제가 '감제적인 머리깎기'나 '속옷 검사' 등의 무리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김영원)

집시법 연석회의, 위장집회 사례고발

민주노총 등 8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30일 정오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위장집회 현황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4일 서울시내 주요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에 이어, 집시법 개정을 위한 사회단체들의 제2차 공동행동이었다.

기자회견에서 연석회의는 대학로, 종묘공원,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연석회의는 "이 사진은 이곳에 신고된 집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홍석인 간사는 "집회신고한 내용대로라면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유진종합개발이 집회를 하고 있어야 한다"며, "위장집회 신고 문제만큼은 꼭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활동가도 "집회의 자유가 위장집회로 가로막히고 있다"며, "집회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9월 10일 전국민중연대는 9월 15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집회신고를 했다가, 중복집회를 이유로 금지통보를 받았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은 대학로문화발전추진협의회 명의의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이 이미 올해 말까지 신고되어 있다. 이에 9월 12일 민중연대는 청량리역에서 명동까지 4개 경찰서에 관통하는 대규모 행진을 계획한 집회신고를 했고, 그제서야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전국민중연대에 집회신고를 다시 하면 대학로 집회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중복집회 금지제도가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자장은 "위장집회신고도 집회방해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복신고된 경우 일단 두 단체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2001년 11월

(제1966호-제1988호)